




2019
국정감사 백서

발간사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집권 반환점(19.11.9)을 한 달 앞두고 열려, 이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 무능, 위선, 조작, 그리고 불공정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일찍이 우리 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안보'를 살리는 "3생(生) 국감" 기초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와 '민생', 그리고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인 '안보'를 살피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이 정권의 끝없는 정책 실패에 따른 우리나라의 총체적 위기를 고발하는 한편, 고통 받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국정 운영의 대전환'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또한, 최근 '조국 사태'로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이 정권의 '반칙'과 '특권', '위선'의 가면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남김없이 보고드렸습니다. 동시에, 보수정당으로서 우리 당은 이 땅에 무너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세우는 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도 경주해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내놓는 '정책 국감'으로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원내 제 1 야당으로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잊지 않고자 힘썼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이 정권의 민낯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해 검찰 고발, 예산 삭감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는 과감히 메스를 들이댈 것이며,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는 추호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정권의 실정, 무능, 위선을 밝혀내고 수준 높은 정책 질의로 국정감사를 잘 마무리해 주신 당 소속 모든 의원님과 보좌진, 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은 각종 현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국민과 함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 용 기



목 차

I. 2019 국정감사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 국회운영위원회	9
› 법제사법위원회	23
› 정무위원회	29
› 기획재정위원회	37
› 교육위원회	5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3
› 외교통일위원회	71
› 국방위원회	81
› 행정안전위원회	9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5
› 보건복지위원회	135
› 환경노동위원회	141
› 국토교통위원회	147
› 여성가족위원회	157

목 차

II. 2019 국정감사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 국회운영위원회	165
> 법제사법위원회	179
> 정무위원회	189
> 기획재정위원회	201
> 교육위원회	21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23
> 외교통일위원회	231
> 국방위원회	243
> 행정안전위원회	25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6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6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79
> 보건복지위원회	293
> 환경노동위원회	303
> 국토교통위원회	311
> 여성가족위원회	327



I . 2019 국정감사

상임위별 평가 및 후속조치

- › 국회운영위원회
- › 법제사법위원회
- › 정무위원회
- › 기획재정위원회
- › 교육위원회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외교통일위원회
- › 국방위원회
- › 행정안전위원회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보건복지위원회
- › 환경노동위원회
- › 국토교통위원회
- ›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불법사보임 확인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당시 국회법 해설집과 상반된 보도참고자료(국회사무처 명의) 배포에 따른 언론 호도 및 국회사무처의 정치편향적 국회법 유권해석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 촉구
- ‘동일 회기’ 사보임 금지조항 논란 관련 2003년 정개특위 전체회의 회의록을 통해 입법취지는 회기 중 강제 사보임을 금지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

▶ 사개특위 활동 종료 후 법사위에서 심사되는 패트 법안의 본회의 부의관련

- 사개특위 법안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제외는 국회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국회전례에 따르면 사개특위 법안이 가결된 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됨을 확인
- 입법조사처가 자문한 9명의 헌법학자 중 7명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을 확인
-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은 법사위 고유법안이 아니므로 상임위 심사기간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간 90일이 보장되어야 함

▶ 조국 인사검증 실패 및 임명 관련 靑비서실장 사퇴 촉구

- 대통령의 국론분열에 대한 유감을 넘어 조국의 잘못된 검증과 임명에 대한 사과요구
- 조국의 셀프 졸속 검증 및 인사실패와 관련 靑비서실장 사퇴 촉구

▶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진의여부

- 2018년 7월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이 최종본이 아닌 초안임을 국방부가 행정소송 과정에서 밝힘
-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최종본에는 국회통제 등 강제군사행동 부분이 없음에도 청와대가 초안을 최종본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계엄관련 괴담을 유포한 것에 대한 책임자 및 사실관계 조사요구
- ☞ 노영민 비서실장,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답변 확인

▶ **편향된 정치의식 주입 및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직권조사 및 시정 요구**

- 편향된 정치의식을 강제로 주입하려는 인헌고 교사들의 불법성 비판
- 주권방송의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발달권(아동인권) 침해 지적
- 유시민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패널의 KBS 여기자 성희롱 발언에 대해 여성인권침해 지적
- 자국 내 북한탈북모자 아사 사건에 대한 정부·인권위의 무대책 비판
 - 거주지·빈소 방문 및 유감표명조차 없는 인권위원회와 文정부 비판

▶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비판**

- 10.15일 월드컵 남북예선전 무관중·무중계 및 손흥민 선수가 경기 중 공포를 느꼈다고 하는 등 위협적인 경기에 대한 전체 공개 요구
- 공공기관 및 민주당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암초’로 표시한 것 지적
- 靑안보실(동창리 폐쇄로 ICBM 발사 불가)과 합참(ICBM은 TEL에서 발사가능)의 ICBM 발사 관련 엿박자 질타 및 안보불안에 대한 대책 요구

▶ **버닝썬 윤총경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

- 윤총경 수사관련 경찰은 무죄, 검찰은 구속수사 진행 중에 구속수사하고 있던 검사를 법무부에서 인사조치한 것은 버닝썬 사건 축소은폐 행위임을 비판
 - 해경만 갈 수 있었던 말레이시아 무관자리에 경찰(육경) 출신의 윤총경 부인이 말레이시아 무관으로 파견된 이유에 대한 진실조사 촉구

헌정질서 파괴

1.국회법을 위반한 사개특위 불법사보임 문제 지적

☑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회법 제정 당시 법 취지 및 불법사보임에 대한 입법취지 확인

- 2001년 김홍신 의원의 강제사보임에 대해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자 관련 국회법을 개정(2003.1.22.)하여 강제사보임을 못하게 함
-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의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불법적 사보임 비판. 관련 국회법 조항이 만들어진 취지에 대해 당시 정개특위 회의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헌법 46조 및 국회법 48조를 위반한 ‘불법사보임’임을 명백히 밝힘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치적인 이유로 수시로 사·보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
- 입법차장 본인이 감수한 국회법 해설집에는 위원 개선의 제한 사유와 취지 및 임시회의 경우는 회기 중 사보임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음에도 언론 인터뷰에서는 해설집과 다르게 해석해 허위 주장을 한 점,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 국회사무처가 사보임 관련 자체 유권해석을 통해 허위보도자료 배포로 언론을 호도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점 비판
- 국회의장의 부당한 경호권 발동으로 빠루와 해머 등이 반입되고 불법난입한 불특정다수와 경위들로 인해 의원들이 늑골골절을 당하는 등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된 사태에 대해 국회의장의 직권남용 비판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국회법을 위반한 불법사보임에 대해 ‘국회의장 및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 대표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17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 제출

헌정질서 파괴

2.패스트트랙 심사기간 관련 편파적인 국회법 해석 시도 질타

☑ 주요 내용 및 성과

▶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관련 편파적인 국회법 해석 비판

-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기간 논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여당의 입맛에 맞는 국회법 해석을 취하기 위해 자문 용역을 지시한 점 질타
 - 지난 2011년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찰청법 등을 처리하고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선례를 지적
 - 검찰개혁 4개 법안은 사개특위 고유법안으로서, 국회의 선례에 따라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주어져야 함에도 굳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 것은 여당의 입맛에 맞는 방안을 취사선택하려는 시도였다고 비판

▶ 신속처리안건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 재확인

- 패스트트랙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적어도 330일 간 심사숙려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기간임을 확인
 - 패스트트랙 1호 안건인 사회적참사기본법이 330일을 채웠고, 2호 안건인 유치원3법도 330일의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점 지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에서 상임위 심사기간(180일) 이전에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하고,
 -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90일) 제외를 주장하는 등 무리한 국회법 해석을 적용하려는 시도 질타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사무처의 패스트트랙 체계자구심사기간 해석에 대한 문제점 지적

- 국감 이후 국회의장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 수용
- 9명의 헌법 학자 중 7명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이 필요하다고 봄

헌정질서 파괴

3. 불법 전자입법시스템 제출 관련

☑ 주요 내용 및 성과

▶ 전자법안발의의 불법성 지적

-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법률안은 ‘법률안 발의를 위해서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여 의사국에 제출함으로써 의장에게 제출한 것이 된다’라고 명시돼있음을 지적하며, 전자 발의를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수라는 점을 명확히 함
-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모두 다 전자문서로 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 또는 제정했음
 - 법 개정 없이 패스트트랙 사태 국면에서 갑자기 전자입법을 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한 입법행위로 불법임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전자입법으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채이배 의원 등 11인이 전자입법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리한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제출

4. 조국 임명 인사참사 관련, 靑비서실장 사과 및 사퇴 요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조국 인사검증 실패 및 임명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 제기

- 조국 임명 강행 관련,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집중 추궁을 통해 잘못된 인사임을 노영민 비서실장이 자백
- 조국이 민정수석직을 7.26일에 사퇴하고, 8.9일 법무장관으로 내정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10일내에 했다면 졸속 검증이고, 그 이전부터 했다면 명백한 셀프인사검증이라는 사실 확인
- 정경심이 11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이중 4개가 조국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과 김영란법에 배우자 비위에도 공직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점 지적
- 일본의 법무상은 언론의 부정선거의혹 제기 하루 만에 총리를 찾아가 사임한 예를 들어 조국이 국론분열을 획책하며 사임하지 않음을 비판
- 文대통령이 ‘국민분열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발표를 했지만, 조국을 지명하고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없다는 입장에 대해 비서실장의 입장과 사과 및 사퇴요구
- 조국이 인사검증 대해 △단순히 검증항목에 빠져 있어서 △사전질문서에 관련 질문이 없거나 후보자가 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아서 △공적자료에는 사생활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등의 이유를 들어 실패했다고 한다면 인사를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을 둘 이유가 없음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인사검증 확보

<p>윤한홍 17.02.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윤리성 검증을 위한 윤리성검증인사청문회 (비공개 원칙)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업무능력검증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 허위진술, 위협진술,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
<p>김도읍 19.03.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을 위증죄로 처벌
<p>정용기 19.04.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청문 기간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 보장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경고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 가능
<p>이종배 19.07.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공정한 인사검증을 방해할 경우 처벌 규정 마련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 가능
<p>송언석 19.09.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기간을 상정된 날부터 기산하고,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청문회 개최 72시간 전으로, 기관 자료제출 기한은 3일 이내로 규정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 가능

헌정질서 파괴

5. 청와대에서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초안임을 입증, 靑의 야당탄압 정치공작 확인

 **주요 내용 및 성과**

- ▶ 국방부가 행정소송에서 靑이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은 최종본이 아님을 밝힌 점 확인

 - 계엄령 문건 초안에는 국회통제(국회의원 체포, 국회무력화 등) 내용이 있었으나, 최종본에는 삭제되어 초안이 국방부장관에 보고되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힘
 - 청와대가 초안을 이용해 괴담을 유포하며 국민분열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대국민 사과할 것 요구
- ▶ 계엄문건 질의에 靑비서실장은 애매모호한 답변 대응으로 신빙성이 부족함을 확인

 - 靑발표 계엄문건이 최종본인지 진위여부 질의에 비서실장은 ‘최종문건이라 생각함’이라 답변하면서도, 국방부의 답변은 ‘확인 중에 있음’이라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임
 - 계엄령 문건이 NSC에 보고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비서실장은 ‘NSC의 핵심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일치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음’이라며 모호하게 답변함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靑 대변인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이 초안으로 밝혀짐에 따라 靑에서 공개한 문건이 NSC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문건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구

헌정질서 파괴

6. 특별감찰관 공석으로 인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방해 및 버닝썬 윤총경 의혹제기를 통해 정부·여당의 위선 지적

☑ 주요 내용 및 성과

▶ 文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특별감찰관 장기 공석으로 청와대 고위공직자 연루 버닝썬 윤총경 관련 수사 부진에 대한 질타

- 靑 윤총경 관련 의혹제기 내용으로는 △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산업은행 1,400억원 사기대출이 윤총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 △ 버닝썬 의혹 당사자인 윤총경 부인이 친인척 관리를 위한 말레이시아 주재관 특혜파견 의혹지적 △ 버닝썬 폭행사건 무마 의혹
- 윤총경 수사관련 경찰은 무죄, 검찰은 구속수사 진행 중에 구속수사하고 있던 검사를 법무부에서 인사조치한 것은 버닝썬 사건 축소은폐 행위임을 비판
- 해경만 갈 수 있었던 말레이시아 무관자리에 경찰(육경) 출신의 윤총경 부인이 말레이시아 무관으로 파견된 이유에 대한 진실조사 촉구
 - 대통령 가족 경호를 위해서 간첩인지에 대해 사실확인 요청
- 또한, 검찰의 중립성 확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당의 입장 재차 주장하며, 靑고위공직자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반 필요성 제기
- 한편 정부·여당의 신속한 특별감찰관 임명 촉구에 靑비서실장은 국회추천절차 완료시 임명 약속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특별감찰관 후보자 미추천한 민주당의 조속한 추천 요구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했으며, 민주당의 미추천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음을 비판

7.서울 인현고등학교 교사의 정치편향적 교육 논란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서울시 관악구 소재 인현고등학교의 교사의 구호제창 강요 및 특정 정치사상 선동에 대한 학생 인권 침해 행위
 - 학생들이 정치중립적·객관적 사실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편향적 주입식 교육은 잘못이며, 학생에게 사상의 자유를 허용해야 함에도 특정이념 주입은 심각한 학생인권침해임
 - 특정교사의 “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뉴스이며, 이것을 믿으면 개돼지다” 라는 발언 비판
 - 학생들에게 우월한 지위를 지닌 교사들로부터 편향적 정치교육을 받았으며 차별을 두려워해 나서지 못한 학생들이 ‘생기부 작성이 끝나서 용기를 냈다’라며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함
 - 인현고의 정치편향적 주입식 교육문제에 서울시교육청은 아직까지 나서지 않고 설문조사만 하고 있는 실태임. 국가인권위에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직권조사 요구
 - 전교조 소속 인현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좌편향적인 사상을 주입하고, 세뇌 및 강요를 통해 편향적 교육에 앞장서고 있음을 지적
 - 학생들의 양심을 짓밟고 생각의 차이를 조롱하는 정치교사들의 실태조사 및 학생 인권상향을 위해 노력할 것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전교조 및 정치편향 교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예정(교육위)
 -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 시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추진

공동체와 국민 분열

8.북한이탈주민 모자 아사 사건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 무대응 비판

☑ 주요 내용 및 성과

▶ ‘봉천동 탈북 모자’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폄하 비판

- ‘봉천동 탈북 모자’ 사건에 대한 성명을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발표한 인권위 질타
 - 국정감사 4일전 성명서 한 장만 달랑 발표한 것은 면피성임을 질타. 국가인권위원장이 북한인권은 외면한 채 여성 및 동성애 시안만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
- 찾아온 통일이라고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기본 인권 및 생존권조차 담보해 주지 못하는 정부가 문제임을 지적
- 아사한 탈북모자가 살고 있었던 임대아파트 현장 및 빈소도 가보지 않고 사과 및 유감표명 한 번 없었던 정부와 국가인권위원장의 무관심 비판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재발방지법 발의

- ‘봉천동 탈북 모자사건 재발방지법’ 발의 예정(김승희 의원, 보복위)

9. 유튜브 '주권 방송' 아동인권침해 논란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유튜브 '주권 방송' 동영상에서 미성년 아이들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고 정치선동에 이용한 것은 명백한 아동인권 침해임을 지적
 -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발달권 침해임을 지적
 - 주권방송은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임을 확인, 인권위원회는 이적단체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인권조사할 것 요구
 - 주권방송이 아동을 정치선동에 이용하고 특정정당 비하 발언에 동원한 것은 아동학대임을 지적, 아동 성장단계에 특정이념을 주입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비판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아동인권침해관련 국가인권위 차원의 직권조사 착수 후 대책요구
 - 국가인권위, 진정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임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조국 수사 관련 논란

- 조국일가 수사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지적
 - 압수수색 당시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점,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한 점, 자체 조사 중단 등 일반인이 누릴 수 없는 특혜임 지적
- 정부여당의 검찰 때리기, 수사외압 등 문제제기
 -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소위 '적폐수사'를 하는 검찰을 향해선 칭찬하고, '조국수사'를 하는 검찰을 향해선 개혁대상이라고 말하는 모순점 지적
- 법원, 각종 영장 기각으로 수사 방해 의혹
 - 서울중앙지법원 영장전담 판사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거기에 특정 판사를 임명, 해당 판사가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함
 - 영장기각 사유에 '건강상의 이유'라 했지만 해당 병원 등을 통해 피병임이 드러난 상황이었음
 - 더욱이 각종 압수수색 영장(휴대폰 등)과 계좌추적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는 의혹 제기

▶ 정부여당의 '검찰개혁'과 '조국 구하기'

- 정부여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 및 순수성 의심
 - 소위 '적폐수사' 때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던 대통령이 검찰이 조국 수사에 돌입하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며 검찰 압박
 - 법무부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한 패스트트랙 법안과도 모순되는 특수부 줄이기 등을 입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줄속으로 검찰개혁 단행
- '조국 특혜'를 위한 각종 절차 무시
 - 검찰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관련 지침 등을 국무회의 의결하며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등 규정된 절차 무시

헌정질서 파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실체 폭로 및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제시

☑ 주요 내용 및 성과

▶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실체 폭로

- 현재 추진중인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을 위한 '검찰개혁'
 -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검찰의 수사권을 권력의 뜻에 따라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음
 - 하지만 정부여당이 개혁안이라 부르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권력의 입김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함
 -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3개의 수사기관을 경쟁시키며 정권이 필요한 수사만 골라서 할 수 있는 구조
- 검찰의 특수부를 변형시킨 정권의 호위무사 '공수처'
 - 정부여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역설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공수처'를 신설하겠다고 함
 - 더욱이 공수처는 처장부터 검사 등 모든 구성원을 새로 선발, 검찰·경찰과 달리 조직 장악이 매우 용이함
 - 결국 공수처는 조국 사태와 같은 현 정권의 비리는 엄호하고 정치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기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농후함
-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라는 대원칙이 빠진 검경수사권 조정
 -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은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 전무
 - 또한 수사 현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무지에서 비롯된 안으로 실제 시행시 부작용 속출 우려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자유한국당 검찰개혁안 발표

- 당내 새개특위(위원장 권성동) 검찰개혁방안 발표(19.10.21)
 - 기존 검경수사권 조정 5법(19.3월) 既 발의 + 검찰 감찰권 독립 등(추가 발의 예정)

헌정질서 파괴

정부여당의 '조국 구하기'

☑ 주요 내용 및 성과

▶ 조국가족 특혜 수사 지적

- 엄격한 '피의사실 공표', 철두철미 '비공개소환', 자체 '조사중단'
 -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던 피의사실 공표, 공개소환, 심야조사 등에 대해 유독 조국의 가족만 철저히 지켜진 점을 지적하며 특혜 의혹 제기
 - 조국 집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직 장관이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한 것은 직권남용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탄핵 대상이란 점 지적

▶ 정부여당의 '조국 구하기'

- 대통령, 정부, 여당, 지지층이 총 동원된 검찰 압박
 -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보지 말고 수사하라던 대통령이 조국 수사에 돌입한 검찰을 비난하며 검찰개혁 주문한 점 지적
 - 정부여당이 당대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총 동원되어 대대적으로 검찰에 대해 수사외압을 행사함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밝힘
- 법무부의 '조국 특혜용' 졸속 검찰개혁
 - 조국 수사가 시작되자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집권여당의 연구소는 시행령등으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보고서 작성, 법무부는 각종 절차까지 무시하며 황급히 특수부 폐지 등 진행
 - 문재인정부가 집권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당장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적폐수사' 때는 애써 모른 채하다가 이제 와서 검찰개혁 운운하며 검찰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조국 적폐방지 4법 추진

- 조국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법 개정 추진
 - ▲형법 '사법방해죄' 신설 ▲공직자윤리법 '가족펀드 방지법' 신설 ▲고등교육법 '대학·대학원 입시 서류 원본 전자문서 형태 보관 의무' 추가 ▲인사청문회법 '공직 후보자 허위 진술 시 처벌' 등임

헌정질서 파괴

사법부 좌편향

☑ 주요 내용 및 성과

▶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편향성 심각

-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등 대부분 특정 성향 출신
 - 대법관 9명중 5명이 민변, 우리법, 인권법 출신(김명수 대법원장, 김상환, 김선수, 노정희, 박정화 대법관)
 - 헌재 재판관 9명중 5명이 민변, 우리법, 인권법 출신(유남석 소장,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 입법부 무시한 사법부, ‘사법행정자문회의’
 - 사법행정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며 대법원 규칙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설
 - 국회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입법이 여의치 않자 대법원 규칙으로 유사조직을 만들어 시행, 사법부 스스로 입법부 무시라는 비난을 자초함
 - 더욱이 ‘다양한’ 목소리가 무색하게 사법행정자문회의(대법원장 포함 10인) 인사 대부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 및 우리법, 인권법 출신으로 채용
- 법무부 ‘탈검찰화’한다며 ‘친민변화’
 - 민변이나 우리법 등 특정 성향 출신의 인사 기용, 법무실장, 인권국장(검찰개혁추진단장)이 대표적임
 -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위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한동수 변호사 임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그 외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제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특정 연구회 출신임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법원조직법(김도읍) 적극 처리

-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파견 및 임용 제한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 진실규명 요구

-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
 -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은 조국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권력형 차명투자를 통해 초대형 문정권 권력형 게이트에 해당함을 주장
 - ▶ 정치권과 금융권의 유착 의혹, 국정과제 맞춤형 투자문제 등
 - ▶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탈세 및 주가조작, 우회상장 수단 등으로 악용 의혹
 - 정부합동조사단 구성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 웅동학원 특혜 대출 의혹 및 채무집행 면탈 의혹
 -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진행된 5억원 특혜대출과 이후 채권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차명 재산 보유로 강제집행 면탈하려 한 의혹
- 조국 전 장관의 직무수행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해충돌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권익위원장으로 부터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얻어냄

※ 의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진실규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해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었음

▶ 문재인 정부이념의 편향적인 보훈정책 시정 촉구

- 손해원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관련 문제 제기
- 김원봉 서훈 추진, 이달의 독립운동가에서 김좌진장군 탈락 등 사회주의적 이념편향적 보훈정책의 문제
- 독립유공자 발굴시 북한과 논의하라는 보훈혁신위원회 회의록 공개
- 하재현 중사 공상 판정 논란 등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및 편향성

▶ **권한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 개정, 기업옥죄기 추진 중단 요구**

- 금융위가 5%률을 완화해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경영에 간섭하려는 것은 연금사회주의 시도임과 동시에 국민연금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월권임을 지적하고 이같은 시도가 계속될 경우 대응입법을 통해 저지할 것임을 경고

▶ **DLF·DLS 사태 관련 조속한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요구**

- 이 사태는 일종의 사기사건이자 불안전판매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조정 절차 마무리와 금융기관 임직원 징계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헌정질서 파괴

조국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은 정권핵심의 권력형 게이트

주요 내용 및 성과

조국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철저한 규명

- 조국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은 경제적 공동체를 기반으로 권력형 차명투자를 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초대형 문정권 권력형 게이트임을 규명
 - 금융기관이 공공와이파이 관련 기술이나 실적도 없으며 심지어 자본능력도 없는 회사에 1000억원 이상의 투자확약서를 발행했음이 확인되었는데 과연 이 회사 임원들이 여당원의 전직 보좌관이 아니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 진실 규명 필요성 지적
- 정치권과 금융권의 유착 의혹, 국정과제 맞춤형 투자 등 권력형 게이트 성격이 매우 강함에도 총리발 가짜뉴스를 비롯, 여권인사들은 검찰수사의 문제점만 부각시키는 등 국민을 호도하고 있음을 지적

웅동학원 특혜대출 의혹 및 채무면탈 의혹

-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에 웅동학원에 5억원이 대출되고, 이후 해당 채권이 비정상적으로 매각되는 등 대출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 의혹
- 캠코에서 조국 일가에 대해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100회 이상 했음에도 차명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 강제집행 면탈 의혹이 있으므로 캠코의 적극적인 채권 회수 노력 촉구

청탁금지법 위반 및 이해충돌 관련

- 배우자가 검찰 수사중인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직을 수행한 그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권익위 답변 도출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정부합동조사단 등을 구성하여 철저한 진상 조사 필요

- 관련 자료 부족과 검찰 수사중임을 이유로 금융당국이 손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합동조사단(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등)을 구성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

인사참사 방지를 위해 총리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의 실질적 확보위한 제도 개선 검토

헌정질서 파괴

**문재인정부의 평가르기식 이념편향적 보훈정책은
국민 분열정책임을 지적**

☑ 주요 내용 및 성과

▶ **손혜원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 이 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기소된 보훈처 국장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손혜원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면담한 다음날 담당과장에게 관련 절차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음을 지적
- 증인으로 나온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수사중임을 이유로 증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 초래. 본인이 담당하다면 관련 의혹을 정당히 밝히는 게 장관급 인사로서의 책무임을 강조했으나 끝까지 답변 거부

▶ **보훈행정의 이념편향성 집중 지적**

- 유공자 발굴시 북한과 논의하라는 보훈혁신위원회 회의록 내용 공개
- 보훈처의 편향성으로 인해 널리 알려진 김좌진 장군은 이달의 독립운동가 최종대상에서 제외되고 당초 온라인 투표대상에도 없었던 사회주의계열 인사가 포함되었음을 밝힘
- 하재현 중사의 전상/공상 논란은 전문성 부족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훈심사위원회가 책임져야 하는 사안임을 지적
 - 보훈처장으로부터 관련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는 답변 도출해냄
- 김원봉 서훈 추진처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하지 않고 이적·부역행위에 참여한 인사까지 독립운동가의 범주에 넣겠다는 보훈행정의 편향성은 국민을 평가르기하고 분열을 불러올 수 있음을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증언선서 거부 및 증언을 거부한 피우진 전 보훈처장에 대한 고발 추진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 향후 국정감사 무력화를 시도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증언거부·서류제출 거부 방지 법안 검토(증언·감정법 등)

▶ **보훈행정에 혼란을 초래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추진 상황 점검**

▶ **편향적인 보훈심사위원회 재구성 요구**

헌정질서 파괴

권력형 게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태양광 사업(아마데우스사업) 관련 권력형 게이트 의혹 집중 조명

- 태안군 태양광 사업은 지역주민의 반대의사가 명확하고 토지 가치 측면에서도 초지로 두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훨씬 높음
- 그럼에도 태양광 관련 실적이나 기술도 없고, 종업원 수도 3~4인에 불과하며 자본금도 거의 없는 회사가 시행사로 선정되고 금융기관이 막대한 금액의 대출확약서를 작성해 줌
- 사업 추진 관련해서도 농림부의 초지전용 유권해석 변경, 산업부의 중요산업시설 지정 등 관련 규제를 일사천리로 풀어주는 등 정치권력 개입의혹이 강하게 드는 상황
- 이 사건은 국조실 차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서고 해당 시공사 등과 관련한 여권 인사의 연루의혹도 제기되는 상황

▶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동생들이 차례대로 특정기업에 채용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음을 지적

- 특히 총리의 동생은 본인의 경력과 무관하게 해당기업의 임원으로 임명됨
- 대통령의 동생이 해당기업에 채용된 후 여당 부산선대위 관련자가 사장으로 임명된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해당기업 계열사로 거액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권력유착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및 필요시 검찰 고발도 검토

▶ 최고권력층 측근과 관련된 비리의혹 조사를 위해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 필요

경제위기

문재인 정부의 기업 옥죄기 시도 중단 요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소위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입법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결국 기업 옥죄기에 불과함을 지적
 - 5%를 규정에 예외를 두는 것은 금융자본시장의 건전성 강화라는 제도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임
 - 특히 이러한 시도는 정부가 스투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대폭 덜어주어 이들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
 - 예외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 요청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손자회사 공동출자 금지, 과도한 대기업 조사,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등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인한 사회주의 경제 논란 우려 지적
 - 가맹본부에 대한 원가공개 요구를 통해 가격인하를 강요하려는 개정안이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 중임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사업자들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
 - 시행령으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하기 이전에 해당 정책에 대한 과학적인 규제영향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장기간에 걸친 대기업에 대한 조사, 전속고발권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경영 관련 판단의 형사범화, 압수수색의 만성화로 기업기밀 유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임을 경고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국민연금의 스투어드십코드 확대를 방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추진(19.10.15, 김종석의원 대표발의)
- ▶ 위임범위를 넘어선 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저지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 검토

경제위기

DLS·DLF 사태 관련, 조속한 피해자 대책 수립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 필요

- DLF 사태는 당사자간 분쟁사건이라기보다는 사기사건이자 불완전판매에 해당
-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조정 결정 필요
- 또한 실제 피해자 수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개시 건수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신고 접수처 운영 등 금감원의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노력 요청
- 분쟁조정위 조정 절차 외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절차와 징계 등도 조속히 진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혼란을 신속히 해결해야함을 지적
- 이와 관련, 국감 기간 중 DLF 피해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절실함과 울분을 종합감사에서 전달하며 금융당국에 강력한 대책 마련 촉구
- DLF 관련 증거 인멸 시도 등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강도 높고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 완료 후 적절한 수준의 보상 규모 여부 등 점검

▶ 이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여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지침 마련 촉구

- 다만 금번 사태에 대한 대책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동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 필요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 주요 내용

정치 논리에 밀린 경제 원칙, 文 정부의 잘못된 정책 외교집에 일침

▶ 문재인 정부 3년차 경제 실정 비판 및 정책 고언

- 문 정권 출범 후, 소득주도성장 실험 등 반시장·반기업 정책 추진에 따른 경제 참상을 집중 부각
 - 경제성장률의 끝없는 추락, 11개월 연속 마이너스인 수출, 급감하는 국내투자, 초단기 알바와 비정규직 양산, 역대 최악의 소득양극화, 3개월 연속 0%인 소비자물가, 증폭되는 디플레이 우려 등
- 규제개혁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 선심성 돈 풀기에만 혈안이 된 정권에 악화되는 성장률과 재정건전성 지표를 제시하며 각성 촉구
- 경제 현실은 외면한 채 통계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남 탓만 하며 변명하는 집권세력에 엄중 경고
 - 국민에게 현 경제 상황을 솔직히 밝히고, 경제 실정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

▶ 조국 일가의 불법·비위 행위 집중 추궁

- 조국 일가의 세금포탈 의혹 확인을 위한 즉각적인 세무조사 촉구
 - 채무면탈 목적의 법인 위장 해산 의혹, 부인과 前 제수씨간 부동산 거래 의혹(증여세 포탈 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 야당의 세무조사요청서 접수와 시민단체 고발 등에도 검찰 수사 중이라며 조사를 미루고 있는 국세청에 대해 권력층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더 엄격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

▶ **정부·여당의 조직적 국감 방해 행위로 증인 채택 '0'**

- 소주성 등 文 정권 경제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장하성, 김수현, 김상조)과 前 경제수석(홍장표)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
- 조국 일가 의혹 확인을 위해 부인, 前 제수씨, 법인 공동설립자, 와이파이사업 입찰과정에 관여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등을 증인 신청했으나 여당의 일방적인 거부와 고성 등 진행 방해, 근거 없는 몰타기 등으로 실패

▶ **도를 넘은 야당 깎아내리기와 자료제출 거부**

-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집권여당의 하청을 받아 야당의 정책비전(민부론) 깎아 내리는데 앞장선 기재부에 엄중 경고
- 국가기밀이 아님에도 찾은 자료 제출 거부로 야당 의원의 국감진행 방해, 결국 당 소속 의원 10인의 연서로 자료제출요구 신청서까지 기재부에 송부

경제위기

경제 위기감 높아지는데 낙관론 펴는 청와대

☑ 주요 내용 및 성과

▶ 文 대통령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

- “소득주도성장,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이야기”(‘19.4.1. 시민사회단체간담회)
-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19.8.13. 국무회의)
-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19.9.16. 수석보좌관회의)
-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보다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소득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일자리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19.10.21.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는 경제, 그 실상은? 내우외환(內憂外患)

- 경기 하강기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일자리 급감 및 소득 감소 등의 부작용 초래
 -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재정을 통한 파트타임·노인 일자리만 급증(단기일자리 50~70대 비중 90%)하면서 일자리 구조는 ‘초단시간·노인’ 중심으로 질적 악화
 - 지난 2년 동안 주 36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며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일자리는 118만개나 감소
 - 올 2분기 중산층 비중은 58.3%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67.9%, ‘15년 2Q), 무직가구 비중은 25.9%로 확대(21%, ‘14년 2Q)
 - 임금주도성장을 언급한 ILO 보고서 결론 역시 개방경제에서 임금을 많이 올리면 고용이 어려워지므로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적용할 것을 권고

- 글로벌 3대 신용평가기관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이미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으며, 文 정부 들어 개선된 바 없음을 재확인
- 경제전문가들, 이념에 사로잡힌 현 정권의 경제실험이 내우(內憂)를 만들었고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실물경제 위기로 가고 있다고 진단
- IB 등 국내외 전문기관들도 올해 한국 성장률을 1% 중반까지 비관적으로 전망.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경제정책 방향의 대전환 및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자 문책 요구

- 달성 불가능한 성장률 전망치 제시는 경제주체들에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만 초래. 경제정책 운용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들께 솔직히 밝히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 기조로의 대전환과 함께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정책을 강행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결정자에 대한 문책 요구

경제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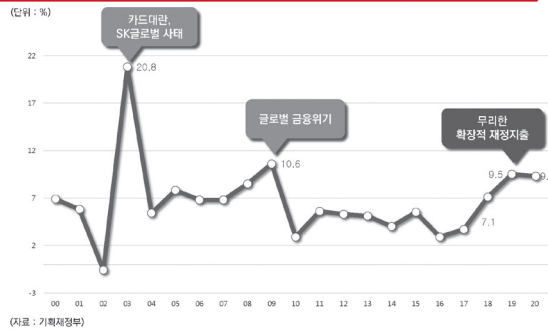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던 재정 운용, 위협받는 국가재정

주요 내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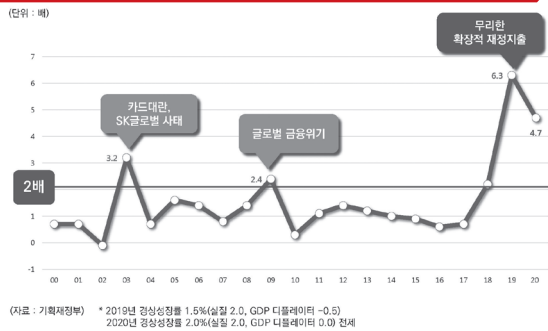
文 정부 들어 급격하게 치솟는 지출 규모

- ‘19년, ‘20년 2년 연속 재정지출 증가율 9%대, 2005년 총지출 개념 도입 이후 최초. 경제 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했던 2000년 이전을 제외하곤 2년 연속 9%였던 적은 없었음
 - 1970년 이후 명목GDP 증가율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이 2배를 넘었던 적도 IMF 위기였던 1998년과 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뿐. 문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2배를 훨씬 상회
- 위기는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나라재정은 경제위기 수준으로 운용

연도별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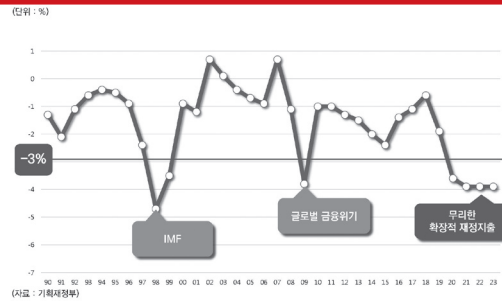
연도별 경상GDP 증가율 대비 총지출 증가율 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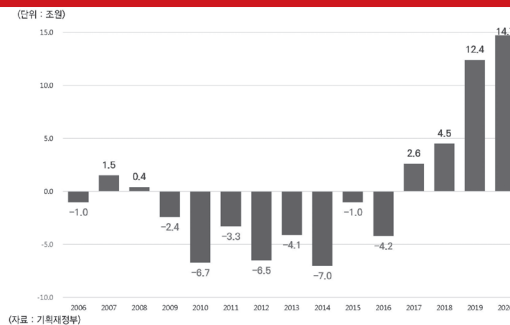
▶ 급격한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는 악화일로

- EU에서 권고하는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4%를 계속 유지
 - 1990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넘었던 적은 IMF 시절(98~99년)과 금융위기(2009년) 두 번 밖에 없었음
- 문 정부 들어 심각해진 예산 퍼주기. 애초에 각 부처가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 14.7조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 반영

연도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연도별 [정부예산안-부처요구안] 추이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文 정권의 재정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국민세금폭탄방지법(국가재정법, 재정건전화 법안 등) 패키지 통과 총력

경제위기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편 가르기 증세

☑ 주요 내용 및 성과

▶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 법인세 인상의 부적절성 지적

- 2017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법인세 인상안. 대기업에 대한 표적증세 단행에도 증세효과는 없고 오히려 투자만 위축
 -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고 역대 모든 정부가 세율을 인하했던 이유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의 실효세율이 높아지면서 경기 활성화를 저해하고 국제 조세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임
 - 文 정부는 집권 첫째, 법인세율 인상과 함께 비과세·감면 축소를 동시에 단행해 기업의 세 부담을 크게 가중시켰고, 이로 인한 국내 투자 위축은 물론 기업 수익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까지 초래
- 법인세 인상 효과는…?
 - 올해와 달리 작년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해당 대기업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시기. 그러나 기재부는 당초 예상한 79.3조원의 법인세 수입보다 7.1조원이나 부족한 72.2조원의 법인세수를 전망
 - 당초 예상했던 증세효과 2.9조원을 제외하면 작년 법인세수에도 못 미치는 수준

▶ 경기하강 국면에서 적절한 조세정책은 증세가 아닌 ‘감세’

-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상 시, 실질 GDP는 단기 0.21%, 장기 1.13% 하락하고 세율 인상시 법인세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경기하강 국면에서는 감세정책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고 성장률을

개선하며 일자리를 늘려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있음

-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기업 투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안을 들고 온 것도 투자를 늘리기 위해 그간의 입장을 번복한 것

▶ 상속세제 개편을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 시급

- 법인세와 더불어 기업의 활력을 죽이는 또 다른 한 축은 상속세. 과도한 상속세율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로 창업세대들은 회사 매각을 고려하고, 국내 알짜기업들은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
 - 500억원의 기업 지분을 상속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할증까지 고려했을 때 최대 65%에 달하는 350억원을 정부가 가져가 기업승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할 때.
 - 부의 대물림이 아닌 투자와 고용, 책임의 대물림으로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부터 전환할 필요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정책 전환 촉구

-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하 및 기업 상속세제 개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경제위기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감추기에 급급한 한국은행

주요 내용 및 성과

한국은행의 최저임금 보고서 물타기 의혹

- 한은,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발간(2018.12월)
 - 인쇄 직전, 원 저자와 협의 없이 보고서의 부정적 결론을 일방적으로 축소·삭제

한국은행 발간[BOK 경제연구]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2018.12

한국은행의 연구용역보고서 내용 왜곡(1)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국은행 발간 [BOK 경제연구]

< 결론 >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문구 누락(삭제)

한국은행의 연구용역보고서 내용 왜곡(2)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국은행 발간 [BOK 경제연구]
<p>〈 결론 〉 “오히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p>	<p>〈 결론 〉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축소와 이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효과도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p>

한국은행의 연구용역보고서 내용 왜곡(3)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한국은행 발간 [BOK 경제연구]
<p>〈 본문 〉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1%p 높아질 때 ...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월평균 급여 격차가... 노동생산성지수를 통제하였을 때는 약 5천원 늘어나는 결과를 보였다.”</p>	<p>〈 결론 〉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p 상승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급여 격차는 약 5천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 되는데, (추가) 분석 대상 기간 중 정규직 여부에 따른 월평균 급여 격차가 평균 약 159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 확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p>

▶ 반면, 대구경북 지역본부는 文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솔직하게 비판

- 「최근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대구경북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서(2019.7월)
 - “최저임금·주52시간제 여파로 작년 자영업 폐업률 89%”
 - “文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존중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1차적인 충격을 받았다.”
 -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도 산업 경쟁력이 아닌 사회복지 측면에서 이뤄져 실제 경제적 효과가 떨어진다.”고 작심 비판
- ⇒ 한은, 지역본부 보고서에 대해 “개인 의견일 뿐, 공식입장 아니다.”며 발뺌

▶ 보고서 결론을 왜곡 조작한 한은에 엄중 경고

- 한국은행이 연구자의 정책적 비판마저 검열하는 것은 독립성이라는 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정책적 경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한은 역시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

민간 시장 교란시키는 잘못된 정책, 제로페이

☑ 주요 내용 및 성과

▶ 서울시장 치적 쌓기용 허위·과장 광고에 동참한 기재부

- 작년부터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최대 75만원 환급’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온 서울시. 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는 거짓 허위광고에 해당
 - 기재부, 제로페이 사용분에만 4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주겠다는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2019.8월)

▶ 전통시장, 동네마트 상인들에겐 오히려 毒이 되는 제로페이

- 최근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도 제로페이 결제가 시작되면서 전통시장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통시장을 찾을 유인마저 사라짐. 영세 상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도 무색
- 동네마트 4,000곳 “소상공인 아니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되어 일반 카드사 수수료율과 별반 차이가 없다”며 제로페이 동참 거부(2019.7월)

▶ 관제페이로 금융권은 ‘제 살 깎아먹기’ 경쟁 중

- 제로페이 사업운영 및 공동사업 추진에 동원되는 금융사
 - 제로페이 도입을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MOU 체결(2018.7월)
 -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전북은행, 페이코주식회사, 하나멤버스, 한국스마트카드 등에 공문 발송해 재단 출연 요청

-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권엔 추가적인 비용부담 발생
 - 은행 체크카드 매출액의 20%가 제로페이로 전환될 경우, 3천590억원의 수수료 수익 감소 예상

▶ 수수료 절감 효과도 회의적... 목적도, 실적도 퇴색된 관제페이

- 정부가 민간 결제사업에 뛰어들어 국가예산을 쏟아 붓고, 홍보와 사용에 공무원을 총동원했음에도 시장 반응은 냉담
 - 2019년 7월 기준, 가맹점 한 곳당 제로페이 결제는 월 평균 1.23회에 불과
- 2020년까지 230억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나, 실적은 미미
 - 정부 예산 투입 : (2018년) 48억원, (2019년) 60억원, (2020년) 122억원
 - 제로페이 출범 이후 9.19일까지 절감된 수수료는 2.7억원 수준. 소상공인 가맹점(29.8만개 가업) 1곳당 920원, 1개월 103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에 불과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과도한 조세특례는 오히려 시장 왜곡을 유발. 관련 법안 입법 저지

- 모바일 간편결제 중 제로페이에만 4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 질서 왜곡을 야기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정부, 이원욱 의원안) 입법 저지 필요

기타

통계법 절차와 과정 무시하고 데이터 불법 유출한 청와대

☑ 주요 내용 및 성과

▶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 통계 불법 유출과 통계 粉飾

-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 결과, 역대 최악의 소득격차가 나타나자 당일 저녁 홍장표 경제수석 주재로 긴급대책회의 개최('18.5.24)
 - 당시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영환 靑 경제정책비서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 통계청 복지통계과 주무관 참석
- 통계청, 홍장표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라 강신욱 박사에게 미공표자료(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18.5.25)
- 이후 강신욱 박사(現 통계청장)가 해당 조사에서 신규표본이 많이 늘어 소득분배가 나빠진 것이라고 보고. 청와대는 이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
 - 文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18.5.31. 국가재정전략회의)
- 황수경 통계청장, “소득 악화는 표본교체와 관련 없다.” 반박('18.7.27)
- 황수경 통계청장 전격 경질('18.8.26), 강신욱 신임 청장 취임('18.8.28)

▶ 소득주도성장 실패 감추기 위해 불법까지 자행한 청와대와 통계청

▶ 통계청의 통계법 위반 :

통계자료 이용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해야 하나 홍장표 수석은 구두로 자료제공 요청, 통계청은 법을 위반해 외부에 제공

▶ **홍장표 경제수석의 직권남용 :**

통계법에 따라 신청자에게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강신욱 박사에게 자료 제공 지시

▶ **홍장표 경제수석의 통계법 위반 :**

홍장표 수석이 자료를 제공받아 강신욱 박사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통계자료의 타인제공을 금지한 통계법 제31조제4항 위반

▶ **통계청의 규정 위반 소지 :**

외부에 제공된 적 없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면서 통계자료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계청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음

⇒ 강신욱 청장,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위법사항 처리 검토**

- 홍장표 前 청와대 경제수석과 통계청에 대해 직권남용과 실정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감사원 감사 요구 및 검찰 고발)을 묻는 것을 검토 중

기타

집권당 하청 받고 야당 정책비전 깎아내리는데 앞장선 기재부

주요 내용 및 성과

국감 대응 목적으로 민주당에서 배포한 「민부론 펙트체크」

- 민주당 정책위, 국감 전날(10.1) 소속 의원들과 언론에 야당의 정책비전을 깎아내리는 자료를 배포하며 한국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응하라고 지시
- 이 자료엔 기초적인 수치 검증은 넘어 야당 정책 논리에 대한 정치 공격적 표현까지 담겨 있어 민감할 수 있음에도 기재부가 직접 작성하고 직원 ID를 통해 민주당 사무처 직원에게 전달

민주당 국감 대응 목적으로 작성된 「민부론 펙트체크」

자유한국당
「민부론」 펙트체크
2019. 10. 01.

더불어민주당
장 세 위 회
2019. 10. 01.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 현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공격이 예상되는 만큼 위원들에게 문제인 정부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한 맥락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배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 국감 현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공격이 예상되는 만큼 위원들에게 문제인 정부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한 맥락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배포한 것

문서에 담긴 "명백한 야당 공격 표현"

가라 할 경우

1) 민부론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에 대한 고민 없음

2)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에 치우친 정책

3) 시장 만능주의에 근거하여 시장 실패에 대한 고려 부족

1) '민부론'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에 대한 고민 없음

2)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에 치우친 정책

3) 시장 만능주의에 근거하여 시장 실패에 대한 고려 부족

▶ **민주당에 제공된 원본 파일 제출 거부하는 기재부**

- 문건 내용을 보면 정부 입장에서 상당 부분 서술되어 있고, 문장·그래프·도표 양식까지 기존 기재부 자료와 유사. 소득주도성장 옹호를 위해 정부가 쓰는 문장과도 일치. 정부자료가 표지갈이만 된 채 야당 공격 자료로 활용
 - 정부여당, '당정협의 업무 차원이었다', '내부 보고서라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 하지만,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이고 국가기밀도 아니며 당정협의 대상도 아닌 만큼 자료제출 거부할 이유 전무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

- 기재부가 야당 반박 논리를 제공한 게 맞으면 정부가 국회 내 특정 정당을 공격한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것으로 국가 공무원법 제65조가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기재부 원본파일 서류 제출 요구 및 법적 대응 검토**

- 종합감사 마지막 날, 당 소속 기재위원 10인 연서로 서류 등 자료제출요구 신청서를 기재위원장에게 제출(10.24). 요구서 정부 송달(10.29)
 - 기재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민부론 검토보고서 원본전자파일 요구
-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검찰 고발 등 검토

헌정질서 파괴

조국 일가의 탈세 의혹에 대한 세무조사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조국 일가에 대한 탈세 의혹 제기

- 부인 정○○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
 - 2015년 모친으로부터 19억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세 납부 대상이었으나 세금 납부 기록은 전무
- 前 제수씨와 부인간 수상한 거래 증여세 탈루(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 조○향 씨는 '부산의 우성빌라를 2.7억원에 매수했는데 그 돈을 정○○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진술
 - 조○향 씨는 3년 만에 3.9억원 짜리 아파트를 추가 구매. 이를 매수하려면 연봉 2.4억원의 근로자가 3년간 번 돈을 한 푼도 안 써야 가능. 이 역시 증여나 명의신탁 의혹
- 2차 전지업체 WFM이 2018년 3월 시가 55억원 상당의 주식 110만주를 부인인 정○○씨가 실소유주라는 코링크 PE에 무상으로 지급
 - 뇌물이라면 기타소득이 되어 소득세 문제가, 무상증여라면 증여세 문제 발생
- 세무조사요구에 과세당국이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며 손을 대지 않는 건 명백한 정권 눈치보기
 - '백성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함을 참지 못한다(不患貧 患不均)'는 논어 구절을 재인용하며 권력자에게도 공평과세가 살아있음을 보여 달라며 조국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촉구

▶ 조국 일가 세무조사 손 놓고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질타

- 고액상습체납자인 동생 조○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법망을 피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부산청이 '과점주주 추적조사'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
- 동생 전처인 조○향에 대한 증여세 탈루, 차명거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손 놓고 있다고 비판
-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과세하겠다고 해놓고 조국 일가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조국 일가의 수상한 자금흐름과 탈세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 촉구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불가. 조국 일가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정권의 실세인사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당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

기타

정권 코드정책 추종하다 방만해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재설계 시급

☑ 주요 내용 및 성과

▶ 문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경영실태 파악 결과

- 정권의 탈원전·문재인 케어 추진, 사회적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평가제도로 인해 공기업의 수익성·생산성은 악화되고 인건비 부담은 급증
 - 기재부 지정 공기업 35개의 올해 재무 현황과 임원 성과급 전수조사 결과, 수익성은 1/3토막, 생산성은 2013년 수준으로 후퇴
 - 임직원 수는 2년 반 만에 7.8만명 증가, 총 인건비는 3년간 5.4조원 증가
- 경영실적 악화 속에서도 공기업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여 임원 158명에게 총 78억원의 성과급 지급. 이는 2018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실적 평가보다 정부의 정책목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했기 때문
 - 사회적 책임 19점→30점/ 일반 경영관리 31점→25점으로 배점 조정해 공기업 입장에선 경영 효율화를 할 유인 마저 감소
 - 경영실적 나빠도 정권 코드정책만 완수하면 '우수'기관으로 성과급 잔치
(예) 빛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의 경우,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게 11억원의 성과급 지급
-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창출, 상생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되어야 한다." 강조('18.8.29. 공공기관장 워크숍)

▶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악화**

- 2018 한국전력 사업보고서(2019.4월) : 탈원전 후유증 고백
 -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소요되는 설비투자 및 정책 비용의 증가 등으로 연결회사의 재무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 건보공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정책비용 어려움 실토
 - “2022년까지 보장률 목표 70% 달성 및 치매국가책임제 등 보장성 강화 지속추진으로 건강보험 자금수지는 2018년부터 지속 적자 예상”

▶ **기재부에 공공기관에 코드정책만 강요할 게 아니라 경영 효율화 유인 없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부터 재설계하라고 촉구**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촉구**

- 기재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지표별 상세 배점표 요구
-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공공기관 경영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주문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교육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 확대의 필요성

- 조국 자녀 입시 부정 의혹으로 촉발된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학생부 부모전형’,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불공정성, 불투명성이 크게 제기됨
- 최근 여론조사결과(2019.9.5. 리얼미터)에 따르면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정시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3.2%로 나타남

▶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 존재 의미와 일반고 업그레이드 정책

- 문재인 정권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특목고 평가를 통한 단계적 전환 방침에서 일괄 폐지 검토로 입장 선화
- 교육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몫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

▶ 서울대, 경북대 등 교수들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 학교는 부실 조사 의혹

- 황우석 사태 이후 설치된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실상은 대학 내 연구 ‘부정’이나 ‘부실’을 덮는 용도로 기능

▶ 무자격 교장 공모제의 문제점 집중 부각 및 서울시교육청과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특별채용 협의 집중 질타

-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전교조의 출세코스로 전락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작년 12월 4명의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나머지 12명의 응시자들은 짜고 치는 형국에 들러리를 서게 됨
- 문재인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전교조 등 조직들의 ‘불공정’과 ‘위선’에 경악

▶ 편향된 정치의 장으로 전락한 학교 현장

- 부산 모 고등학교 시험문제에서 검찰을 조롱하고 서울 관악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함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 확대의 필요성과 공정한 입시제도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대통령 ‘대입제도 재검토’ 요구에도 그동안 교육부장관은 수능 정시·수시 비율 조정 일축했으나 예산안 시정연설(10.22)에서 대통령이 직접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식 천명함
- ▶ 조국 자녀처럼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대학과 대학원에 불공정하게 들어가는 불·탈법을 방지하고 고위 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확립하고자 함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당 의원총회(10.22)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수능 정시 50% 이상을 당론으로 채택함, 조만간 법안 발의해서 정기국회 내 적극 추진
- ▶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안 발의(신보라의원, '19.10.22), 정기국회 내 적극 추진
- ▶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과제에 대한(연구비 부정이나 부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이나 부총리 직속으로 구성 ⇒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추진

공동체와 국민 분열

자사고 등 특목고의 존재 의미와 일반고의 업그레이드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존재 의미를 집중 부각하면서 일반고의 교육 질 및 환경도 함께 업그레이드 주문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既 발의한 대응법안 적극 추진

- 초중등교육법(개)(김한표의원, '19.5.23)
 - 자사고로 지정되면 입시부정·회계부정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교육감이 평가를 통한 임의적인 지정취소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
- 초중등교육법(개)(이종배의원, '18.1.12)
 - 시행령에 규정된 고등학교의 유형,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

- ▶ 특목고 교장단과 간담회,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 마련

무자격 교장 공모제와 전교조 특별채용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전교조 출세 코스가 되었고, 서울시는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특별채용 협의 하에 4명의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채용하는 등 약자를 위한다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산하 전교조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위선적인지 집중 부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既 발의한 대응법안 적극 추진
 - 교육공무원법(개)(전희경의원, '17.7.20)
 - 교장 공모 자격을 교감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 교육공무원법(개)(염동열의원, '18.3.21)
 -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의 범위(15%, 교감자격증 소지자) 명시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 **불공정을 화두로 조국일가의 비리를 파헤치며, 조국 사퇴에 큰 일조를 한 과방위 국감!**
 - 반칙과 부정, 불공정으로 얼룩진 조국 딸 입시비리 의혹 총공세
 -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조국일가와와의 연관성 집중 추궁
- ▶ **친정권방송, 친노조방송으로 전락한 공영방송의 편파성, 불공정성을 국민에게 적극 알린 과방위 국감!**
 - 조국사퇴 광화문 집회, 검찰개혁 서초동 집회에 대한 공영방송사의 편파적인 보도행태 지적
 - 남북축구 중계 불방, 주권방송 동요메들리 무장계 등 문재인 정부의 북한 편들기 질타
- ▶ **포털 여론조작, 유튜브 노란딱지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국민의 마음을 적극 대변한 과방위 국감!**
 - 여론왜곡의 장이 된 포털 실시간 검색어 제도 폐지 등 포털의 책임 있는 대책 주문
 - 네이버·다음카카오·구글코리아 대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답변을 이끌어낸 성과
- ▶ **원자력안전 실태를 알리고 국민체감형 이슈를 대거 발굴한 과방위 국감!**
 - 전문성이 결여된 탈원전 낙하산 인사들의 장악으로 국민안전까지 위험하다고 지적
 - 북한 핵 방사능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차원의 실질적 대책 주문
- ▶ **화웨이 5G 장비 보안 문제를 적극 공론화한 과방위 국감!**
 - 화웨이 백도어 설치의혹을 거론하며 5G 화웨이 장비에 대한 보안우려 제기
 - 화웨이 5G 장비에 대한 보안문제 지속적 점검 주문

▣ 국정감사 기간 중 가장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던 과방위 국감!

- △지상파 3사 광화문 집회 축소보도행태 규탄(10.4) △한상혁 방통위원장 위법 5관왕 성명(10.19) △KBS 수신료 징수 방송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기자회견(10.21) 등 다수의 성명서로 국민의 마음 대변!
- △가짜위원장, 한상혁 즉각 사퇴하라(10.4) △KBS 근조, 국민의 명령이다! 양승동 나갈레오!(10.17) △‘위법 5관왕 한상혁 OUT!’(10.21) 등 국감장 피켓시위로 야당의 항의정신 부각!
- △조국 딸 KIST 허위인턴 증명서 문제 관련(10.2) △버스 와이파이사업 관련 입찰자격 변경 등 메가크라프트가 선정된 과정(10.15) △과기부 산하 60곳 채용비리 의혹(10.18) 등 10건이 넘는 감사원 감사 청구의견!

불공정 분야

조국 일가의 불공정 카르텔을 파헤치다!

☑ 주요 내용 및 성과

▶ 반칙과 부정, 불공정으로 얼룩진 조국 딸 입시비리 의혹 총공세

- KIST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 등 과학기술연구의 산실이 입시부정을 위한 위조공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자 내부 징계 요구
- KIST 상징 조형물에 ‘조민’ 이름 들어있는 것과 관련 허위인턴에 불과한 사람을 KIST 상징물에 새긴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
-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허위기고는 규정 위반이며 연루자에 대한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 차원의 징계조치 및 연구비 환수 촉구
- 조국 딸 KIST 출입 문제 관련 택으로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임을 밝히며 조국의 인사청문회시 위증 의혹 재환기

▶ 버스공공와이파이 사업 관련 조국 일가와 연관성에 대해 집중 추궁

- 정경심이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한 건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게이트성 사건으로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업체를 입찰 자격을 변경하면서 참여시키고 선정되게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일제히 감사원 감사 청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감사원 감사 청구

- 버스와이파이 사업 관련 입찰자격 변경 및 기술점수 문제 등 메가크라프트가 선정된 배경에 대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 및 감사원 감사 청구

▶ 조국 딸 문제 관련 연루자 문책 요구

- 조민 허위인턴증명서 및 논문 허위기고 관련 과기부, 한국연구재단 등의 조치사항 지속 점검

불공정 분야

친정권 방송, 친노조 방송으로 전락한 공영방송 질타!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조국 사퇴 광화문 집회, 검찰개혁 서초동 집회에 대한 지상파 3사의 편파적인 보도행태를 지적하며 공영방송의 문제점 적극 거론**

 - 지상파 3사는 서초동 집회(9.28)는 대대적으로 주요뉴스로 보도하면서 광화문 집회(10.3)는 KBS 17번째, MBC 9번째, SBS 5번째 겨우 1-2회 꼭지로 축소보도. 친정권 방송, 조국 후위방송임을 부각
 - 우리나라 공영방송사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보도를 일삼으면서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을 지적
- ▶ **지상파 방송의 적자위기는 편파방송에서 비롯됨을 지적**

 - KBS 수신료 징수문제, 유시민 알릴레오 관련 KBS내 조사위 구성 및 여기자 성희롱 사건 문제 등 적극 거론
 - 특히 KBS 수신료 징수에 대해 KBS가 수상기 등록없는 가구에서도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방송법 위반, 한국전력공사가 개인 동의 없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지적
 - MBC 재정위기 악화는 최승호 사장 취임이후 편파방송으로 인한 시청률 하락, 노조특세, 파업불참 인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에 기인한다고 강조
- ▶ **교통방송의 본분을 버리고 정치편향적 방송을 일삼는 TBS 문제 이슈화**

 -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을 비롯해 편파적 패널 구성 등 방송행태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TBS의 시사프로그램 방송은 방송법 위반사항임을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KBS 수신료 징수**

 - 방송법(개) 강효상 의원(18.12), 박대출 의원(18.12), 김성태 의원(19.8) 수신료 분리징수 및 폐지 법안 발의
 - 10.22 대검찰청에 한전과 KBS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서 제출(과방위, 산중위 일동)

여론조작 분야

포털 여론조작의 실체를 만천하에 알리다

☑ 주요 내용 및 성과

- ▶ 포털 실시간검색어 조작 의혹 등 포털 여론조작 관련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한 실시간 검색어 제도 폐지를 비롯한 포털의 책임 있는 대책 주문
 - ‘조국 힘내세요’ ‘문재인 지지’ 등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관련 특정세력의 조작, 키워드 편향성 문제에 대해 여론왜곡의 심각성 주장
 - 네이버 한성숙 대표 ‘인터넷 검색 서비스 관련 선관위 KISO와 논의해 대책 마련하겠다’ 카카오 여민수 대표 ‘실검 알고리즘, 클릭수를 일반에 공개조치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낸 성과
 - 특히 카카오는 후속대책으로 연예 섹션의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고 인물키워드에 대한 관련 검색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진일보한 개선안을 발표(10.25)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포털 여론조작 관련 법안 (드루킹 방지법)
 - 정보통신망법(개) 김성태 의원(18.7.30), 송희경 의원(18.4.24) 매크로 조작 원천 금지 법안 발의
- ▶ 3당 포털 실시간검색어제도 개선방안 대책회의 합의(10.11)
 - 국정감사 이후 비공개방식의 알고리즘 검증 추진,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 국회-정부-선관위-포털 협의체 구성 등

노란딱지 유튜브의 실상을 알리고 구글에 대책 마련 요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노란딱지 유튜브 문제를 적극 거론하며 구글에 대책 마련 주문

- 우파 유튜버들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조직적 좌표찍기로 많은 유튜버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
- 구글 코리아 대표가 한국 유튜브 상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이용에 알고리즘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하는 성과
- 한국의 많은 유튜버들이 왜 노란딱지를 받고 광고가 제한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설명회를 개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구글 코리아대표 ‘YES’ 답변도 성과
- 구글의 광고제한 콘텐츠가이드라인이 추상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노란딱지 급증 관련 구글코리아 본사 방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 국정감사 이후 유튜브 노란딱지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제보가 있어, 실상 확인을 위해 과방위 차원의 구글코리아 본사 방문 요청(박대출 의원 등)
- 특정 유튜버에 대한 노란딱지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블랙리스트로 의심된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10.24)

원자력안전 분야

원전 마피아로 얼룩진 원자력안전 분야, 국민안전까지 위협!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전문성이 결여된 탈원전 낙하산 인사들이 원자력 기관을 대거 점령해 국민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문제제기**
 -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탈원전 활동가, 환경운동가 친문인사 낙하산 자리로 활용됨을 지적
- ▶ **원자력안전을 방치한 원안위 문제 적극 거론**
 - 한빛 1호기 열출력 제한치 초과현상 발생 당시 원안위 회의에서 대책검토도 없고 원안위 위원장 및 공무원들이 회식을 하는 등 사고당일 무사안일주의, 직무태만 지적
 -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감사원 감사결과(원자력 안전법에 위배되는 허위사실 지적)가 나올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
 - 10.11 예정되었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의를 연기시킨 성과
- ▶ **횡계리 탈북자 방사선 노출 관련 북한 핵 방사능 위험성 문제 부각**
 - 횡계리 탈북자 방사선 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자가 다수. 해류를 통해 우리나라 역시 북한 핵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정부차원의 대책 주문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문제제기 필요**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탈원전 인사 각종 위원회 겸직 및 일감몰아주기 행태 및 한빛 원전 사고당일(19.5.11) 원안위 임직원 근무태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 ▶ **북한 핵 방사능 위험 문제 국민적 관심사로 이슈화**
 - 북한 방사능 유출 및 피폭 실태 조사 촉구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 주요 정책 결정·발표 과정에서 외교부는 배제된 채 청와대 안보실에서 주도하는 것은 정책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결단이 외교를 좌우하고 있음을 지적함
- ▶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행 문제로 촉발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 실질적 해법을 제안함
 - 피해자 배상은 우리 정부가 기금조성 등의 방법을 통해 이행하고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도덕적 비판을 받게 해 우리 정부는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현실적 방안이 제시됨
- ▶ 북한의 쌀지원 거절, 공포의 월드컵 평양 예선전, 아프리카돼지열병 공동방역 제안 거절 등 북한의 의도적 출대와 9.19합의 위반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굴종적 대북 정책은 국민의 분노를 살뿐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함
 -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인권과 탈북민 관련 정책에 의도적으로 소홀한 정부 태도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함
- ▶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금강산 관광 재개, GSOMIA 파기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명확한 입장 차이를 확인함
 - 우리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경제논리가 앞선다면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이 될 수 없다며 우려스러운 입장인 반면, 여당은 미국의 증액 요구가 무리하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명확한 입장차를 확인함
 - 여당은 금강산 관광 재개는 대북제재와 무관하다며 즉각적인 재개를 주장함
 - 여당은 일본과의 신뢰관계 붕괴로 GSOMIA 파기는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재고의 가치가 없음을 주장한 반면, 우리당은 한미일 삼각공조, 한미동맹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청와대 안보실에 밀려 패싱·실종된 외교부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주요 정책결정·발표에서 외교부는 소외되고 청와대가 주도하여 정책적 안정성보다 정치적 결단이 앞서 외교는 실종되고 안보는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함**
 - 정의용 청와대안보실장이 전면에 나서다, 이제는 김현종 청와대 외교안보실 2차장이 정책결정과 발표를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
 - 미국 외교가에서 한국을 One issue nation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국이 '기승전-북한'이라는 조롱을 담은 표현으로 우리 외교가 북한문제에 매몰되어 외교부는 패싱되고 정작 국익을 위한 외교는 실종되었음을 지적
 -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핵심 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교부 장관이 배제되었다는 정황을 제기함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국익을 훼손시키는 정치적 결정이 앞서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교체 촉구 필요**
 - GSOMIA 파기처럼 극단적 정치적 결단을 자행한 정의용 외교안보실장, 김현종 2차장 교체 촉구
 - 반미데모 선동하고, 미국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 해임 촉구

안보·외교 붕괴

파탄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촉발된 한일관계 파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주문하고 GSOMIA 복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실질적 해결책 마련 등을 촉구함
 - 배상 판결을 이행하라는 원론적 입장만 강조하며 외교적 노력에는 소극적인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고,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외교적 노력 및 중재위원회 설치 등 일본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며 정부 간의 실질적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 피해자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은 우리 정부가 기금 조성 등의 방법을 통해 이행하고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판을 받게 하고 우리 정부는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현실적 방안이 제시됨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강제징용 배상판결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 필요
- ▶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핵심축인 GSOMIA 파기로 인한 안보공백 점검 필요
-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상황 지속 점검 필요

美대사관저 난입 사건에 공식 입장표명 조차 하지 않은 무책임한 외교부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친북 성향 대학생 단체의 美대사관저 난입 사건 발생과 관련 공식 입장발표 없이 기자단 문자메시지 알림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장관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이끌어 냄
- 공식입장 발표가 없었던 것은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이자 소원해진 한미동맹의 현주소임을 지적
- 뒤늦게라도 외교부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을 촉구함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주요국 대사관저에 대한 경계 강화 및 주요국 대사에 대한 요인경호 요청
- ▶ 외교부의 공식입장 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발표 여부 확인

안보·외교 붕괴

‘공포의 월드컵 평양 예선전’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굴욕적 통일부

☑ 주요 내용 및 성과

- ▶ ‘無중계, 無관중, 無취재’로 치러진 월드컵 평양 예선전에 대해 제대로 된 정부차원의 항의가 없었던 것에 대한 강력한 질타로 장관의 북한에 대한 명확한 유감표명을 이끌어냄
 - 대표팀 선수단 휴대전화 소지불허로 인한 통신두절, 휴대폰 제한, 사실상의 호텔 감금 상태에서 체류한 사실에 대해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촉구함
 - 중국 현지 북한여행상품 취급 여행사들은 1주일 전에 이미 無관중 경기가 될 것을 인지하였으나 통일부는 개최 1시간 전에 통보를 받은 것이 확인되어 북한의 의도적 홀대와 경색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줌
 - 장관의 답변 중 ‘無관중은 응원단 파견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북측의 공정성 차원의 측면’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 국민 여론과 괴리된 장관의 북한 편향적 해석에 대한 질타가 이어짐
- ▶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역대급 기괴한 경기를 치러 놓고,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는 것을 명확히 함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추진
- ▶ 2020 하계올림픽 남북공동진출(단일팀) 관련 국민여론 점검 필요
 - 2020 정부예산안 남북협력기금 중 17억4천4백만원 旣편성

북한인권과 탈북민 보호에 눈감은 문재인 정권

☑ 주요 내용 및 성과

- ▶ 탈북민 모자 아사사건 계기 미흡한 탈북민 지원대책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 주도의 장례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함
- ▶ 탈북민의 90%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탈북과정에서 성매매·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한 제3국 출생자녀들은 한국에 와서도 제도적인 차별을 겪게 되므로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탈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제3국 출생자녀의 제도적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 ▶ 정권에 따라 휩쓸리는 탈북민 지원대책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탈북민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기
- ▶ 북한인권법 통과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검사제도를 없애고 북한인권 업무경력이 미흡한 공무원을 임명하는 등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북한 눈치 볼 필요 없는 법무부로의 이관 필요성 제기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 통일부 산하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
- ▶ 북한인권법 개정 추진
 -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센터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 ▶ 제3국 출생자녀 지원 정책 강화 추진

안보·외교 붕괴

휴지조각이 된 9.19평양공동선언, 항의조차 못하는 굴욕적 정부

☑ 주요 내용 및 성과

- ▶ 2018.10 국무회의를 통해 셀프비준해 우리 정부만 금과옥조처럼 이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있는 9.19평양공동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를 정작 북한은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 10여 차례 탄도미사일 및 초대형 방사포 발사, 해안포 포문 개방, 급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남북군사합의 1조 위배
 - 아프리카돼지열병 공동 대응 제안 거절-평양공동선언 2조 4항 위배
 - 진척 없는 이산가족 상봉-평양공동선언 3조 위배
 - 월드컵 평양 예선전 사태-평양공동선언 4조 위배
 -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최 거부-평양공동선언 4조 위배
- ▶ 우리 정부는 9.19평양공동선언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대통령 셀프비준까지 한 반면 북한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을 지적하고 북한의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굴욕적 정부를 비판함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이미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평양공동선언 후속 조치 관련 예산 통제 필요
 - 2020 하계올림픽 남북공동진출, 2032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추진 관련 예산
 - 남북 철도·도로 연결 관련 예산 등
- ▶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추진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 기조 대전환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북한의 쌀지원 거절, 엽기적 월드컵 평양 예선전 사태, 유명무실한 개성공동 연락 사무소 운영 등 최악의 남북관계 상황에도 북한에 대한 항의는커녕 유감표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의 굴종적 자세는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조함

 - 북한은 북미대화, 남북대화 등을 통해 시간을 벌며 제재완화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김정은 한 번 만나는데 모든 역량을 쏟고 있음
 - ‘삶은 소대가리’, ‘연평도를 잊었나’ 등의 북한당국자의 모욕적 발언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정부의 굴종적 태도는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북한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못함을 지적함
- ▶ 북한인권법 통과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검사제도를 없애고 북한인권 업무경력이 미흡한 공무원을 임명하는 등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북한 눈치 볼 필요 없는 법무부로의 이관 필요성 제기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문재인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 기조 대전환 촉구

 - 북한의 합의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 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 ▶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규탄성명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국방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9.19남북군사합의가 얼마나 졸속으로 합의된 것인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우리 군의 전투력 약화만 불러오는 9.19남북군사합의의 즉각 폐기를 주문
 -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명백한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재발방지 촉구해야 할 것
 - 9.19남북군사합의로 인한 전투력 약화 사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 ▲강원도 고성 마차진 대공 사격장 이용 제한으로 대공 사격 훈련 중단 ▲서해 5도 K-9자주포 사격 훈련 중단, 비행금지구역설정으로 감시·정찰자산 운용 제한 등
 - 현장 확인을 제대로 안한 GP시범 철수·철거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GP대신에 충돌 가능성이 적은 GP를 철거함으로써 우리 군의 중요한 감시자산만 철거. 9.19남북군사합의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 ▶ 감사의 대부분이 현장에서 이뤄졌고 각 군 부대를 포함해 최근 북한 무장화로 논란이 되었던 서해 NLL함박도 인근 말도 소초와 삼척 북한 목선 입항 현장 등 안보 현장 점검을 통해 우리 군의 경계 및 작전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점검했으며 일선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살아있는 눈빛과 결기를 확인할 수 있었음
- ▶ 우리당 국방위 감사위원들은 현 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 무리하게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에 대해 기존에 한미가 합의한 3가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주장했으며, ‘북한 눈치 보기’로 우리 군의 전력화 행사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어서는 안 될 것을 주문하면서 군은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

- ▶ 북한은 올 해 들어 벌써 12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만큼, 그동안 중단됐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
- ▶ 최근 러시아, 중국 등 주변 열강들이 한미일 안보균열과 한미동맹이 느슨해진 틈을 타 우리 영공·카디즈 침범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도발·침범 억제해야 할 것
- ▶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외교무능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안보불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안보정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안보 위기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맞서 3축 체계 구축 시급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 북한 미사일 도발이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국방부장관은 “9.19남북군사합의 문구자체에 없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변
 - 북한 미사일 도발이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논란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세부적인 적대행위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 있었음
 -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2019.10.2.)한 것과 관련, 해군 참모총장 “현재는 SLBM 요격 능력 없다”고 답변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재발방지 약속 받아내야 할 것
- ▶ 북한 미사일(SLBM 포함)능력이 고도화 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요격체계 구축 시급. 해군 참모총장, “원자력추진잠수함 SLBM 대응 가능”
 - 현재 한·미가 보유중인 사드, 패트리엇 미사일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요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요격 대응책 마련 시급
 - 3축 체계 ▲적의 도발을 사전에 포착해 이를 무력화하고 미사일 방어능력과 응징보복능력을 구비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조기 구축 시급

안보 위기

함박도에 북한 군사시설 설치는 명백한 9.19남북군사합의 위반

☑ 주요 내용 및 성과

▶ **함박도에 북한 군사시설 설치하는 바다에 GP설치한 것과 같은 것**

- 함박도 북한 군사시설 설치하는 현 정부의 유약한 대북정책이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명백한 9.19남북군사합의 위반. 북한에 강력한 항의 성명 등 즉각 철거 요구해야할 것
- 해병대사령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은 북한. 유사시를 대비해 함박도 초토화 계획 세웠다”
- 국방부 관계자, ‘함박도에 설치되어 있는 북한 레이더는 2차원 레이더로 태양광 전기 공급으로 출력이 제한되며 최대 탐지거리가 40~60km’
-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 TV’, 해병대 사령관 발언에 대해 과거 연평도 포격 거론하며 협박
-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 돼 있어 함박도는 틀림없는 대한민국 영토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함박도에 북한 방사포, 해안포 설치 여부 지속 점검**

- 현재는 함박도에 방사포·해안포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레이더, 감시장비, 병역막사 설치 돼 있고 북한군 소대가 주둔 중
- 북한이 함박도에 방사포, 해안포 설치시 인천공항 등 수도권 주요시설 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감시와 대응책 마련 필요
-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함박도에 북한이 감시초소를 설치한 것은 안보에 큰 지장이 없지만 무기를 들여올 경우 큰 위협이 될 것”

안보 위기

전작권 전환은 한·미간에 합의된 3가지 조건 충족될 때 가능

☑ 주요 내용 및 성과

▶ 전작권 전환엔 3가지 조건 충족 필요한데 현재는 과거보다 더 악화된 상황

-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가지 조건 ▲한국군이 한미연합방위 주도할 수 있는 능력 확보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타격능력과 미 사일방어 능력 보유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될 것
- 북한 핵·미사일 능력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어 전작권 전환 조건 미충족
- 전작권 조기 전환에 찬성하는 사람은 자주국방에 선도적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해석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현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이여서 그런지 문 대통령 임기 중 무리하게 전작권 추진

- 준비 안 된 선부른 전작권 전환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한·미간에 합의한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추진 가능
-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3축 체계 구축이 시급한데 올 해 결산 결과 3축 체계 사업 추진 실적이 너무 저조. 군은 정부 눈치 보지 말고 군사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

안보 위기

전력증강사업 등 무기 구매에 어떤 ‘정치적 고려’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북한 눈치’보기도 안 돼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전력증강 등 무기 구매에 정치적 고려 결코 있어선 안 될 것**
 -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한국 정부의 '미국산 무기구매' 계획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 정상 차원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무기 구매에 있어 '정치적 고려나 톱 다운' 방식 있어선 안 되며 역사적 책임을 갖고 검토할 것 주문
 - 전력증강 관련 사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기구매 계획을 특정 국가에 제공하고, 청와대가 방위사업청과 상의도 없이 무기구매 계획을 미국 측과 논의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
 - F-35A(스텔스 전투기)도입 관련해 북한은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 했다고 맹비난' 하고 있고, 군을 현 정부의 기조를 의식해서인지 전력화 행사를 지연하고 있다고 의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F-35A(스텔스 전투기)도입 등 전력화 행사는 우리 군의 전력화시기에 맞춰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북한 눈치’보기로 전력화 행사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
- ▶ 전력증강 사업 등 무기 구매 과정은 방위사업법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

안보 위기

한미연합훈련 중단·축소에 따른 군사대비태세 약화

☑ 주요 내용 및 성과

▶ 한미연합훈련 중단·축소에 따라 한미동맹 약화 및 안보 위기 초래

-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따른 보강 계획 발전 주문.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대규모 훈련 중단에 따라 소규모 훈련 증가했으며 향후 훈련 더 강화 시킬 것
- 한미연합훈련 중단·축소되더라도 무기체계가 더 정밀해지고 파괴력이 커져서 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럴 거 같으면 훈련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질타하면서 훈련 하지 않아도 확고한 방위태세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
- 9.19남북군사합의로 인해 서해 5도 NLL 일대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이 제한되어, 해병대의 경우 미군과의 연합상륙훈련이나 장거리 포 사격 훈련(K-9자주포 훈련) 중단으로 전투력 약화 초래
- 한미 연합상륙작전 훈련이 차질을 빚는 것과 관련 해 우리 군 독자적 상륙훈련 필요성과 전력 확충 위해 공기부양정 도입 주장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북한이 실질적 핵 폐기 조치를 하지 않고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여 미사일 도발 등 적대행위를 계속할 시에는 9.19남북군사합의 폐기와 한미연합훈련 즉각 복원해야할 것

안보 위기

**러시아·중국 등 외국 군용기 카디즈·영공 침범,
한미동맹 굳건해야 막는다**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러시아·중국 군용기 카디즈·영공 침범은 한미일 안보균열과 한미동맹 약화 틈 노린 것
 - 어느 나라든 우리 영공 침입하면 메뉴얼에 따라 똑같이 대응할 것을 주문
 - 독도 영공 침범시 4단계(군사적조치)조치까지 검토했었느냐는 질의에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기였고 군사적조치를 할 정도의 위해를 느끼지 않아 경고사격만 실시”했다고 답변
 - 독도 영공 침범시 현장 조종사가 선조치 후보고 했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일본은 카디즈 진입한 적은 있었으나 사전에 미리 통보했었고 영공을 침범한 적은 없었음
 -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시(2019.7.23.) 청와대 발표가 오락가락해 혼란을 초래했고 정작 러시아로부터 재발방지 약속은 받아내지 못함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러시아·중국 등 외국 군용기 영공·카디즈 침범시에는 메뉴얼에 따라 행동
 - 평소에 장병들에게 선조치 후보고 개념 정확히 교육하고 숙달되도록 연습·훈련해야 할 것
 - 국방부는 작년 9.19남북군사합의 이행일(11.1일)직전에 군사합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카디즈 무단 진입에 따른 작전지침 변경에 대해 즉시 원상회복 시켜야 할 것
- ▶ 중국·일본·러시아 등 열강 속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아래 자주국방엔 한계가 있으며 역사가 말해주듯이 굳건한 한미동맹만이 침범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 현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외교 무능력에 대해 견제와 대안 제시
 - 현 정부는 영공 침범한 러시아에 대해 강력 항의와 재발방지 약속 받아내야 할 것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 조국 장관 임명 강행 논란을 통해 공정과 정의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헌정농단,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규명에 주력
 -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서울시 지하철 및 전국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한 권력형 비리 의혹, 부산의료원장 선임 관련 특혜 장학금 대가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 버닝썬과 관련한 경찰의 미흡한 수사 결과에 따른 배경 진상규명 요구
- ▶ 경찰의 권력형 공작수사 게이트 의혹, 민주노총에 유린된 공권력 대책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요구와 동맹국인 미국과의 외교를 악화시키는 미국대사관저 기습 침입 농성 사태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 촉구
- ▶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실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에 주력
 - 국정과제인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건립 계획, 미래세대에 부담지우는 무분별한 규제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연금 적자 급증, 경제성은 없고 환경훼손만 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 강원도 산불 원인에 대한 조속한 경찰수사발표 촉구 및 피해주민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방안 마련, 제천화재 참사 희생자에 대한 조속한 보상 방안 마련 요구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자치 명분을 앞세운 지역조직 장악 및 조직화 시도, 서울교통방송의 심각한 좌편향 방송 등 언론 장악 시도, 먹는 물 사태에서 드러난 안전 대처 무능,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주민혈세 낭비, 지방자치단체장 가족 및 지인에게는 통하지 않는 공정과 정의,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고용세습 및 친여 인사 일감몰아주기 등 뿌리까지 썩어가는 신적폐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 요구

헌정질서 파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조국 장관 임명 강행 논란을 통해 공정과 정의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각종 헌정농단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진실규명에 집중
- 주요 의혹으로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주민등록 허위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조국 전 장관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대한자유총연맹이 1대 주주로 있는 한전산업개발이 이례적으로 PNP플러스를 위해 60억원짜리 계약이행 보증증권에 대한 연대보증까지 서준 배경 △조국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코링크PE와 투자자문 계약을 맺은 PNP플러스컨소시엄이 사업 초기부터 설계 능력·자금력 확보 등에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 △부산의료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특혜 장학금 지급 대가 의혹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노 전 대통령 수행비서를 했던 유재수 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하여,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에 기업들로부터 차량 및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던 중에, 청와대 ‘윗선’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전 특별감찰반원의 추가 증언이 이어지며, 당시 유재수 국장을 비호하고 감찰 중단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의혹 등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 지속 점검, 공직윤리법 개정안 조속 통과 추진**

- 공직자 재산 등록의무자가 3000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한 후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관련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직무관련성을 심사 받도록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홍철호, 19.09.24)」

공직자윤리법 (개)	22629	홍철호 19.09.24	행안위 회부
------------	-------	-----------------	--------

[조국 적폐 방지법]

-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재산 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한 후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관련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직무관련성을 심사 받도록 의무화

포플리즘 위선

대통령이 '대노(大怒)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기록관 건립 사업,
국정과제이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심의·의결한 사실 확인

주요 내용 및 성과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기록관 건립 사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건립 예산 심의·의결 사실 지적

- 국가기록원이 현재의 통합 대통령기록관은 놔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원 규모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을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16백만원을 편성했고, 국민세금으로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한 기록관을 건립한다는 사실에 국민적 원성이 높아지자, 청와대는 '대통령이 불같이 화냈다. 원치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 청와대의 해명과는 달리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었고, 국가기록원장이 직접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총 3차례 보고했으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건립 예산이 심의·의결된 사실 확인

국가기록원이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해 서고 사용률 실패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필요한 부분만 주장했다고 지적

- 국가기록원이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의 추진 배경으로, 현재의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 달한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서고의 사용률은 비밀문서 50%, 일반문서 42%, 시청각자료 37.3%에 불과해 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사용률 실패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필요한 부분만 주장에 이용했다고 지적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예산 전액 삭감

-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만큼,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등 32억16백만원 전액 삭감 필요

편파방송 부추기는 서울시의 특정방송 광고 몰아주기 중단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서울시의 라디오 광고비 절반, 김어준 방송에 몰아주기 사실 확인

- 서울시가 매년 3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지원하는 서울교통방송이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시사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좌편향 방송을 하는 문제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국정감사 등에서 매년 지적돼 왔으나, 오히려 갈수록 좌편향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 서울시가 2019년 1월~6월 교통방송 등 라디오 채널 6곳에 집행한 시정 홍보 광고비는 총 2억3234만5000원으로, 이 중 9934만5000원(43%)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광고비로 집행됐고, 서울시가 2019년 1월~5월 집행한 팟캐스트 광고비도 5844만원 중 1210만원(21%)이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집행된 사실 확인

▶ 서울시의 편파방송 부추기는 특정방송 광고 몰아주기 중단 촉구

- 서울시처럼 특정 프로그램에 광고비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한 곳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서울시가 편파방송 지적을 받는 특정방송의 특정 프로그램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것은 편파방송을 더욱더 부추기고, '김어준 먹여 살리기'란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만큼, 특정방송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행태를 당장 중단 할 것을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방송법 개정 (과방위)

- 서울교통방송의 설립 취지에 맞게 시사프로그램 편성을 금지하고, 교통생활 정보를 중심으로 방송하도록 방송법 개정 필요

경제 위기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는 규제공무원 증원 계획 재수립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미래세대에 부담지우는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연금 적자 급증 지적
 - 정부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가 쌓이면서 정부가 메워주는 보전금 규모가 2019년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4년간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
 -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2022년까지 17만 4,000명 공무원 증원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 촉구
- ▶ 현장 공무원 늘린다더니, 규제공무원만 확 늘린 사실 확인
 - 정부가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의 명분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하는 현장 인력 중심의 증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난 2년간 인허가 등 규제·감시 부처의 공무원 증원 수가 과거 정부 4년간보다 2배가 넘게 증가

※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대비 2018년 말 기준 △공정위 588명→694명(18.0%) △환경부 2070명→2424명(17.1%) △금융위 293명→327명(11.6%) △고용부 6365명→7055명(10.8%) △관세청 4926명→5346명(8.5%) △대검찰청 1만300명→1만926명(6.0%) △국세청 2만1549명→2만2490명(4.3%) 등

- 정부는 ‘공무원 1명 늘어날 때마다 규제가 하나씩 더 생긴다’는 기업들의 비명과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고, 규제공무원이 아닌 현장 인력 중심으로 공무원 증원 규모를 재수립 할 것을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예산안 심사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 재설계 논의
 -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규제공무원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인력 중심, 미래세대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증원 규모 재설계 논의

시민혈세 낭비하는 ‘서울페이 관제 마케팅’ 중단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관제 마케팅’에 시민혈세 낭비되는 서울페이 문제점 지적

-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 중점사업인 ‘제로페이 서울(서울페이)’이 실적이 미미하고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서울시가 업무추진비와 복지포인트 일부를 서울페이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더해 서울대공원, 한강공원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서울페이를 결제하면 최대 30%까지 할인해 주는 ‘공공시설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 서울페이 할인으로 인한 서울의 공공시설 수입 감소분은 연간 3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결국 민간위탁 기관의 막대한 수입 감소분을 시민혈세로 보전해 줘야하는 혈세낭비 문제점 지적

▶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 소상공인 지원의 근본 해결책 마련 촉구

- 서울페이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호응도가 낮는데, 그 주요 이유는 10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을 받을 경우 일반 신용카드의 실질 수수료율도 0~0.3%로 높지 않고, 게다가 사용법도 불편해 서울페이보다 카드 한번 긁는게 편하다는 상인이 많으며, 소비자도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얻는 할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서울페이에 끌릴 요인이 없기 때문
- 서울페이는 서울시가 행정력을 앞세워 민간이 주도해야 할 결제시장에 진출했으니 심판이 선수로 뛰어든 격으로, 서울시가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실효성 없는 서울페이에 목말 게 아니라,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 근본 해결책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관제 마케팅에 시민혈세 낭비되는 서울페이의 문제점 지속 제기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방안 마련 노력

경제 위기

뿌리까지 썩어가는 신적폐 청산을 위한 특단 조치 마련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 감사원의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능력의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체의 평가절차 없이 2018년 3월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하면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허술했다고 평가
- 감사원은 서울시에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해임, 전환 업무를 담당한 관련자들에 대해 문책, 일반직으로 전환된 1285명에 대한 업무 강화 방안 마련 등을 통보했으나, 서울시는 승복하지 않고 재심의 청구

▶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 친여 인사 일감몰아주기

- 감사원의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감사 결과, 서울시가 친여 운동권 인사가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 3곳에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독점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거나 사후 감독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에 주의 조치 통보

▶ 서울시에 신적폐 청산을 위한 특단 조치 마련 촉구

- 감사원 감사 결과로 서울시의 정책실패와 수많은 신적폐가 드러났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서울시의 행태를 비판하고, 지자체의 뿌리까지 썩어가고 있는 신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보조금 전액 추징, 배당이 가능한 모든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 사업 특혜를 없애는 등의 특단 조치 마련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서울시의 조치 사항 지속 점검

- 서울시의 문제가 있는 인사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보조금 전액 추징, 배당이 가능한 모든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 사업 특혜 차단을 위한 조치 사항 지속 점검

헌정질서 파괴

경찰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진실규명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경찰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규명 촉구**

- 버닝썬 수사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었던 윤규근 총경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5년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1년간 근무해 이른바 ‘친 여권인사’로 알려진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시절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윤 총경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 경찰청장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는 다짐에 따라, 150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돼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윤 총경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 외에는 밝혀낸 게 없이 사건이 종결
-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최대 주주인 WFM이 2014년 큐브스에 투자했고, 윤 총경이 과거 큐브스 주식 수천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윤규근 총경을 구속하면서, 경찰의 수사력 한계와 제 식구 봐주기 논란 확산
-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경찰청장이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다짐한 버닝썬 수사가 왜 흐지부지됐는지, 누가 무엇을 감추기 위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는지에 대해 진실규명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 지속 점검**

안보·외교 붕괴

미대사관 난입 사태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미 대사관 난입 사태에 대한 경찰의 대처 미흡 문제 제기 및 철저한 수사 촉구

- 반미·친북 성향 학생 단체로, 2017년 3월 ‘한국대학생연합’, ‘대학생노래패연합’ 등 대학 운동권 단체들이 연합해 만들어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지난 10월 18일 오후 2시 50분경,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덕수궁 옆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난입한 후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기습 침입 농성 사건 발생
- 당시 경찰은 시위대가 철제 사다리 2개를 들고서 대사관저 담벼락으로 향하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무단 침입이 이뤄진 이후에도 시위대에 여성이 포함 됐다는 이유로 여성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상황을 방치
- 동맹국인 미국과의 외교를 악화시키는 미국대사관저 기습 침입 농성 사태와 관련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 지적, 배후 조종·획책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구,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미국 대사관저 난입 사태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및 배후 조종·획책 세력에 대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 지속 관심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재고 및 대안 제시

☑ 주요 내용 및 성과

▶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재고 및 대안 제시

- 2018년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을 오는 2022년까지 10조여원을 들여 태양광 3GW 등 총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발표하였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태양광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리며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태양광·풍력으로는 지역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며 “정치 쇼”라고 반발
- 새만금은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수상 태양광 사업은 경제성도 낮고, 더 큰 문제는 태양광 패널 문제로서 새만금의 태양광발전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데 20년 뒤 패널을 걷어 내야해서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을 지적하고 사업 재고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새만금의 관광지 개발 등은 적극 지원하되, 태양광의 부작용과 역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 자유한국당은 전북을 농·생명 특화 금융 중심지로 조성하고, 전북의 소재 산업과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우리 당의 공약이었던 만큼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포퓰리즘 위선

주민참여예산을 특정 정치세력에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 중단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민혈세인 주민참여예산을 특정 정치세력에 위탁하는 행태 중단 촉구

-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 시의 경우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중 일부에 대한 편성 및 집행 권한을 옛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인사들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에 위탁
-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지원하는 기구로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만들고, 센터 운영을 민간 시민단체인 ‘자치와 공동체’에 맡겼는데, 이 단체 대표 및 간부들 상당수가 정의당 출신 인사들로, 주민 참여예산 취지와 별개로 특정 정치세력에 위탁한 것은 문제
- 민주당과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공조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자체 권한인 예산 편성권까지 사실상 정의당 세력에 넘겨주면서 선거연대를 통한 ‘총선 승리’를 꾀하는 것”으로, “수백억원의 국민혈세를 민주당·정의당의 ‘연대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 인지 문제 제기 및 특정 정치세력에 주민참여예산을 위탁하는 행태에 대해 중단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주민참여예산,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 중간조직(센터)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꼭 필요하다면 특정 정치세력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위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 필요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미흡 대처 지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인천시의 미흡 대처 지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 인천시의 전체 상수도관 가운데 14.5%가 30년을 넘겼으나, 교체율은 0.6%에 불과하고 개량률은 아예 제로인 상태로서, 인천시민들이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으면서 인천시의 초기 부실한 대처와 임기응변의 행정으로 인한 불신은 극에 달하고, 구체적인 매뉴얼 없이 인천시민의 생명줄을 경시하는 인천시 행정은 지탄받아 마땅
 - 또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촉발된 인천 식수에서 우라늄과 발암물질 함유량이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수도시설에서 채수한 식수 수질검사 결과 우라늄 농도가 기준치인 0.03mg/l 을 초과해 0.0679mg/l 을 기록) 수질 논란이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장이 식수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깨끗한 물을 책임지고 공급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
 - 최근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보상안을 발표함으로써 수용할 수 없는 피해주민들은 집단소송을 검토하는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천시가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의 행정 신뢰성 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장에게 식수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깨끗한 물을 책임지고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속 요구 및 점검

공동체와 국민 분열

총선을 앞둔 민주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 연구원과의 야합 중단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민주연구원과 지자체 연구원 간의 업무협약은 야합으로, 지자체 연구원의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촉구
 - 정치적 사안에 전략보고서를 내고, 총선전략을 마련하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지역발전방안을 연구하는 광역단체 부설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순수한 정책협약으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임에도, 이러한 야합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
 - 민주연구원과 지자체 산하 연구원 간 ‘총선용’ 업무협약 등 주요 정치이슈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편향적인 선거법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선거관리에 힘써야 할 중앙선관위가 좌파정권 장기집권에 기여하는 ‘사적 기관’으로 전략한 것은 아닌지 우려 제기
 - 또한 중앙선관위가 정당과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자체가 총선을 앞두고 연합전선을 이룬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중앙선관위에 독립성 지속 요구, 지방연구원의 정치독립성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재옥, 19.6.24)」 조속 통과 추진

경제 위기

강원도 산불 원인 관련 조속한 경찰수사발표 촉구 및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요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강원도 산불 원인 관련 조속한 경찰수사발표 촉구**

- 752억원의 재산 피해와 1696명의 이재민을 낸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지난 4월 4일 산불 발생 이후 피해 주민들은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며 수차례 집회를 열고 있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
- 경찰이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6월 초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산불이 난지 6개월, 한전 속초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행한 지 다섯 달,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된지 석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강원도 산불 원인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이 막대한 산림 피해와 삶의 터전을 잃은 산불 피해 주민들이 애만 태우고 있고, 수사 결과 발표가 있어야 손해사정사의 피해조사도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 촉구

▶ **강원도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촉구**

- 막대한 산림 피해와 삶의 터전을 잃은 산불 피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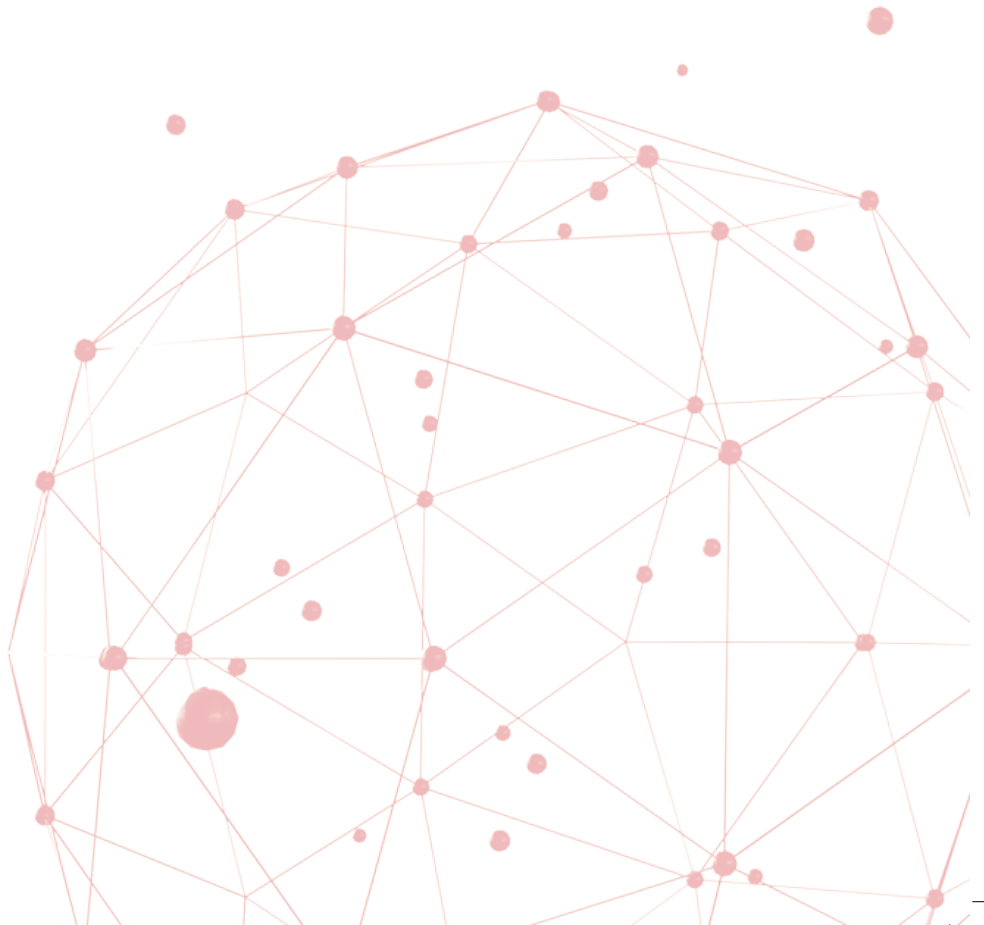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강원도 산불 원인 관련 조속한 경찰수사발표 지속 촉구, 강원도 산불 피해주민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위한 특별법 제정안(이양수, 19.05.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채익,19.05.31)」 조속 통과 추진**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국감 시작 전부터 비난을 자초한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부당거래’

- 국정감사를 농락할 수 있는 도박판과 같이 생각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 문체부·문화재청의 사전 국감 대책회의 개최 사건(9.26)
-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비판에도 민주당은 정례적 당정협의였고, 여·야 쟁점이 없는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주장
- 문체부와 문화재청에서 해당 회의를 위해 제작한 자료집에는 여당을 대상으로 한 국감대책회의라고 표기, 정부 부처 인사와 현 정권 실세 의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구차한 변명임이 밝혀짐

▶ 여당의 독선적 진행에 의해 파행으로 시작된 통한의 2019년도 국정감사

-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정당한 의사진행발언조차 막은 여당 위원장의 편향적 행태, 의사진행발언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항의에 퇴장 조치하겠다고 겁박하는 여당 위원장의 독선적 행태로 인해 국정감사 첫날부터 파행
-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상황에서도 여당 위원장의 지시로 문체부장관은 야당 의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업무보고를 진행함

▶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부도덕·불공정 실태 지적

- 문재인정부 체육농단 ‘학교체육진흥회’의 실태, 문재인정부의 일방적 북한바라기 체육 교류 실태, 연합뉴스와 뉴스통신진흥회의 편향성, 문재인정부 좌편향 기관장의 편향적 기관 운영 실태, 문재인정부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에서의 불공정 실태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
- 문재인정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정책에서의 실정 부각
- 문체부·문화재청과 소속·공공기관의 부도덕·불공정 실태의 문제점, 위법성 지적

헌정질서 파괴

문재인정부 체육농단 ‘학교체육진흥회’의 실태 지적

☑ 주요 내용 및 성과

▶ 문재인정부 체육농단의 정점, ‘학교체육진흥회’의 문제점 지적

- 학교체육진흥법에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 법에 근거한 학교체육진흥원과는 무관한 ‘학교체육진흥회’라는 사단법인이 학교체육진흥원 행세를 하고 있음을 지적
 - 학교체육진흥원 설립을 두고 기재부와 논의했으나, 기재부의 예산과 인력지원 확보의 어려움 의견으로 반려됨에 따라 우회적 방안으로 ‘학교체육진흥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정부의 주요 체육 정책과 사업에 관여한 것임
- 민간 사단법인인 ‘학교체육진흥회’가 대한체육회의 집행과정에 끼어들어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스포츠혁신위의 소년 체전 폐지 권고 이후의 소년 축전 사업을 진흥회가 맡으려 한다는 의혹 제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에 따른 공모나 입찰 절차 없이 국가의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태의 위법성 지적
 - 정부보조금 6억원, 17개 시도교육감 각출로 3억 4천만원, 총 9억 4천만원 받음
- 특정대학의 체육학과 출신의 전횡, 모 여권 인사 관여 의혹 제기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학교체육진흥회 관련 예산 면밀 검토

안보·외교 붕괴

문재인정부의 일방적 북한 바라기 체육 교류 실태에 대해 강력 비판

☑ 주요 내용 및 성과

▶ 평양에서 개최된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 논란에 대해 강력 비판

- 남북 월드컵 예선전에서 보여 준 북한의 강압적 태도와 경기 운영에 대해 강력 비판, 북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 항의 거듭 촉구
- 무관중·무중계·무취재 등 북한의 일방적 경기 운영 방식은 아시아축구연맹(AFC)의 가이드라인 위반임을 지적, 북한에 대한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징계 촉구
-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북한의 비인격적 통제 행위, '테러축구'라고 언급될 만큼 과격하고 편파적인 북한의 경기 진행 방식에 대해 강력 비판
-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하는 정부 부처 및 관계자들의 답변에 강력 항의
- 문재인정권의 '일방적 북한 바라기 교류 실태'에 대해 강력 비판, 시정 촉구

▶ 향후 남북 체육·문화 교류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 촉구

- 불확실성에 있는 남북관계에 우리 스포츠, 우리 국민을 맡길 수 없음
- 갑자기 돌변하는 북한의 태도에 향후 문화·체육 교류 전면 금지 강력 촉구
-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에 대해 반대 의견 표명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북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력 항의 촉구
- ▶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북한에 대한 징계 촉구
- ▶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경기 전체 영상에 대한 공개 촉구, 강력 추진
- ▶ 사태의 심각성·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후 남북 체육교류(2020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진출, 2032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반영

연합뉴스·뉴스통신진흥회의 정치적 편향성 지적

☑ 주요 내용 및 성과

▶ 연합뉴스·뉴스통신진흥회의 정치적 편향성 지적

- 연합뉴스 경영진에 대한 인선 권한이 있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의 정치적 편향성 지적
- 뉴스통신진흥회 홈페이지 이사장 인사말, 이사장의 SNS에서 심각한 정치적 편향 발언 등에 대한 문제점 비판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연합뉴스 임원진의 정치적 편향성이 연합뉴스의 보도, 뉴스편집, 인사 전반의 좌편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력 비판
- 연합뉴스 기자들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의 편집권 외압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질의 및 확인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좌편향적 운영에 대해 강력 시정·개선 촉구

- 연합뉴스와 뉴스통신진흥회의 좌편향 운영에 대해 연합뉴스 경영진, 문체부 장관 등에게 강력 시정 촉구
-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가 타 언론사에 미치는 영향력 강조, 공정성 및 공영성 촉구, 개선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검토
- 관련 법안 개정 검토

‘불공정’ / 안보·외교 붕괴

문재인정부 낙하산 좌편향 기관장의 편향적 기관 운영 실태 지적

☑ 주요 내용 및 성과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 개편과정의 편향성 실태 비판

- 대한민국 역사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는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 38도선 이남에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기재한 역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이며, 이 주장을 고수한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은 임명될 때부터 비판과 우려의 의견이 있었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 개편 방향의 역사 왜곡, 편향성 지적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편향되고 왜곡된 자원봉사자 교육 및 교육자료의 문제점 지적

▶ 국립현대미술관장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시비, 편향적 운영실태 비판

- 국립현대미술관장 공모 과정에서 역량 평가를 통과한 후보자 탈락하고, 역량평가에서 탈락한 윤범모 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강력 비판
 - 윤범모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장 후보자를 위해 문재인정권이 역량 재평가를 실시하자, 무리수를 둔 인선이라고 미술계 안팎의 거센 비판이 있었음
-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 작품을 전시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실태 지적

▶ 인민복 빼닮은 문화재청의 새 근무복 문제점 지적

- 인민복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문화재청 궁능 직원의 새 근무복에 대한 비판, 강력 시정 조치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상설전시실 개편 과정에 대한 지속적 점검, 문화재청의 근무복 시정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 시정 요구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 검토 및 예산 반영

‘불공정’ / 공동체와 국민 분열

문재인정부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과정의 불공정 실태 지적

☑ 주요 내용 및 성과

▶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위법적 실태 지적

- 무형문화재 전통무용 분야 보유자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논란
 -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황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심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심의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
 - 무형문화재 보유자 심사에서 위임장을 제출하고 이석한 문화재 위원 위임장이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화재청이 근거로 내세운 판례와 법률자문 결과에서도 심의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보유자 선정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 지적
 - 무형문화재 운영지침에 의결방식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로 하게 되어 있고, 투표 결과는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심의 의결을 무기명 투표로 한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
- 전통무용계에서 지속적으로 불공정 논란이 제기 되었음에도 문재인정권이 무리해서 추진하려는 목적과 배후에 대한 문제 제기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과정 전반의 위법성,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관계자 처벌 요구

-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심의 과정 속기록 등 자료요구를 통해 사실관계 분석, 공정한 재심의 촉구
-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주요 내용

무관심·미숙한 文정부의 농정정책

- 농·어업 분야의 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FTA체결로 인한 농산물의 대외개방가속화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경쟁력을 잃어 가고, 가축 질병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는 상황이며,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한 세 번의 태풍으로 인한 어민들의 양식시설, 어선, 항만 등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문제 등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해 있음에도
 -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ASF)417,000마리를 살처분 하고도 원인도 모르는 방역 구멍
 - ‘개발도상국 지위 상실’이라는 위기 상황을 농·어업인에 전가만 하는 외교적 미숙함과 정부의 무대책
 -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 이행을 위한 막무가내식 정책결정인 풍력단지 조성으로 산림훼손과 해양·양식 자원의 황폐화
 - 함박도 부실 실태조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해운사 지원의 공정성 문제제기 등의 문제점을 나타냈음
-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미비한 정부정책을 점검하고 생산적 대안 제시 및 우리 농·어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

-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
- ‘농어업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경제 위기

방역당국의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사후약방문”식 늑장대책

☑ 주요 내용 및 성과

▶ **정부 ASF 늑장대책 북한 눈치보기**

- 발생현황 : 경기 9건(파주, 연천, 김포) 인천 5건(강화), 야생멧돼지 23건
- 피해현황 : 중국 18년8월3일 최초 발생, 북한은 19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발병 사실을 알렸지만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2019년 11월 11일 현재 417,000두 살처분·수매·도태 조치
- 추가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 사체서 잇따른 바이러스 검출로 양돈농가는 “지뢰밭 걷는 심정”
- 북한 눈치 보기로 인해 북한 유입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국방부·통일부·환경부의 안일한 대책 비판
- 강화도 및 파주·김포·연천 양돈농가의 모든 돼지 살처분으로 ‘쓱대밭’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양돈가 실질적 지원대책 점검**

- ASF 발생원인과 전파경로에 대한 조속한 원인분석 결과 발표
- ASF·AI·구제역 등 동물전염병 방역관리 업무를 수의방역 담당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로 일괄 이관
- 수매,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 제한 기간 최소화 및 피해농가 보상책 마련 (휴업보상금·생계안정자금·합리적인 살처분 보상기준 등 지원대책)
- 해외동물보건기구(OIE)협조와 감염실태 점검 등 남북방역 공조 촉구
- 살처분 매립으로 인한 2차 오염 대비 등 요구

경제 위기

산림훼손은 관심없는 '막무가내식' 신재생에너지 정책 결정

☑ 주요 내용 및 성과

▶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허상

- 최근 3년간 3,441억원의 국가예산으로 68,915ha 면적에 대해 조림사업 실시
2019년 산림청 예산 6%가 조림사업에 투입,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해 벌채를 하는 모순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태양광 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 면적1,227ha
2018년 한해 동안만 2,443ha 태양광 설치 전용 허가

- 뿐만 아니라 인공조림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등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 개정 등 文대통령의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을 위해 '육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해 법까지 바꿔 가며 추진하겠다는 여당과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 결정 지적

※ 원자력 발전 1기의 발전용량 (1GW)과 같은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500만㎡ (여의도 면적의 1.7배) 부지 필요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정 점검

- 현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행 이후 태양광·풍력 발전 보조금액은 2016년 7,275억 원에서 2018년 1조 877억 원으로 2년 만에 3,601억 원 (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탈원전 정책과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발생하는 과다지출은 결국 국민 혈세로 총당하거나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
-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한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 저지 및 지역 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한 허가요건 강화

경제 위기

현 정부의 성급한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농업·농촌 휘청

☑ 주요 내용 및 성과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 경영 악화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농업계 어려움 가중
 - APC(산지유통시설) 평균 선별인력 최저임금 26.3% 증가
 - 주 52시간 근무 현재 적용대상 APC가 14개소(300인 이상)에 불과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축·수협 등 생산자단체들도 인건비 증가로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농번기에 일당을 주고 노동력을 고용해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농가들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엄청난 부담
- 농산물의 특성상 비용의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적용 등으로 인한 비용의 상승은 고스란히 농민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업의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및 농·어업 주52시간 제외

※ 독일은 '계절노동' 조항을 두고 가을 수확기에 한해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거나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고 있음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하기 위한 농림부와 농협의 선제적·주도적 대응 촉구
- 법률 개정
 - '농업분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법률' (201590, 이양수) 농해수위 계류 중
 - '최저임금법 개정안' (2016968, 이만희) - 환노위 계류 중

경제 위기

쌀 변동직불금 미지급, 무책임한 정부·여당

☑ 주요 내용 및 성과

▶ 쌀 변동직불금 관련 현황

- 쌀 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에 비해 시장 가격이 낮으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로 농가소득 안정화 지원 제도임
- 2005년 도입된 이래 매년 2~3월에 지급돼 왔으며, 가장 지급이 늦은 시기인 2011년에도 3월 28일이었음
- 이번 쌀목표가격이 210,000원 이하로 결정될시 쌀생산 농민에게 변동직불금으로 지급될수 있는 금액은 0원임.
- 농민들은 이번 쌀목표가격은 농민들의 역차별(도시근로자 임금상승률 대비 농산물 상승)에 대한 보상 및 “쌀값 현실화”과정이기예 80kg당 240,000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고 주장

※ 자유한국당 80kg/ 226,000만원 주장
민주당 80kg/ 214,000만원 주장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조속한 쌀 변동직불금 지급 요구

- 조속한 쌀 변동직불금 지급과 직불제 개편 관련, 文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있는 모습 요구
- 국가예산 대비 3%대로 감소한 농정예산의 정상화를 위한 농정예산 확대 촉구

경제 위기

어업분야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세 비과세' 추진

☑ 주요 내용 및 성과

▶ 열악한 어업 환경

-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 어가인구의 지속적 감소, 어촌인구 고령화, 수산물 수출입 편차 심화로 어업 전반에 대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어업분야에 대한 세제혜택이 적다는 문제점 지적
 - 국내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2010년 123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91만 톤을 생산, 어업 생산량 100만 톤이 무너졌고, 생산량 감소에는 바닷모래 채취·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등 바다 환경 훼손 영향
 -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 조업 담보금 및 압수 어획물 판매대금은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을 위한 직접 지원에 사용되지 못하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등 어업은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같은 식량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어업의 세제 혜택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
- 어업분야의 소득안정을 위해 연근해·내수면 어업 등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대상으로 추진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법률개정 추진

- 법률개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김성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경제 위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방만 경영 '도를 넘어 도덕적 해이' 심각

☑ 주요 내용 및 성과

▶ 해수부의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실 감독

- 지난해 7월 설립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 1년여 만에 2조원 넘는 금액을 해운사에 지원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관리지도·감독 부실 질타
 - 투자지원 및 보증 분야 4개 사업은 모두 공사 내부의 투자보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원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나 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공사 소속 본부장 3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과반수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사실상 사장이 지원 여부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점 지적
 - 한국해양진흥공사 비상임이사 선임과정에서 1등을 탈락시키고 꼴찌를 붙이고, 금융공기업에 금융경제 전문가가 단 한명도 없는 선정방식 지적
 - 공사 임직원들은 지난해 6개월을 일하고 9억 원가량의 성과급 잔치 등 예도 이를 감독해야 할 해수부가 감독은커녕 심의위원회 회의록마저 받지 않고 있는 문제점 질타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보증심의위원회 운영 개편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투자보증심의위원회에 사장을 배제하고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개편 추진
-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 강화 조치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산업·중소·벤처기업 관치 정책의 실상 및 대안제시

-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산업 정책으로 인한 산업계 위기 신호 대비 적극 대응과 정책 대전환 제안
- 퍼주기과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R&D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 지적 등
-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인의 피폐한 현실 조망 및 개선 촉구
- 등한시되는 뿌리산업의 중요성 및 정책적 관심 제고 요청
- 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비자발적 수백억 성과급 환수해 '공공상생연대기금' 친정부 성향의 재단 설립 및 불투명한 기금 사용 고발

▶ 재앙적 탈원전 정책의 폐해와 합리적 에너지 정책 촉구

- 재앙적 탈원전 정책의 불안정한 전력 공급·에너지 안보 미확보·비효율성·환경파괴 등 문제점 집중 제기
- 재앙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발전 공기업·원전산업·학계 생태계 붕괴 문제 제기
- 신재생에너지 과속 정책으로 인한 이권 관련 비리의혹·환경파괴·국민부담가중 여론 환기 및 기저 에너지 정책의 안정적 공급에 더한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정책 제시

▶ 준비되지 않고 현실성 없는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비판 및 대안 제시

- 충분한 경고음이 울렸던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미흡한 초기 대응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현실성 없는 R&D 정책, 물량공세로 일관하는 피해 예상 기업 대책에 대한 현실 고발과 함께 대안 제시

▶ 조국 前 민정수석 의혹 규명 노력

- 조국 前 민정수석 관련 조국 펀드의 정부 국책 사업 미공개 정보 선취득 의혹 등 제기해 여론환기
- 조국 펀드 관련, 피투자 회사에 대한 수주 특혜 등 문제점 지적
- 조국 펀드 피투자 회사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 특혜 가능성

경제 위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산업 정책으로 인한
산업계 위기 신호 대비 적극 대응과 정책 대전환 제안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산업 정책과 산업계 위기 신호 대비 적극대응과 정책 대전환 제안**
 - 문재인 정부는 수출감소와 실업률 등 하강하는 경제 지표와 함께 디플레이션 우려에도,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등 잘못된 경제 인식 여전
 - 국내설비투자 역시 작년 2분기부터 지속 마이너스, 중산층 비율도 58.3%로 60% 이하가 된 것은 사상 처음, 중소기업의 해외 탈출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하는 등 내수 경기의 하락은 소주성 정책·최저임금·주52시간제·재산세 증부세 등 사실상 증세 문제 등으로 청와대의 경제 무능력자들의 변화가 절실 (출처: 정유섭 의원 국감 자료)
 - 한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이 필요. 기업가 정신 발휘를 위한 반기업 정서 등 조장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절실. 또 주요 경제 인사의 캠퍼더 인사도 혁신해야 함
 - 에너지 관련 정책은 포항 지열 발전 지진, 강릉 수소 폭발 사고 등 사고로 점철
 - 공공기관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 비자발적 환수로 결성된 수백억 원의 친정부 성향 재단의 '공공상생연대기금', 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상납 확인, 절차 미비 공공기관 문제점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소주성 정책·최저임금·주52시간제 등에 대한 산업부와 중기부 대응 관련**
 - 산업부·중기부 장관이 산업·중소기업벤처계 현장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청와대 및 여당에 관련 개선 건의 여부
 - 산업 규제 개혁의 발전 과정
 - 주요 경제 관련 인사의 캠퍼더 인사 변화 추이(김동렬 중소기업연구원장의 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중기부 감사, 장성현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선임과정 감사원 감사 예정, 최창희 흡소핑 사장의 경영난맥상 관련 모니터)
 -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사적인사 전횡, 방만경영 등 문제 감사원 감사 필요
 - 강릉 수소 폭발 사고 관련 감사원 감사 필요
 - 공공상생연대기금 조성, 사용처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예정

경제 위기

퍼주기과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R&D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 지적

☑ 주요 내용 및 성과

▶ 퍼주기과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R&D 정책으로 인한 문제점 지적

- R&D 내년에는 24조가 넘고, 2023년도에 30조원 투자 예정이며 GDP 대비 R&D는 4.6%로 1위로 양적인 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출처 : 이종배 의원 국감 자료)
- 질적인 면에서는 논문 SCI급 이상은 33위에 불과, 기술수준 29위, 기업혁신역량 35위 등으로 하위권
- R&D 부정수급, 성공률 높은 R&D 과제 위주의 편성, 낮은 사업화 비중 등 문제점 종합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중장기적 R&D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선정과 분석 방식의 근본적 변화

- 단기적 R&D 성과 대신 중장기적 R&D 역량 강화 중요성 강조
- R&D 관련 각종 통계 발표시, 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한 수치 인용
- R&D 과제 면밀한 선정 및 성과 분석의 기준틀 재작성 주문
- R&D 비리 관련 부당금액 환수 및 강화된 처벌 등 고려
- 파나시아 R&D 감사원 기망 의혹 감사원 감사 요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부정 수주 등 의혹 감사원 감사 요청

경제 위기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한 현실 조망 및 개선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한 현실 조망 및 개선 촉구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년안에 폐업률 31.2%, 자영업자 경기판단 CSI는 지속 하락
- 예금취급기관의 자영업자 대출금 역시 2017년 2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174.5조원에서, 213.6조원으로 39.1조원 증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 자영업자 수도 23,939명에서 34,288명으로 10,349명 늘어남 (출처: 이종배 의원 국감자료)
-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2% 안팎으로 금융위기이던 2009년 0.8% 이후 10년 만에 최악이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연속 수출 감소
- 일본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는 90년대와 한국의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비교하면,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출처: 정유섭 의원 국감자료)
- 중기부는 관련 문제 해결 보다는 제로페이 정책 실패를 SPC 설립으로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책임회피만 일관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문재인 정부의 산업 관련 정책 대전환 필요

- 선택적 근로제, 탄력적 근로제의 필요성, 노사합의를 통한 근로시간 조정
- 국내 경기 상황에 적합한 최저임금인상의 속도조정
- 기업 세제 혜택 등 건의 내용 전달 1) 상속세 인하 2) 법인세 인하 3) 규제 개혁
- 제로페이 정책 취소와 SPC 관련 설립과정, 운영 등 감사원 감사 필요
- 공공상생연대기금 조성, 사용처 등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예정

등한시되는 뿌리산업의 중요성 및 정책적 관심 제고

☑ 주요 내용 및 성과

- ▶ **등한시되는 뿌리산업의 중요성 및 정책적 관심 제고**
 - 뿌리산업관련 2018년도에 비해 감소한 예산관련 문제 제기
 - 소공인 등 중요 기술 보유자에 대한 정부의 미진한 대책 질타
 - 최근 문제되고 있는 소·부·장 관련 뿌리산업의 중요성 방증으로 제시
(출처: 김규환 의원 국감자료)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뿌리산업 예산 증액 및 정책 우선순위 반영**
 - 뿌리산업에 대한 예산 증액
 - 소공인 등 중요 기술 보유자의 장인 기술 인정과 지원 방안 마련
 - 각종 기술 대전 등의 국내 유치 등 기술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차원 노력

경제 위기

재앙적 탈원전 정책의 폐기와 합리적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 주요 내용 및 성과

▶ 재앙적 탈원전 정책의 불안한 전력 공급, 에너지 안보 문제 등 근본적 문제 제기

-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기저 발전으로써 원자력 발전 등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 원전가동 중단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인해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 증가
-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해외에 전량 수입 의존하고 있는 LNG 발전 등의 에너지 의존 가능성 등 문제
- 비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과속 정책 관련 발전입지 확대·각종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 국민부담 가중 문제 제기
- 원전 산업 관련 대기업·협력업체 등 연쇄 경영 악화와 함께 인재 유출, 발전 공기업 비효율 경영, 원전 관련 학과 입학 감소 우려 등
- 태양광 사업 관련 친정부 인사에 대한 수주 혜택 및 봐주기 의혹 등
- 신재생에너지 과속 정책으로 인한 화재원인 미규명된 ESS 과다 설치 등
- 천문학적 적자 경영 중인 한전의 대통령 공약사항인 한전공대 설립 주도 관련 비합리성·무책임성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재앙적 탈원전 정책의 폐기와 합리적 에너지 정책 대안 제시 등

- 경제성 이유로 가동 중단된 월성 1호기 관련 경제성 판단 등에 대해 국회에서 의결된 감사원 감사를 통한 의혹 규명
- 총 사업비 1조 515억원, 충남 안면도의 축구장 7,870배 부지 규모 태양광 비리 ‘아마데우스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출처: 곽대훈 의원 국감자료)
- 가동 중단 되었던 ESS 306개소 가동 여부,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가동 여부 확인, ESS 화재 원인 규명 관련 경과(출처: 이철규 의원 국감자료)
- 한전공대 사립대로 재정지원 불가능, 관련 개교시 불법 사항
- 탄소배출량 저감 등 국제 사회 환경 규칙 이행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비판 및 대안 제시

☑ 주요 내용 및 성과

▶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비판 및 대안 제시

- 일본 수출규제 관련 미비된 대처 상황 지적
- 소·부·장 대책 관련 국산화 성공에 대한 실증과 향후 발전 가능성 타진
-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기술 개발 관련 일본소유 특허 회피가능 여부 확인
- 정부 차원의 대응이 아닌, 기업 책임만 따지는 회피성 정책
- 품목 선정에 있어 일본 위주의 근시안적 대응 문제점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소·부·장 정책의 현실화, 실질화, 지속화 등 강조

- 소·부·장 국산화 관련 지속성과 대기업 연계의 필요성 제시
- 해외 특허가 현재 12.4% 비율에 불과, 소·부·장의 해외 특허 인정 비율 상향 노력 필요
- 경제 정책 근원에 대한 변화가 필요 역설
- 일본 뿐만 아니고, 세계 차원의 근본적 소·부·장 정책 추진

헌정질서 파괴

조국 前 민정수석 의혹 규명 노력

☑ 주요 내용 및 성과

▶ 산중위 소관의 조국 前 민정수석 각종 의혹 규명 노력

- 자동차 부품 흡음재 회사 익성이 조국 前 민정수석 2년 동안 35억 R&D 예산 수취, 관련 예산 91억 중 40% 해당(출처: 윤한홍 의원 국감자료)
- 익성이 2차 전지 투자하고 난 뒤에 청와대에서 육성 산업으로 선정해 관련 사전 정보 취득 의혹 제기
- 문재인 정부가 조국 前 민정수석 수호에 국정 동력을 낭비하면서 경제 문제를 도외시한 문제 집중 제기
- 조국 前 민정수석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중 지도교수였던 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 문화재단 이사장에게 미신청한 장학금을 수여받은 다른 사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는 한편, 이사장 임명 관련 의혹 등 설명 요구(출처: 정유섭 의원 국감자료)
- 주복원 前 한전산업개발 대표이사, 임기수 前 주식회사 지엔텔 대표에게 조국 펀드가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 수주한 경위 탐색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수상한 R&D 자금 흐름 등 관련 감사원 감사 검토 등

- 산업부의 연도별 익성 R&D 지원액과 결과 표로 제출 요구
- 산업부에 관련 내용 감사원 감사 청구 권고
- 윤순진 이사장 국감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 검토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개편’ 단일안 제시 강력 촉구

- 책임있는 정부라면 국민연금 개편의 단일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가지안, 경사노위는 단체별 입장만 적시한 3가지안 제시. 문정권의 비겁하고 무능·무책임한 대표적 사례
- 작년 실시한 4차 재정추계보다 더욱 악화된 추계들이 발표되고 있는데도 현정부는 소득보장 강화에만 초점을 두며 미래세대는 나몰라라
- 국민연금 개편의 국회 논의는 정부의 책임있는 안이 제시될 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지금이라도 정부의 의지를 담은 단일안 제시 강력 촉구

※ 정부는 우리당의 지속적인 단일안 제시 요구에 기존의 입장을 바꿔 단일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부 토론 중’이라며 시간끌기 상태

▶ 국민보험료로 정권이 생색내는 ‘문재인 케어’

-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지난해 -1778억원으로 적자 전환됐고, 올해는 적자폭이 3조원으로 확대될 전망. 문케어 추진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기
- 문케어를 추진해도 정부는 법정준비금 10조원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정절감 비율을 기존 1%에서 2~3%로 올리는 불가능한 수치로 국민 눈속임
- 문케어 홍보를 위해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여론조사 실시
- 급여화 결정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의혹 제기 (급여화와 문케어 지지 딜 의혹)

▶ 일자리안정자금 무리한 수탁 문제 지적

- 복지부 사업도 아닌 일자리안정자금 추진 위해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무리한 수탁. 직원들 맹목적 희생 강요 당해
- 정권이 강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일자리안정자금이 압도적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개편’ 단일안 제시 강력 촉구

☑ 주요 내용 및 성과

▶ 문정권의 비겁하고 무능·무책임한 대표적 사례 ‘국민연금개편’

- 국민연금 개편 정부는 4가지안, 경사노위는 3가지안이 제시됨. 정부가 조정과 책임지는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상황
- 국회예정처는 최근 4차 재정추계 보다 더 악화된 2040년 적자전환, 2054년 기금고갈 예측 발표. 합계출산율 0.98 상황에서도 정부는 재정안정화에 대한 대책은 없이 소득보장 강화에만 집중
- 한국당의 단일안 제시 촉구에 정부는 정부의 역할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립해서 일정 정도의 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면피성 궤변만 주장하다 결국은 단일안 검토 예정
-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서 문정권은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임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안 추진

-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 국회 제출 일정 법률에 명시(18164, 국민연금법, 김명연)
-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투자 조항 삭제(07595, 국민연금법, 김승희)
- 기금운용위 독립성, 투명성 강화(19477, 국민연금법, 이명수)
- 연금사회주의 저지(11366, 국민연금법, 김종석 ※유사법안 김재원)

포퓰리즘 위선

국민보험료로 정권이 생색내는 '문재인 케어'

☑ 주요 내용 및 성과

▶ 문케어 추진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

-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지난해 -1778억원으로 적자 전환됐고, 올해는 적자폭이 3조원으로 확대될 전망. 문케어 추진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기
- 재정절감 비율 변경으로 법정준비금 유지한다고 눈속임
 - 법정준비금 10조원 유지 실패를 감추기 위해 재정절감비율을 기존 1%에서 2~3%로 변경. 지출효율화 1% 적용시 건강보험 재정추계결과 23년 누적적립금 7조4885억으로 10조원 유지 못한다는 사실 밝혀냄

▶ 문케어의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한 편파적인 여론조사에 6억 쓴 건보공단

-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만 강조해 정부와 건보공단이 원하는 답을 얻고서 문케어 찬성 여론 홍보

※ 건보공단이 18년 6월 추진한 여론조사 질문지 내용 :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문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 맞교환 의혹 제기

- “문케어에 대해 의사협회는 반대하지만, 한의사협회는 적극 지지하겠다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를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드려서 첩약 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되었다” 라는 영상 공개
-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과 밀접한 건강보험 급여화 과정이 객관적인 근거 하에 투명하게 이뤄진 것이 아닌, 문케어 찬성을 조건으로 이뤄졌는지 의혹 제기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문케어 우선순위에 밀린 의료사각지대 건보확대 추진

- 뇌전증, 중증아토피,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조속 확대 추진

▶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안 추진

- 건강보험기금화 (09852, 국민건강보험법, 김승희)
- 준비금 사용시 국회 동의 (09299, 국민건강보험법, 김상훈)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한 법류에 명시 (17713, 국민건강보험법, 김명연)

▶ 협약급여화와 문케어지지 딜에 대해서는 복지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 및 사법적 조치 검토

경제 위기

일자리안정자금 복지부 산하기관에 무리한 수탁

☑ 주요 내용 및 성과

▶ 복지부 산하기관이 일자리안정자금 실적 제고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

-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원래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이 위탁해 시행.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청와대 관심사업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맹목적 희생 강요

▶ 일자리안정자금이 건강보험 재정 위기 더욱 악화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액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147원에 달하면서 문재인 케어로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 중 일자리 안정자금 압도적으로 많아

- 보조금 부정수급 12만건(647억원)은 환수 결정. 이중 일자리 안정자금이 9만5977건(334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79.4%나 차지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최저임금 폭탄인상 때문에 생겨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부작용 강조

-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 본연의 업무보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챙겨야 하는 상황
- 일자리안정자금의 보조금 부정수급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정권의 무리한 추진 지속 문제제기

▶ 복지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 검토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지적

- 일자리상황이 좋아졌다고 주장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안이한 인식 지적, 30·40대의 일자리 감소 및 제조업 일자리 감소문제,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단기일자리 증가, 재정투입일자리의 한계 집중 부각
- 대책없는 52시간제 근무제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증인 및 참고인을 활용하여 증명. 탄력적 근로제 확대는 물론, 선택적 근로제와 특별인가 연장근로의 확대 등 대안마련을 주문

▶ 無대책 정책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 주문

- ILO협약 비준 관련, 입법보완조치 없이 일방적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에 대해, 현재의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보완입법 후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이루어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정으로 인한 쪼개기 알바, 일자리 감소 문제를 지적
-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편향적이고 무책임한 보 개방조치 이후, 새로 구성된 국가물관리위원회 역시 치수 로드맵 없이 이념에 빠진 편향구성. 보 개방에 따른 농민피해실태와 국가적 배상의 필요성 강조

▶ 부처 본연의 업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

- MBC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의성 쓰레기산 방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등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치해야할 문제에 있어서 안이한 대응으로 문제를 확산
-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대청호 주변 주민피해, 인천 수돗물사태로 인한 물관리문제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부처의 인식전환 필요성 강조

無대책 경제무능 심판

일자리 정책실패, 無대책 52시간 근무제, 밀어붙이기 ILO비준

☑ 주요 내용 및 성과

▶ **일자리 정책실패와 정부의 안이한 인식 지적**

-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음에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고용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궤변으로 일관
 - 경제의 허리인 3040이 무너지고 있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 함에도, 22조원을 투입한 재정일자리,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단기일자리 증가를 고용상황 개선이라고 주장
 - 수치로 드러난 통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함을 강조

▶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필요성 강조**

- 대책없는 52시간 근무제로 인하여 기업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토로
- 탄력근로제 확대만으로는 다양화된 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음
 - 선택근로제, 특별인가 연장근로 확대 등을 통하여 기업 활력 제고의 필요성

▶ **무책임한 ILO협약 비준 추진**

- 국내법과의 충돌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보완입법 없이 밀어붙이기
- 기울어진 현재의 노사관계에서 ILO협약이 비준된다면 기업과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청와대와 정부의 인식전환 촉구. 왜곡된 통계해석에 대한 수정 요구**
- ▶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지속 추진**
- ▶ **ILO비준과 관련하여, 기업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보완입법 추진**

줄속행정 심판

행정부처의 안이한 대응

☑ 주요 내용 및 성과

▶ MBC 직장 내 괴롭힘 문제

-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을 했음에도, 정작 근로자편에 있어야 할 고용노동부가 안이한 해석

▶ 의성 쓰레기산 방치

- CNN에 방영되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의성쓰레기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대통령은 연내 방치쓰레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였음
- 우리당 의원들의 조사결과, 환경부 위탁 불법폐기물 처리용역업체가 제때 소각 등의 처리를 하지않고 그대로 장소만 옮겨 적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환경부가 대행업체에 대한 감시소홀로 국민우롱
- 또한, 연내처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미흡
- 의성 쓰레기산의 경우 내년 4월까지 처리완료 확답

▶ 각종 안전사고,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능력 대응

- 포스코 사망사고, 물탱크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등 사전에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면 막을 수 있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뒷북대응으로 일관
- 허술한 성희롱 교육은 물론, 고용노동부와 공공기관에서도 버젓이 성희롱이 빈번하게 발생.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예방노력 필요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전국 방치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확인

▶ 적극행정을 위한 부처의 개선안 마련 주문

공정사회 확립

빈번한 불공정 사례

☑ 주요 내용 및 성과

▶ 고용세습 단체협약 유지

-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존재. 사법조치를 포함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

▶ 서울교통공사 관련

-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채용비리근절을 위해서라도 단호한 대처 필요

▶ 직업 훈련기관 부정수급

- 직업훈련기관 발생 부정수급이 19억원에 이르는 등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관리감독이 허술. 대책마련과 시정조치 요구

▶ 노조 채용 갑질

- 조합원 우선채용 등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며, 특히 민주노총은 95.7%가 우선채용. 고용세습조항처럼 반복될 소지가 있어 한 박자 빠른 대응 절실

▶ 육아휴직자 차별

- 육아휴직을 막거나 불이익을 주는 위법행위가 급증하고, 일부 지자체 산하공공기관이 차별을 일삼음. 부처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불합리한 처우규정 개선필요. 대체인력제도의 활성화 요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의 채용관련 불공정 조항 분석 및 대책마련

▶ 현장에서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

생활밀착형 환경대책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문제 해결

☑ 주요 내용 및 성과

▶ 바닥조명광고

- 공중에서 쏘는 바닥조명광고는 허가대상임에도 대부분 불법으로 시행. 빛 공해 관련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단속필요

▶ 섬유유연제 속 미세플라스틱 관련

- 국내기업은 기술개발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없는 섬유유연제 사용함에도 P&G는 미세플라스틱 있는 섬유유연제 사용. 환경부 및 해당기업의 개선노력 당부

▶ 영풍석포제력소 대기·하천 오염물질 배출

- 지속적인 오염문제 발생함에도 조업정지를 미이행하고, 창업주는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모럴해저드 심각. 근본적 해결위한 공장이전 검토 필요

▶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 배출 값 조작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 배출부담금보다 조작이 쉽다는 인식 문제. 환경부의 관리소홀도 한몫. 제도적 개선책 마련

▶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

- 생태보전 및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재검토 요구

▶ 대청댐 관련

- 댐주변 지원사업의 실질적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으며,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도 없이 지자체 임의대로 예산집행. 시정요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국민의 생활권과 직결된 환경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진행 될 수 있도록 사안별 제도개선 및 진행상황 점검

- ▶ 불법행위에 대한 부처차원의 엄정조치 및 사법처리 요구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 공공기관장 포함 이사회(218명)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9명)의 경력을 일일이 조사한 결과 캠퍼더 낙하산인사의 수는 작년 대비 180% 늘어나고, 유관경력이 거의 없어 전문성은 떨어지고, 채용과정도 불투명하여 의혹이 많음을 밝혀냄.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회사를 신규 설립한 결과 낙하산인사를 위한 자리를 늘리는 결과 초래
-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채용 및 전환 미해당자 채용, 채용과정상의 불공정성 문제(비공개채용, 평가절차 전무)등이 광범위하게 드러남. 또한 공공기관의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부담은 국민 몫으로 남게 될 것임
- ▶ 공공기관장 및 자회사 대표들의 비리, 갑질, 직권남용, 방만경영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규명함. 동생회사 납품독점비리가 탈로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경우 태풍 대비 국감장 이석 후 사후행적 관련 위증이 드러남. 그 외 공공기관장의 경우 욕설·폭언 등 부적절한 처신, 인사전횡, 집무실·사택 이전 등 예산낭비,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문제 등이 드러남
- ▶ 공공기관의 비리, 기강해이, 방만경영 문제도 심각함. 코레일 부실회계, 철도시설공단 불량납품 시공, 인천공항공사 입찰비리 및 임직원비리, 도로공사 김치납품 특혜비리, 구로뉴스테이사업 특혜비리, 건설사들 발코니확장 담합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함

- ▶ 공공기관이 강성노조에 휘둘리는 문제가 심각함.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장기농성, 코레일 편법복직 노조간부 주도 철도파업, 노동계 요구에 의한 정부의 인천공항공사법안 제출, 건설노조 횡포로 인한 LH 공공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월례비 상납비리 등을 집중 부각함
- ▶ 이념우선 정책을 밀어붙이고, 실정으로 인한 문제는 국민혈세로 메우는 폐해가 심각함. 꿈수증세용 부동산공시가격 인상,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인 분양가상한제, 있는자와 없는자를 편가르고 없는 자를 더 힘들게 하는 부동산정책, 최저임금인상·52시간노동제로 인한 일자리 급감은 단기알바 확대로 통계 부풀리기, 버스기사 52시간 노동제 및 택시월급제 시행으로 인한 문제는 재정투입으로 메우기 문제 등을 지적하고 정책전환을 요구

포폴리즘 위선

캠코더 낙하산은 늘어나고,
전문성은 떨어지고, 채용과정은 불투명하고

☑ 주요 내용 및 성과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자회사 22개 이사회 낙하산인사 비율 29.8%로 증가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자회사 22개의 경우 이사회 총원 218명 중 65명(29.8%)이 낙하산인사
 - 18년 36명(16.5%)→19년 65명(29.8%)으로 29명 증가, 작년 대비 180% 증가
 - 이사회의 낙하산인사 비율은 LH 33.3%, 코레일 35.7%, 인천공항공사 30.8%, JDC 44.4%, 코레일네트웍스 60.0%, 코레일로지스 60.0% 등
 - 낙하산인사 65명은 ①문재인 대선캠프인사, ②노무현재단·민노총 등 코드인사, ③지역위원장, 박원순·정세균·이해찬 측근 등 민주당 인사로 구성
- 정규직 전환 신규설립 자회사 9개의 경우 대표이사 9명 중 6명(66.7%)이 낙하산인사
 - 노무현·문재인 대선캠프인사, 민노총인사, 열린우리당·민주당 인사로 구성
 -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 신규설립이 낙하산인사용 자리 늘리기가 됨

▶ 직무 관련 유관경력자는 거의 찾을 수 없어 전문성이 떨어짐

▶ 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이사 채용과정은 의혹투성이거나 불투명

- 인천공항시설관리 대표의 경우 1차 공모 지원자 18명 전원 적임자 없음 처리 4일 후 재공고. 서류평가 5명 중 4등, 면접평가 5명 중 2등 임에도 불구하고 임명, 사장추천위원회에 현 민주당 지자체단체장 포함
- JDC파트너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자회사), KAB파트너스(한국감정원 자회사), LX파트너스(국토정보공사 자회사) 대표의 경우 서류·면접평가 후순위자임에도 임명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예산 및 법안으로 견제

포퓰리즘 위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 주요 내용 및 성과

▶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4촌 이내 친인척관계자 192명(14.9%)
- 일체 평가절차 없이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일반적으로 신규채용
- 공사의 재정부담 규모 및 자체조달 가능여부 미검토, 공사 재정부담 증가 공사의 손실액은 13년~17년 평균 약4,024억원, 누적손실액 13.8조
- 박원순시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수용 않고 재심청구 중, 국감에서 '친인척은 있지만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궤변으로 일관. 검찰수사 용의 질문에는 묵묵부답

▶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 공사 정규직 전환자 6명 중 친인척관계자 2명(33.3%)
- 협력사 신규채용자 중 공사 및 협력사 친인척관계자 93명. 이 중 공사 및 협력사 관리자금 친인척 44명은 비공개채용 등 불공정 채용자로 확인
- 공사 근무 52개 협력사 직원 9,781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 중이나 협력사 직원 중 정규직 전환자 3천여명(19.2현재) 대다수에 대한 공정채용 여부 확인불가 상황(채용서류·심사자료 미작성, 미보관, 폐기 등)
- 협력사 직원 중 다수의 불공정 채용자가 전환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 향후 정규직 전환에 부당 편승할 우려

▶ **NH(토지주택공사)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 정규직 전환자 1,353명 중 친인척관계자 93명(6.9%)
- 정규직 전환 대상 미해당 비정규직 근로자 318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선정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국토부 산하 전체 공공기관·자회사 '정규직전환 채용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
- ▶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채용비리' 관련 검찰수사 요구
- ▶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전 사장 '작년 국감 답변' 관련 위증죄로 검찰고발 요구

포폴리즘 위선

공공기관장 및 자회사 대표 비리, 직권남용, 방만경영

☑ 주요 내용 및 성과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위증, 직무유기, 국민기만 행위

- 태풍 대비 국감장 이석(10.2) 후 소재파악이 안됨. 사후행적 소명 사유서(10.3) 일부만 검증했는데도 허위임이 드러남. 국감(10.10)에서도 계속 위증발언

▶ 정덕수 건설관리공사 사장대행의 부적절한 처신, 직권남용

- 직원 욕설·폭언, 측근 10명 일괄특진 등 인사전횡, 임산부 야간근무 등 부당 노동행위, 직장내 성희롱 부당처리, 공사 규정위반 변호사 선임 등

▶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의 도덕적 해이 및 방만 경영

- 서울집무실 이전(3.5억낭비), 부산사택 이전(5천만원낭비), 공용 업무차량 독점사용 및 불법개조(1,200만원), 회사 청소노동자 사택 청소, 잦은 해외출장(1.6년간 6회), 드문 부산근무(월 1주일), 임직원 특급호텔 숙박 복지

▶ 국토정보공사 사장의 갑질, 운전기사 새벽·야간·휴일에도 수시 근무

▶ LX 파트너스 대표의 법인카드 사용액 30%가 전 출마지인 송파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상근감사, 부산 서구동구지역구에 정당현수막게첩

▶ 도로공사 외부인사 초청강연 좌파편향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위증에 대한 검찰고발 요구

▶ 정덕수 건설관리공사 사장대행 대상 국토부 감사, 해임조치, 형사고발 요구

▶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국토부 재감사, 검찰수사 요구

경제 위기

공공기관 비리, 기강해이, 방만경영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사업 조국펀드 관련업체 특혜비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친여인사 관련업체 특혜비리
- ▶ 코레일이 부실회계로 18년 1천억원 적자를 3천억원 흑자로 둔갑 공시
 - 공공기관 경영평가(19.6)에서 B(양호) 등급, 약3천억원 임직원 성과급 잔치 원칙 어기고 회계감사 의뢰 기관에 재무제표 작성을 맡겼기 때문임
- ▶ 인천공항공사 입찰비리, 임직원 비리, 자료제출 거부
 - 항공등화시설공사 입찰시 실적인정기준 미달 특정업체와 계약체결, 외압 의혹
 - 임직원 골프향응수수, 홍보실직원 공금유용, 공항귀빈실 이용자료 제출거부
- ▶ LH, 3기신도시 고양창릉지구 도면유출 관련 부동산 투기거래 밝혀냄
- ▶ 도로공사 친여인사 김치납품 특혜의혹
- ▶ 코레일·철도시설공단 등 4개기관, 철도안전 관리실태 심각
- ▶ 철도시설공단 불량부품 알고도 시공, 납품업체와의 유착의혹
- ▶ 구로뉴스테이(민간임대주택) 사업 규정위반 특혜비리
 - 우선협상대상자 자격미비 상태임에도 주택도시기금 투자 심사 통과
- ▶ 건설사들이 아파트 설계시 발코니확장을 전제로 꿈수 설계, 확장 강제화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사업 감사원 감사 및 태양광사업 특혜비리 검찰수사 요구
- ▶ 코레일 부실회계 관련 오염식 전 사장 및 손병석 현 사장 검찰고발 요구
- ▶ 인천공항공사 입찰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 및 검찰수사 요구, 임직원 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 요구, 귀빈실 이용자료 제출거부 관련 검찰고발 및 수사 요구
- ▶ 구로뉴스테이 사업 규정위반 특혜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 및 검찰수사 요구
- ▶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발코니 확장 관련 공정위 담합조사 요구

포퓰리즘 위선

강성노조에 휘둘리는 공공기관

☑ 주요 내용 및 성과

▶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요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농성 장기화

- 급여 30% 인상(연봉 3.7천만원) 및 정년 61세 연장 조건 자회사 정규직 반대 1,400여명
- 공사 직접고용 의무 확인 대법원 판결과 소송당사자 외 확대적용 고법 판단

▶ 코레일 노조파업(19.10)은 오영식 전 사장 말 한마디로 복직한 노조원¹들이 주도, 52시간노동제 도입으로 KTX 운행률 72.4%로 하락(16년 파업시 100%)

▶ 노동계 요구로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정규직전환 자회사 '공공기관화' 법제화를 위한 법안 제출

- 인천공항공사법 개정 없이도 현행 '공공기관운영법' 및 기재부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원하는 자회사 설립 및 수의계약 방식의 용역도급계약 체결 가능
- 문대통령 취임 3일후 첫 방문, 정규직 전환 공약 1호 사업장에 대한 체면 살리기 의도. 다른 정규직화 자회사들과 비교할 때 선례 없는 요구

▶ 건설노조 횡포로 NH 공공공사에 타워크레인 월레비(평균 447만원, 최대 900만원) 상납 적폐 만연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인천공항공사법(정부) 개정안 반대

1.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등 복직 노조원 92명 중 22명이 노조 핵심간부로 활동

경제 위기

이념정책은 밀어붙이고 실정은 국민 혈세로 메우기

☑ 주요 내용 및 성과

- ▶ **꼼수증세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건보료 인상 등 국민부담 가중. ‘공시가격 현실화’ 명분하에 매년 올릴 가능성. 기초연금 수급 탈락 노인 1.6만명
- ▶ **‘분양가상한제’ 도입발표로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시장 개입 문제 심각**

 - 강남재건축 가격 고공행진, 새 아파트가격 상승, 청약시장 열풍, 전세가 오름세, 무주택서민 내집 마련은 더 힘들어짐
- ▶ **‘3기 신도시정책’으로 서울집값은 못 잡고 기존신도시 집값만 떨어뜨림**

 - 1·2기신도시 지옥교통대책은 등한시, 주민 박탈감과 원성
- ▶ **최저임금인상 및 52시간노동제로 일자리 급감, 단기일자리 예산확대로 통계 부풀리기 급급.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단기 알바 1.9만명, 수당예산만 1천억원**
- ▶ **탈원전 대안으로 효율성 떨어지는 ‘태양광’과 ‘수소’에 예산 퍼붓기**

 - 태양광은 특정세력 먹거리가 되고, 수소는 말처럼 싸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음
- ▶ **버스기사 52시간노동제 및 택시월급제 시행문제도 국민혈세로 해결**

 - 버스준공영제 도입시 8개 도 추가 재정소요예산액은 연 9.8억원~1.2조원
- ▶ **NH, 공공임대주택 관리부실 문제 심각**

 - 정부의 무리한 ‘주거복지로드맵’ 추진으로 공공주택 수량 확대에 급급한 결과
- ▶ **북핵문제 미해결에도 끝없는 북한바라기 정책**

 - 철도·도로 등 남북경협 일방추진 노력 및 예산 매년 반영
 - 국토부는 함박도 공시지가까지 발표하며 관리, 장관은 ‘우리 땅 아니다’고 답변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시장 개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법(공시가격 관련), 주거기본법(주거정책심의위 관련), 주택법(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관련) 개정 추진**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 감사 총평

☑ 주요 내용

▶ 대국민사기범 윤지오를 비호했던 여가부의 불법·무능 질타

- 윤지오 지원에 대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출자료 간 모순점 파악
- 여가부의 조직적인 사건은폐 시도 및 허위자료 제출 정황 집중 추궁
- 김희경 여가부 차관의 셀프기부 사실 파악
-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의 윤지오 비호사실과 함께 정부여당의 무능하고 포퓰리즘적 행태에 대한 실태 고발
- 여가부의 허위자료 제출 및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 이정옥 여가부장관의 자질 미달 집중지적

- ‘성범죄자 알림e’ 상 성범죄자 주소 오류 지적에 대해 여가부는 데이터를 받아 올리지만 한다는 장관의 무책임한 답변
- 성범죄자 아이돌보미 자격정지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률상 권한이 없다는 장관의 무기력한 답변
- 여당 의원들조차도 장관의 무능과 무기력함에 대해 우려

▶ 금천구 정부 아이돌보미 폭행사건 후속조치 미흡 지적

- 피해 아동 부친 참고인 출석해 여가부의 허술한 후속조치 증언
- 여가부의 이용자부담금 환수규정 마련 촉구
- 피해 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즉각적인 후속조치 마련 촉구

대국민사기범 윤지오에 대한 여가부의 불법적인 비호 질타

☑ 주요 내용 및 성과

- ▶ 故 장자연 사건의 거짓증인 윤지오에게 법적 근거 없이 숙박비 지원
 - 여가부 산하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윤지오 지원 기부금 출처 추궁에 공지에 몰린 여가부가 차관의 셀프기부라고 실토함
- ▶ 윤지오에 대한 여가부의 부당지원과 이를 감추기 위한 은폐행위 적발
 -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출자료 간 모순점 파악
 - 김희경 여가부차관의 셀프기부 행위 적발
 - 이를 은폐하기 위한 여가부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추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부당지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및 불법 은폐시도에 대한 수사의뢰
 - 윤지오에 대한 부당지원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요청
 - 여가부의 국정감사 허위자료제출행위 수사의뢰 필요
 - 윤지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진행상황 철저점검 및 비호세력에 대한 집중추궁

헌정질서 파괴

이정옥 여가부장관의 자질 미달 집중지적

☑ 주요 내용 및 성과

▶ 현 정부의 코드인사 참사와 무책임·무능한 장관의 태도 지적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상 성범죄자 주소 오류 지적에 대해 “1차적 관리는 경찰청, 등록제기는 법무부가 담당하며, 여가부는 받은 자료를 고지하는 업무만 한다”는 장관의 무책임한 답변 유도
- 성범죄자 아이돌보미 자격정지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가부는 법률상 권한이 없다”는 등 장관의 무기력한 태도 지속 노출
- 또한 여가부 장관은 민감한 질의를 회피하기 위해 “답변 시간이 질의 시간에 포함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등 국정감사 수감기관 장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여 현 정부의 무능하고 무력한 내각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냄

▶ 여당 의원들조차도 장관의 무능과 무기력함에 대해 우려

- 여성 및 아동정책 총괄 정부부처장으로서의 적극적 자세 결여 지적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인사참사로 인한 행정무능 지속 질타

- 현정부가 주장했던 공정사회에 걸맞는 역량 있는 인사의 발탁 절실 지적
- 여가부의 예산 편성 및 업무효율 등의 개선대책 마련 촉구

금천구 정부 아이돌보미 폭행사건 후속조치 미흡 지적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지난4월 발생한 금천구 정부아이돌보미 폭행사건 관련 후속조치 미흡 지적**
 - 폭행사건의 피해 아동 부친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건이후 여가부로부터 직접적 지원은 받지 못했고, 돌봄서비스 비용 환불을 요구했지만 규정이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증언함
- ▶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후속조치 전무 지적**
 - 여가부의 이용자부담금 환수규정 마련 촉구
 - 피해 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즉각적인 후속조치 마련 촉구

☑ 후속 조치 및 지속점검사항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부담금에 대한 환수 규정 신설**
 - 피해아동에 대한 즉각적 후속 조치 및 지원 필요
 - 아이돌보미에 대한 교육, 처벌 등 관리 강화 및 선정기준 강화 필요
 - 아이돌봄서비스의 관리·감독 사각지대 체계 마련
- ▶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추진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실화 및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 필요**



II. 2019 국정감사

상임위 의원별 주요성과

- › 국회운영위원회
- › 법제사법위원회
- › 정무위원회
- › 기획재정위원회
- › 교육위원회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외교통일위원회
- › 국방위원회
- › 행정안전위원회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보건복지위원회
- › 환경노동위원회
- › 국토교통위원회
- ›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국회운영위원회



정양석 의원

청와대 퇴직 직원 민간기업 취직 '불공정'

☑ 주요 내용

▶ 청와대 퇴직 직원 민간기업 취업

- 한정원 前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3급), 청와대 퇴직 후 M금융지주 상무로 재취업. 금융업 경험 없고, 회사 중역들보다 5~10세 어림에도 브랜드전략본부장 자리를 만들어 취업
- 황현선 前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2급)도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로 취업해 연봉 약 2억의 특혜를 누림
- 이것이 바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권의 본 모습

▶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 10월 4주차 갤럽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독단적 국정운영 32%, 경제민생해결부족 25%, 외교대북정책 17% 순
- 청와대는 국회와 보다 활발히 소통할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

▶ 국회사무처, 패스트트랙(fast track) 법안 관련 '정치적 중립성' 훼손

- 국회사무처와 사무총장이 특정정파를 위해 유권해석을 하고 법안처리 방안을 강구한 것이 불행한 사태의 원인
 - 국회의장도 전자입법발의 시스템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에 경호권 발동
- 불법사보임에 대해 임의로 유권해석
 - 본인의 동의없는 사보임은 직권남용이자 불법행위

▶ 국가인권위 직원 설문, 위원장의 리더십 부족

- 내부 직원 109명(전체 246명) 대상으로 핵심과제의 성과미흡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 실시
 - 위원장의 역량 등 리더십 부족: 54.1%
 - 사무총장 간부들의 역량부족: 12.8%

강효상 의원

청와대 비서실은 부적격 인사로 국론을 분열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요 내용

▶ **인사검증 실패**

- 청와대 비서진은 인사검증 실패에 사과해야함
- 조국 전 장관 부인이 11개 혐의로 구속되고, 조 전 장관이 4개가 연루되어있음. 김영란법에 보면 배우자 비위에도 공직자가 책임지게 되어있음

▶ **일본의 인사실패 대응 비교**

- 일본의 법무상은 언론의 부정선거의혹 제기 하루 만에 총리를 찾아가 사임함. 대조적으로 조국 전 장관은 국론을 분열시키며 사임하지 않고 청와대는 계속 시간을 끌어 주말마다 시민들을 광장으로 나오게 만들었음
- 국민들의 광장에서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은 책임져야함이 마땅함

▶ **언론사 통제 법무부 훈령 관련**

- 조국 사태에 대한 보도 때문에 법무부가 훈령을 내려 오보하는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는 출입정지 시키겠다는 신독재적 언론을 검열하는 행위는 언론노조와 기자협회까지 반발함

▶ **방만한 대통령직속기구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문제점**

-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필두로 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만들어진 최초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나라 예산을 예비비로 이미 소진하고 내년도 예산 67억 넘게 신청한 방만한 기구
- 청와대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역할을 명확히 해서 환경부와 차별화된 활동과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검토해야함
- 김현종 국가안보 2차장은 외교와 통상 전문가의 이력을 무기로 공무원들에 대한 오만함을 경고받아 마땅하고, WTO 상소기구 상소위원 중도사퇴로 우리나라 위원 몫을 버린 점이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각성해야함

김정재 의원

정부기관 본연의 책무 소홀 문제 지적 및 정책대안 제시

☑ 주요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 정치 선전도구로 이용되는 어린 학생들의 인권 보호 촉구
 - ① 한국당 해체, 검찰 개혁 정치 선동 동요 영상에 어린이 동원
 - ② 정치 사상 강요한 전교조 교사를 학생들이 폭로한 인헌고 사태
- 아동포르노영상물 중범죄 인식 전환에 대한 인권위의 노력 촉구
- ‘설리’ 등 연예인 악성 댓글,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노력 당부

▶ 국회사무처

-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 ① 국회의장 불법 사보임 지시와 국회사무처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지적
 - ② 전자발의 등 입법지원시스템 법적 효력 문제점 지적 해당 법률안 무효 처리 촉구
 - ③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 절차상 문제점 및 위법성 지적
- 인턴 및 입법보조원 제도 취지 맞게 운영 촉구

▶ 청와대 비서실·안보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검증 부실 및 국론 분열 책임 노영민 비서실장 사퇴 촉구
- 공수처법, 검찰개혁 아닌 정권 입맛에 맞는 검찰장악을 위한 개악 지적
- 공수처법의 헌법상 설치근거 없는 위헌성 문제 지적
- 정부·여당 공수처법 강행 이유 반박
(조국 국면 전환 목적, 대통령직속 검찰 신설, 검찰 법원 장악)
- 3년간 공석인 특별감찰관 조속한 임명 촉구
- 무관중·무중계 평양 깜깜이 월드컵 예선전, 선수 안전보다 북한 눈치 보기 바쁜 정부 질타
- 정부의 남북 평화경제 구축에 대한 비현실성 지적, 대북 정책 비판
-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농업 대책 촉구

김현아 의원

국가를 분열시키는 청와대, 전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들자

☑ 주요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 북한인권법 유명무실한데 국가인권위는 방관만 하고 권고 소극적인 대응
- 동심마저 정치선동에 동원한 주권방송의 명백한 아동학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필요
- 탈북자 모자 사망 사건 등 탈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해 인권위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촉구

▶ 국회사무처

- 노루발뿔뿔이(빠루) 및 망치를 사용한 위법한 공무집행 지적
- 국회 회의장에서 벌어진 조국 교수의 기자간담회 불법개최 문제
- 불법 사보임 논란, 패스트트랙 처리기간 문제, '전자입법발의지원시스템'을 통한 패스트트랙 법안 온라인 제출 법적 근거 등 문제

▶ 대통령비서실

- 서초동 집회는 검찰개혁 열망이라면서, 광화문 집회 외면하는 청와대
- 손해원의원 나전철기 특혜의혹 관련 대통령비서실의 허위 답변
- 조국 전 장관 셀프 인사검증 문제와 문재인정부의 유명무실한 7대 비리 관련 공직자 후보자 인사검증제도
- 조국사태 관련 청와대의 교육부 미성년자 논문조사 직무감찰 지시문제
- 교육부와 협의 없이 청와대가 주도하는 오락가락 교육정책
- 문 정권의 북한 외사랑, 남북축구와 대북정책 문제점
- 1·2기 신도시 주민 우롱하는 광역교통 2030대책, 구체적 계획도 없이 기존 대책만 나열한 빈껍데기

나경원 의원

국민과 국회 무시, 독선과 오만방자한 국회사무처와 청와대 행태 지적

☑ 주요 내용

▶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유린된 것은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때문

-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사보임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며, 자료를 작성한 직원 징계요구
 - 2002년 김홍신 전 의원 사보임 논란 이후 관련법 개정안(국회법 제48조제6항)을 논의했던 당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속기록을 근거로, 지난 4월 국회의장에 의해 이루어진 사보임은 불법이었으며 국회사무처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다름없음을 지적

▶ 대한민국 아동인권에는 관심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 주권방송의 '검찰개혁 동요메들리' 동영상은 아이들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고 정치선동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아동인권을 침해했음 지적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있는 아동발달권 침해로 보이지 않느냐고 재차 질문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장의 '느낌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냈음
- 인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일부 교사들의 편향된 정치사상 강요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직권조사를 조속히 할 것을 촉구

▶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국가안보관에 따른 불안한 안보상황

-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 도발 등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없었다', '전쟁위협이 현저히 감소됐다'고 보고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질타

송석준 의원

국가인권위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3.1%가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손 놓고 있다고 답변

☑ 주요 내용

▶ 국가인권위 북한 인권문제 소홀 내지 무관심 현황

-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여론조사에서 확인
-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동반연의 의뢰를 받아 지난 5월 3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인권위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잘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53.1%가 ‘잘 내고 있지 않다’고 답변. ‘잘 내고 있다’는 응답은 22.7%에 불과

▶ 정부별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문제 태도

-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인권단체와 북한 인권 관련 콘퍼런스·세미나를 5차례 여는 등 협력적 관계
-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세미나는 2018년 10월 25일 캔버라에서 1번 개최한 것이 전부
- 노무현 정부 때보다 북한 정권과 관련한 논의가 더 금기시되는 상황

▶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문제 적극 대응해야

- 국가인권위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 적용되고, 우리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 따라서 북한 주민도 국가인권위원법 적용대상
-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제사회 및 국내외 인권 단체들과 함께 북한 인권 상황 고발 및 규탄 필요

송언석 의원

경제성장률도 모르는 청와대, 국민은 누구 믿고 경제를 하나

☑ 주요 내용

▶ 경제성장률 모르는 청와대 경제수석

-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경제수석에게 예산안 기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물었으나, 이에 대해 즉답하지 못하였고 해당 경제성장률에 기준이 되는 올해 실질경제성장률 기준은 답하지 못하였음
- 경제성장률도 모르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보면서 국민은 누구 믿고 경제를 하는지 답답할 따름임
- 또한 경제위기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경제지표들을 보고도 前정부, 외부요인 등 남 탓만 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하였음

▶ 독도 안 보이는 독도 실시간 영상관

- 국회사무처는 국회 직원들과 방문자들에게 독도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도록 독도 실시간 영상관을 설치함
- 그러나 영상관에서 시사/다큐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는 등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되고 있음
- 독도 실시간 영상관이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무처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아동 인권은 어디로?

- 주권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 20여명이 “자한당 해체” “친일파 자한당” 등의 노래를 부르는 반일(反日) 집회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
- 또한 ‘주권방송’,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정치검찰 오냐오냐 압수수색 꿀꿀꿀~’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게시
- 이렇듯 주권방송이 아직 의식이 완벽히 성숙되지 못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정치적인 내용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는, 이들의 인지·심리학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특정 조직, 정치세력 및 언론에 대한 편향적이고 혐오적 시각을 가지게 만드는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함

이만희 의원

오만불손 안하무인 청와대, 중심 못 잡는 국회사무처

📌 주요 내용

▶ **국민소득 3만불 넘는 대한민국에서 북한탈북모자 아사... 책임감 느끼나?**

- 빈소나 살던 임대아파트를 가본 적도, 사죄 등의 표현도 없었던 인권위원장
- 북한인권문제를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인식해서 안돼
- 인권위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부실한 정부정책을 질타하고 보완을 촉구해야함

▶ **국회법 위반, 불법·사보임**

- 임시회의 경우 사보임을 금지하고, 정기회의 경우 30일 이내 1회 한해 가능
- 국회법 제48조6항은 교섭단체간 정치적 이유 또는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위해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시로 위원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설됐음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관련 불법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과 국회법을 오해석한 국회사무처에 대해 지적

▶ **단군 이래 최악의 농업홀대, 결국 개도국 지위까지 포기**

- “더 이상 이 땅에서 농업이 희생산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던 文대통령. 개도국 지위 포기는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 개도국 포기로 내놓은 정책, 기존 농업부문에서 언급되던 기존 정책들뿐

▶ **靑 근무 윤총경, 부인 말레이시아 주재관 특혜 파견 의혹**

- 2007년부터 해경에서 주재관 나갔으나 2017년 육경으로 변경
- 윤총경 부인 파견 당시 공모요건 자체가 바뀌어
- 인근 국가로 이민 간 文대통령 딸의 업무와 일을 살피주기 위한 의혹 제기

▶ **조국 前 법무부장관 인사 실패 책임론**

-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지만 조국의 지명과 임명 강행의 잘못은 없다?
- 딸 부정입시,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사전파악 있었나?

이양수 의원

정부 부처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비서실

☑ 주요 내용

▶ 인권위원장 소통능력 부족, 인권위 내 갑질 예방 필요

- 인권위 내 설문조사에서 인권위원장 소통능력 부족을 지적
- 인권위 내 갑질 예방교육 철저히 하고, 갑질 실태조사 할 것을 요구
- 북한인권 관련하여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최적의 결과물 낼 것을 요구

▶ 국회사무처 패스트트랙 불법 사보임에 대한 유권해석 지적

- 오신환의원은 '사보임 당할 의사 없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무시하고 사보임 하였음
- 관례로만 얘기하기에는 국회법 엄중함

▶ 조국 셀프 해명회 회의장 불법 대실

- 셀프해명회 민주당 의원총회 목적으로 대여했지만, 목적에 맞지 않음
- 불법으로 사용함에도 사무처는 이에 대한 제재조치 하지 않았음
- 더욱이 추가연장신청을 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내주면 안됐지만 사용허가를 불법적으로 내주었음, 이외 특별한 조치 없었음
- 앞으로 회의장 제대로 관리할 것

▶ 청와대 비서실 - 독도/동해 표기 오류

- 공공기관 홈페이지 지도 오표기 지적, 대통령 엄중경고에도 잘못된 지도 사용하는 공공기관 발견
- 심지어 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도 잘못된 지도 사용하고 있음
- 철저히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필요 있음

▶ 사회수석실, 군 헬기 동원해 강원도 유람

- 사회수석실은 공문 등 정식 협조요청 없이 군헬기를 사용하여 DMZ 평화의길 방문을 했음
- 군에서도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하면서까지 비서실 헬기요청에 응대 해줌
- 이는 대통령 비서실의 갑질이며,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나 다름없음

▶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 보고누락 엄중한 문책 필요

- 국정기록비서관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대통령개별기록관 건립에 대한 보고 받았지만, 비서실장에 보고 없이 진행
- 이에 일상적인 티타임 형식으로 진행한 사안이라 보고 하지 않았다고 함
- 일상적인 사항에 대통령이 화를 내고, 해당기관은 TF까지 구성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음
- 엄중한 사안임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적절한 문책 필요

정유섭 의원

**현 정권의 대북정책 결과물은 사상초유 무관중&무중계 남북축구경기!
고립으로 가는 한국 외교, 외교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주요 내용**

▶ **현 정권의 대북정책 결과물은 사상초유 무관중&무중계 남북축구경기!**

- 1990년 10월 11일 통일축구 이후 29년 만에 평양에서 성사된 남북 축구경기는 남북 스포츠 교류 사상 최악의 사태가 되어 버렸음
- 자국 국가대표 선수 하나 보호 못 해주는 그런 나라가, 그런 정부가 어떻게 정부이고 나라인가!
-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나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개최 추진은 안 될 일임

▶ **고립으로 가는 한국 외교, 외교의 기본으로 돌아가라!**

- 지금 대한민국에는 외교가 없음. 중국·일본·미국에게 무시당하고 국격, 자존심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임
- 중국이 사드이후 한한령을 좀처럼 풀지 않자 우리정부는 굴욕적인 3불 약속을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이스트먼음대 오케스트라의 중국 공연 방문에서는 단원들 중 한국 국적자만 비자를 내주지 않는 등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도 이낙연 총리의 친서 전달에 눈길도 안주는 아베총리를 보면 더 고자세로 한국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가 느껴짐
- 정부는 마찰만 일으키기보다는 외교의 기본으로 돌아가 한미동맹도 공고히 하고 지소미아도 연장하면서 외교정상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정점식 의원

계엄령 문건 사건·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한
여권 관계자들의 지나친 허위 사실 바로 잡는데 기여

주요 내용

계엄령 문건 사건 관련 요란하게 수사했지만 증거는 없어, ‘태산명동 서일필’

- (질의) 계엄령 문건 관련,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지만 그들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사이에 대화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대통령비서실장 마음 속으로 계엄문건이 내란음모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비롯된 사건임

⇒ (답변) 당시 사실상 NSC라든지 아마도 핵심적인 부분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이 일치했을 거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 ▶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하여 내란음모와 관련한 아무런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내란음모로 확대되길 바라는 청와대의 희망사항이라는 점 입증

‘윤석열, 조국 반대 위해 대통령 면담 요청했다’는 유시민 이사장 발언은 거짓

- (질의) 검찰총장이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거나,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있나?

⇒ (답변) 윤석열, 조국 임명 전 대통령 면담 요청 없었다(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 ▶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임명을 반대하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이 거짓이었음을 입증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의 세월호 수사 외압은 명백한 허위 사실

- (질의) 황교안 장관이 광주지검장을 면담(2014.11월)한 시점은 사건 관련하여 기소가 완료된 상태에서 전국 검사장과의 면담 시 이루어짐. 수사 관련 질책이나 외압 지시한 사실 없다

⇒ (답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무응답, 질의에 대한 수궁

- ▶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입증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의원

정권 사법부 장악 저지 및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지적

주요 내용

문재인정권은 '사법의 정치화' 즉각 중단해야

- 현 정권 들어 임명된 대법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민변 출신임. 헌법재판관도 8명이 바꿨는데 5명이 우리법·민변 등 출신으로 文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민주당은 우리법 등 출신들만 꼭 집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고, 탈검찰화로 뽑은 법무부 개방형 고위직 12명 중 6명이 민변 등 출신으로 전체 변호사 중 5%에 불과한 민변이 대한민국 사법을 장악하고 있음
 - 또한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김형연, 김영식 부장판사가 잇달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임명되는 등 문재인정권에서 법원-헌재-청와대로 이어지는 노골적인 '사법의 정치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지적

불법 사보임을 원인으로 한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은 위법

- 패스트트랙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사보임과 관련하여, 2003.2. 개정된 국회법 제48조6항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사보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헌재 판결(2002헌라1, 2003.10.30.선고)은 사보임에 대해 명시적 제한규정이 없었던 舊조문(2000.2.16. 법률 제6266호로 개정된 것)에 근거해 판단한 것임
 - 또한 '부득이한 사유'도 당사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사보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원내대표의 사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취지도 아니라는 점에서 공수처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은 위법하고 원천무효임을 지적
 - 나아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상임위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의원으로 사보임 시킨 것은 국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일뿐더러, 국회의 의결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지극히 부당한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저항하는 것은 야당의원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 것"이라 주장

김도읍 의원

조국 일가 檢 수사 문제점 및 檢 개악 실체 폭로 사법부, 국민 신뢰 추락 문제점 지적 등

☑ 주요 내용

▶ 조국 일가 검찰 수사 관련 문제점 지적

- 조국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국 직권남용 문제 등
- 정부여당의 검찰 때리기, 수사외압 등 문제제기
- 엄격한 ‘피의사실 공표’, 철두철미 ‘비공개소환’, 자체 ‘조사중단’

▶ 정부여당의 ‘조국 구하기’, ‘검찰 개악’ 실체 폭로

- 검찰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관련 지침 등 ‘조국 특혜’를 위한 각종 절차 무시
- 정권의 흥위병, 괴물 ‘공수처’ 문제점 지적
-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라는 대원칙이 빠진 검경수사권 조정

▶ 법원, ‘조국 구하기’ 위한 맞춤형 영장 기각 문제점 지적

- 명재권 판사 조권 영장 기각 문제점 지적 및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문제제기

▶ 대법원, 헌법재판소 좌편향된 인사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점 지적

-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등 대부분 특정 성향 출신
(대법관 9명중 5명이 민변, 우리법, 인권법 출신(김명수 대법원장, 김상환, 김선수, 노정희, 박정화 대법관))
(헌재 재판관 9명중 5명이 민변, 우리법, 인권법 출신(유남석 소장,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 국방부 장관, 지소미아 유지 의지 답변 이끌어내(군사법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지소미아 국방위해 필요, 파기 원하지 않는다’ 답변 이끌어 냄

☑ 후속 조치

- 법원조직법개정안 발의(김형연 방지법)
 - 법관 퇴직 후 5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비서실 근무 X
-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 개정안 발의(정치적 중립성 확보)
 - 법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정당 신분 및 공직선거 경험, 특정 정당 캠프 활동자 임용 제한
- 국민신뢰 받는 법원(법원조직법 개정안)
 - 법관 징계 심의 내용 공개, 각급법원 판사회의의 운영 공개, 법원 연구회 공개
-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대상 포함(인청법·국회법·헌재법 개정안)
- 국민신뢰 받는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헌법재판연구원장 임명관련 추천위, 심사 및 회의록 공개

이은재 의원

‘국민 위한다’는 정부의 부처들, 문재인 대통령 ‘눈치보기’ 일관

주요 내용

법무부, 조국의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신중 검토

- 문재인 정권 검찰 특수부 명칭 폐지 및 축소 건을 10월 안으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라고 주문하더니, 해당 개정안 10월 15일 바로 국무회의 통과
- 검찰의 감찰권을 법무부로 옮기도록 하는 방안은 검찰의 ‘셀프 감찰’ 문제점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정권이 감찰을 빌미 삼아 수사 개입 혹은 통제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

감사원, 대통령 딸 해외이주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각, 재검토 요청

- ‘대통령 친인척 해외이주 의혹 공익감사청구’ 건을 ‘공익과 관련 없다’거나 ‘감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기각처리
-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두고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이고, 제대로 사용하려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 24시간 공개는 못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공익을 위해 공개되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해야 함

대법원, 공탁금 제대로 사용되고 있나

- 수억 원의 비용으로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이 계속 증가해 금년에는 1천억 원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
- 공탁금 활용사업체계의 전반적 검토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법원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방책을 강구하시기를 당부

군사법원, 함박도를 보는 국방부의 관점 적절한가?

- 함박도 주소, 산림청과 해수부의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관련, 함박도가 정전협정에 따른 NLL의 북쪽 700m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북한에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토를 수호해야 할 군의 입장에서는 먼저 그 경위부터 소상하게 파악하고 우리 영토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군의 자세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기만에 가득찬 법치농단

☑ 주요 내용

▶ 법무부, 검찰 개혁으로 포장한 ‘우리민변부’의 검찰 장악 꿈수

- 탈검찰화 가장, 개방형 직제에 특정 이념 편향 단체 출신 대거 기용
 - 법무실장 이용구(민변), 인권국장 황희석(민변), 출입국관리본부장 차규근(민변)
- 조국發 민변의 검찰 장악 기도 본격화
 - 조국 취임 1호지시, 황희석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단장 중용
 - ※ 황희석 국장의 反검찰 및 反한국당 발언 질타, 사퇴촉구
 - 조국 취임 2호지시, 민변一邊倒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 인사, 재정, 감찰, 수사지휘로 본격화되는 검찰의 법무부 하청기관화
 - 검찰국장, 기획실장, 대검 사무국장, 대검 감찰본부장職 장악

▶ 헌법재판소, 편향된 이념스펙트럼으로 인한 정권 입맛추기 판결

- 현 정권의 정책 동조, 이념에 맞는 판결을 했던 4인 재판관
 - 유남석, 김기영, 이석태, 이은애 (낙태죄, 자사고 동시입학 판결)
- 2019. 4. 문형배, 이미선 문재인 대통령 지명 위헌정족수 6명 확보
- 헌법재판소 회부 사건 現 정부 입맛맞추기 판결 우려
 - 사개특위 사·보임 권한쟁의 ➡ 기각, 국보법 ➡ 위헌, 군동성애 ➡ 위헌 예상

▶ 감사원, 거대한 권력형 게이트 ‘태양광 사업’ 면죄부

- 서울시, 친여 태양광 3인방 입찰과정 특혜 부여
 - 특정조합 위한 보급기준 변경 및 선정기준 특혜설정後 공문 발송
- 박원순 서울시장 단순 ‘주의’ 조치 봐주기 처분, 부실감사 규탄

▶ 법제처, 청와대 부속실화 및 대통령 법률자문단화

- 처장, 5공 이래 최초 청와대 → 법제처장行. 법제처의 청와대 사유물화
- 취임 1호 업무,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신규위원 親與·親文 인사 대거중용 * 위원명단 최초공개

정갑윤 의원

문재인 정부 총체적 난국, 국가정책 대전환 필요

☑ 주요 내용

▶ 법무부

- 조국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
- 정부와 여당 조국사태로 인한 국론분열 책임론 제기
- 조국 發 검찰개혁은 개혁 진정성에 의문

▶ 대법원

- 차베스정권 사법부 장악해 정권유지에 유리한 환경 조성, 문정부 편향된 인사로 코드사법부(우리법,인권법,민변) 만들며 차베스 전철 밟고 있음
-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시사하는 바가 큰,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의지
-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각종 불편편법 지원 횡횡

▶ 대검찰청

- 조국일가(살아있는 권력) 수사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
- 공수처는 옥상옥,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으로 충분히 보완가능

▶ 감사원

- 청와대 파견인원 정부부처 중 최다, 독립성 위해 축소 요구
- 본 의원실이 제출한 탈원전 ‘공익감사청구 결정’ 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 요구
- 서울교통공사 감사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서울시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 必

▶ 법제처

- 법관의 독립성·중립성 훼손한 처장의 행태 비판

▶ 헌법재판소

- 사전투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침해 소지 有

▶ 군사법원

- 국방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확산 대한 안일한 대응 지적 및 경각심 요구

정점식 의원

조국 일가 비리혐의 공정한 수사·재판 촉구, 조국 사퇴 앞장 서

☑ 주요 내용

▶ 조국 자택 압수수색 당시 상황과 관련한 진실 밝혀

- (질의) 정 교수님이 비공개로 페이스북에 오전 9시 45분에 글을 올림. 119를 불러 병원을 가야 할 시간에 어떻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수 있겠는가?
 - ⇒ (답변) 그런 상황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 정 교수님이 갑자기 주저앉은 상황이 압수수색이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중에 있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 ▶ 조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를 한 오전 9시 30분엔 건강상 큰 이상이 없었다는 의미의 답변을 이끌어내 강압적 압수수색 논란에 종지부

▶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 성접대' 수사기록 포함 논란 종결

- (질의) 1차 수사기록에서 '명함, 다이어리 등에서 윤 총장 이름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발견한 적 있는가?
 - ⇒ (답변) 수사단장 당시 2013년 윤중천 사건 1차 수사기록부터 윤씨의 개인 다이어리 등 관련 기록을 모두 봤지만 윤 총장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은 없었다.
(여환섭 대구지검장, '별장 성접대' 사건 前 수사단장)
 - ▶ 한 언론을 통해 불거진 '가짜뉴스'의 실제적 진실을 밝혀 논란 종결에 앞장

▶ 운동학원 비리 핵심, 조권(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의 부당성 강력 질타

- (질의) 검찰 조사 당시 조권은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환자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스스로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는 점, 당시 영장전담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내정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큼. 법조계 관계자들도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이번 영장기각에 대한 입장은?
 - ⇒ (답변) 검찰에서 영장 재청구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겠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시 기각된 사례는 단 1건이라는 점을 밝혀내며 조국 일가 비리혐의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 진행 촉구

주광덕 의원

반칙·특권의 상징 조국 법무부장관 STOP! OUT!

☑ 주요 내용

▶ 조국 사태 명명백백 진상규명하는 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길!

-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경력증명서 발급 등 온갖 비리 의혹의 중심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수사
- 그동안의 위선과 ‘조로남불’로 온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든 장본인 조국.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당부해야할 청와대·정부·여당은 ‘조국 비호’와 ‘검찰 비난·때리기’에 앞장

▶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정적 실정 → 압수수색 검사팀장에게 전화해 ‘배려해달라’

- 국정감사 직전 대정부질문에서 유도신문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개시 시점에 압수수색팀장 검사에게 통화한 사실 시인
- 검찰청법 위반소지는 물론 검사에 대한 인사권,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으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잘못 지적

▶ ‘조국 비호용’ 사이버 검찰개혁추진지원단·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질타!

-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관 도중 ‘검사 상판대기를 날려버려야 한다’는 발언 지적
- 과거부터 검찰에 대한 반감, 선입견을 가진 자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맡는다는 것 매우 부적절

▶ 문재인대통령 사법부 코드장악 질타!

- 현직 부장판사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했던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국제인권법연구회), 또다시 법제처장으로 취임한 전형적 코드 출세
- 전임 김외숙 법제처장은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 후임에는 김영식 전 부장판사(또다시 법관의 청와대 직행, 국제인권법연구회)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정무위원회



김종석 의원

‘①사회주의 금융 ②친북 보훈 ③반시장 규제정책’ 중단해야

☑ 주요 내용

▶ (금융위) ‘연금 사회주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위한 5%를 완화 중단해야

- 5%를 완화 반대 여론 빗발치자 왜곡된 보도자료로 선동 나선 금융위
- 조국 펀드 위법성 드러났는데 조사 착수조차 않는 금융당국

※ 국감자료집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에 따른 영향’

▶ (금감원) DLF사태 핵심은 불안전 판매 ‘일벌백계’ 해야

- 우리은행 DLF 일반창구에서 판매…저축형 상품오해 소지
- 금융위원장은 ‘공짜 점심 망언’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 하나은행 ‘DLF 손해배상’ 검토자료 금감원 검사 직전 삭제

▶ (보훈처) 정치편향 감독한다더니 광복회장의 친북반미 발언은 수수방관

- “보훈단체 정치편향 관리감독 필요”하다더니 김원웅 광복회장은 방치
- 보훈병원의 보훈처 직원과 가족 진료비 감면은 김영란법 위반…중단해야
- 증인 선서 거부한 피우진 전 보훈처장 행태에 유감…위원회 차원 고발해야

▶ (공정위) 공정위가 개정된 하위법령, 규제강화가 규제완화의 2.5배

- 담합이라던 편의점 자율규약, 대통령 한마디에 18년 만에 뒤집혀
- 무혐의처분 증가하는 공정위 직권조사

※ 국감자료집② ‘경제민주화 기업정책의 쟁점과 과제’

▶ (국무조정실) 우려했던 규제샌드박스 사각지대 현실화…제도 보완 시급

-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갑질 조사 여전…행정조사기본법 서둘러 개정해야
-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후퇴…개혁 의지 의문
- 현 정권에서 급증하는 국책연구기관 전문인력 유출, 연구 독립성 보장해야

김선동 의원

조국일가 특혜대출부터 공정위 특혜채용까지, 文정부 불공정 사례 연일 질타

☑ 주요 내용

- ▶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5억원 추가대출 특혜 받아... 문재인 당시 파산관재인이 눈감아준 석연찮은 공적자금 회수과정도 집중 규명**

 - 웅동학원은 동남은행이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되어 영업정지 되기 3일 전, 5억원의 추가대출 받게 됨 → 금감위(現 금융위) 내부의사결정 하루 전 실행
 - 동남은행 파산에 따라 파산재단 12건의 소송 중 웅동학원은 누락
 - 문재인 당시 파산관재인은 부실여신을 최소화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최대화했어야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혜택을 주는 손실보전기한('98. 6. 29~'99. 3. 31) 마지막 날 추가대출 5억원이 매각되어 공적자금 수혜
 - 연체발생이 확실함에도 영업정지 3일전 추가대출승인, 손실보전기한 마지막 날 성업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기막힌 우연의 연속
 - 국정감사 기한 내내 특혜대출 의혹을 인정 않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결국 “이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

- ▶ **3번의 이의에도 동문서답 답변, 예산핑계... 국민 불편 외면하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강력 질타**

 - 올해 불수용처리된 민원 392건을 전수조사하여 불성실 답변에 대한 소명과 재발방지대책을 국조실에 요청하였고, 지자체 민원이 신문고로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분석하여 정부 규제개혁 창구 재정비할 것을 지적

- ▶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국정농단 특검 보은인사 의혹**

 - 공정위가 2017년 10월, 할부거래과장을 공개모집하면서 관련분야 경력도 전혀 없는 박영수 특검 출신 인사를 영입한 것이 드러남
 - 특히 연장 공고 과정에서 직위를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공정위 내부 직원을 채용해온 할부거래 과장 자리에 외부인을 채용한 사례로 밝혀져 짜맞추기 채용 의혹이 의심됨

김성원 의원

문재인정부 아마추어·내로남불 행정으로 국민피해 가중

주요 내용

조국사모펀드 위법·불법·편법 행태 지적(국무조정실·금융위·금감원·자산관리공사 등)

- 조국가족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선량한 개미투자자를 울린 전형적인 주가조작 사태임을 지적하며 검찰 수사 외 금융당국의 조사 촉구(→조사 착수)
-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규정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조국사모펀드의 출자약정 허위공시, 주식 차명 취득 등 자본시장법 위반 지적
-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금융감독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이례적으로 소관 수석실인 경제수석이 아닌 민정수석과 면담한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
- 조범동이 설립한 코링크PE와 투자자문계약을 맺고 여권 관계자들이 다수 연관된 PNP플러스 컨소시엄 관련 미래에셋대우의 1500억원 투자확약서 발급 등 과도한 특혜제공 지적, 금감원 차원의 조사 촉구
- 조권의 44억원 기술보증기금 채무 상환 약속 이후에도 두 달여간 변제는커녕 채무상환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 지적하며 상환 촉구

금융분야 서민피해 키우는 금융당국 관리·감독 소홀 지적

- DLF 대규모 손실사태에 대한 원인규명 및 그에 상응하는 금융기관 책임 추궁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부동산펀드 투자와 관련한 금융당국 리스크 관리 주문,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선언 등 사모펀드 전반에 걸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주문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 없이 한 달 만에 졸속으로 추진해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대거 탈락자 양산시킨 졸속 정책 추진 질타

국가보훈처의 이념편향적 보훈정책 지적

- 손해원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논란을 촉발시킨 보훈심사 위원회의 전문성 부족과 편향성 지적
- 보훈혁신위원회가 독립유공자 발굴을 북한과 상의하라고 보훈처에 요구한 사실을 밝히고, 김원봉 서훈 검토 논란·주한미군 사령관 연설문 무단변경·6·25전쟁 영웅 포스터에 중공군 사진 게재 등 보훈처의 반보훈적 행태 질타

김용태 의원

국민의 입장에 서서 진행한 2019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주요 내용

▶ 걸려도 남는 장사 무자본 M&A, 관련 제재 필요

- 이번 조국 사태에서도 보여지듯, 상장기업의 불법적 행태와 이로 인한 선량한 주주들의 피해의 배경에는 무자본 M&A가 개입된 경우 많음
- 그러나 현재 자본시장법상 무자본 M&A에 대해 특별한 제재가 없음
- 이와 관련 불법행위가 있다면, 검찰조사와 관계없이 금감원이 적발해 고발 및 감독, 제재가 필요할 것

▶ 보험 5건 중 1건은 1년 안돼 해지...설계사 '작성계약' 심각

- 일부 설계사들이 본인이나 지인 명의로 가짜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며 모집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다 해지하는 관행 존재
- 이는 실명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험업법에 어긋나며, 보험사에는 수익률 악화로 소비자에게는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돌아옴
- 설계사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 변경 등 대비책 마련 필요

▶ 공정거래법 개정 막히자 '시행령 우회상장' 꼼수부리는 공정위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만들어놓고 시행령 개정 추진
- 내년 4월 총선 대비 공정경제 분야에서 성과 내려는 정부와 여당 입맛 맞추기
- 지주회사 관련 법률로 다뤄야 할 사안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정위 명백한 권력남용

▶ 보훈처 회원복지비 못 쓴다더니 2억 넘는 해외 여행이 웬 말인가!

- 보훈처는 수익사업 건별로 '수익의 50% 이상을 회원복지비로 지출하겠다'는 약정을 받도록 규정을 정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준수하는 단체는 한 곳도 없음
- 보훈처는 회원복지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단체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나 제재도 하지 않고 있음

김정훈 의원

**DLF금융피해, 서울편중 금융정책, 부산금융중심지 소외, 행정심판 운용실태 등
국민과 지역의 피해가 발생, 예상되는 분야를 파악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주요 내용

▶ DLF사태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지원 및 부실운용사에 대한 처벌 촉구

- 김정훈의원은 DLF사태 관련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지적하고 금융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 지원 및 부실 운용사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음
- 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만큼 DLF 사태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크시고, 날카로운 질문들로 저희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주시는 모습에 무척 감명을 받았다”고 메일을 보내음

▶ 서울 중심의 정부 금융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방안 제시

- 부동산 신탁사 11개사 모두 서울 소재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의 구성도 21명 모두 근무처가 수도권 소재로 되어있음을 지적하였고, 금융감독원장도 이에 대해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답변
- 금융위가 대체거래소를 허가할 경우 서울에 개장할 가능성이 높고, 부산금융중심지의 위상 저하와 부산 경제에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

▶ 정부 금융중심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 부산에 금융중심지가 조성된 지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본사 금융사는 한 곳밖에 없으며 금융센터지수에서도 2015년 24위에서 2019년 43위로 떨어진 것을 지적하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 해외IR 사업을 통해 국내 진입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단 5개뿐이며 이들 모두 서울에 진출 하였음을 지적하며 금융유관기관과 공동 IR 개최 및 국내 기관투자자의 IR 참여를 유도하는 등 해외 IR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 권익위 행정심판 접수의 고의누락 적발 및 문제점 지적! 제도적 해결방안 제시

- 권익위가 6년간 고의로 쌓아둔 미접수 행정심판이 4,522건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고 행정심판 업무처리 시스템 개편 및 단순 반복적 청구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심판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기타

- 산업은행, 앞에서는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 검토하고 뒤로는 담보취급 제한 지침 개정한 점을 지적
- 5년간 주택금융공사의 회수 불능 보증기금이 1조원 넘고 상각채권 회수율은 6.4% 정도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

김진태 의원

돌아온 저격수, 날카로운 정무/정책 질의

☑ 주요 내용

▶ 국무조정실

- 북한 미사일 관련 상황 허위 진술한 국무조정실장의 사과 받음
- 평양에서 실시된 월드컵축구 예선전 중계요청과 선수보호 필요 지적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관련 지역 형평성 문제 지적

▶ 공정거래위원회

- 국대떡볶이 대표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 현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의 문제점 지적
- 공정위의 가맹사업 자율성 침해 행정입법의 문제점 지적
- 가맹사업의 품목 및 마진 공개를 강제하는 시행령 개정의 위법성 지적

▶ 국가보훈처

- 국민투표로 뽑기로 한 2019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에 위원회 개입의 문제점 지적
- 명단에 없는 사회주의 한인사회당을 창시한 이동휘를 선정 문제점 지적
- 높은 순위의 반공주의자 김좌진 장군은 누락, 일부 심사위원 주관개입 시인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국민연금 연금사회주의 및 5%를 완화 추진 반대 의견 개진
- 조국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 지적
- 금감원, 종합검사 이행 현황 점검 및 원칙적(유인부합적) 진행 강조
- 금융당국이 카드사에 대한 대체서비스 강요, 부가서비스 축소 실태 지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조세재정연구원장의 임용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적 보유가 규정 위반임을 지적
-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정규직원 채용관련 의혹 제기

성일종 의원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를지도 못한 문정부의 부도덕성 지적

☑ 주요 내용

▶ **가짜뉴스 대응책 세우겠다던 총리실이 ‘가짜뉴스 공장’ 돼서야 질책**

- “여성만 두 명 있는 집에 11시간 압수수색, 식사배달 과도했다”는 총리의 대정부질문 발언은 감성팔이용 가짜뉴스
- 압수수색 당시 변호사 3명 입회했고, 여성 수사관들도 있었는데, 압수수색 나흘이 지난 상황에서 사실관계 파악도 못한 총리실 무능 지적

▶ **‘조국펀드’ 의혹 두 달 되도록 금융위·금감원은 뭐했나?**

- 금융위·금감원 소극적인 조국일가 사모펀드 대응 지적

▶ **공정위의 생색내기용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 간접지분 제외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실효성 없어
- 상속·증여를 위해 만들어진 기이한 현대차-모비스 지분구조 깨트려야

▶ **금융기관-소프트웨어 업체의 불공정계약 관행 타파**

- 금융기관과 소프트웨어업체가 맺는 용역계약에 ‘한도없는 지체상금, 일방적인 계약해지, 불명확한 과업범위, 헤드카운팅 등’ 불공정계약 관행 만연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10년간 자료조사만?**

-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유해 발굴에 실패한 이후 10년째인 올해까지 중국·북한 눈치보느라 단 한 번의 재발굴 시도도 없어
- ‘자료수집’이라는 명목으로 인력과 매년 1억 이상의 혈세 낭비

▶ **조국일가, 캠코의 100여차례 빚독촉 18년간 뭉갬다**

- 캠코, 2001년 이후 채권 128억원 인수를 위해 100차례 넘게 독촉했지만, 조국 모친, 딱 한번 연결된 전화통화에서 ‘변제능력이 없다’는 답변
- 하지만, 첫 독촉 받은지 7개월만에 부산 해운대 빌라를 2.7억원에 전 며느리 명의로 매입. 캠코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차명으로 재산 은닉 의혹

▶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도덕적 해이 심각**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당시 조국 자녀에 대한 허위 인턴십 발급 의혹이 있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비겁함
- 국책연구기관의 특성 무시한 획일적인 주52시간 도입의 문제점
- 장애인고용 비율 안 지키고 돈으로 때우는 경인사연구원

K재단, 미르재단 울고가는 ‘한국사회적가치연대기금’

☑ 주요 내용

▶ (금융위) 문재인판 K, 미르재단, (재)사회적가치연대기금

- (재)한국사회적가치연대기금(이하 재단)은 기재부가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중,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통과를 전제로 한 ‘사회가치기금 설립 지원’ 사업에 따라 설립됨
-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재단은 기재부가 고시하는 많은 법정기부금 단체(19.6.28일 기준 4,076개) 중 하나일 뿐이며 법령상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해 ①은행권에 대한 강제 할당식 모금 의혹 ②재단이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기 전, 은행 연합회가 기부금 형태로의 출연을 의결함에 따라 권력이 작용한 의혹 ③이들이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의 골목시장 영세업종 진출 실태를 지적함

▶ (국무조정실) 조국 일가의 국정과제 유출 및 투자 의혹 지적

- 조국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 사모펀드의 투자회사 5곳 모두가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관련 업체라는 것을 낱낱이 파헤쳐 비교분석함
- 사모펀드 투자업체 : IFM(국정과제 37번), WFM(국정과제 37번), 익성(국정과제 37번), 태영웨이브(국정과제 중 4대복합혁신과제), 웰스씨앤티(국정과제33번 중 실천과제 33-5번 스마트시티, 국정과제 34번 스마트 도로)

▶ (통일연구원) 통일부 비공개연구용역 USB, 통째로 北 김정은에 전달 지적

- 前정부 시절 1~2건에 불과한 비공개 연구용역이 매년 6건씩 발생
- 특히, 17.11~18.5.20까지 공개용역으로 진행된 통일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로드맵」은 연구기간 중(18.4.27) 北 김정은에 자료가 전달되고, 공개가 비공개 처리로 변경됨을 지적

주호영 의원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제도 다수 개선

☑ 주요 내용

▶ 실손보험 중복가입, 사전에 미리 알리도록 제도 개선

- 금융감독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7만명이 876억원, 올해 6월까지 125만명이 496억원을 이중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보험업법 제95조의5 개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중복가입사실을 무조건 통보

▶ 목소리 크면 '소나타(중형)', 가만히 있으면 '모닝(경차)'

- 최근 친환경 차량의 보급 증가로, 보험 대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차와 관련된 표준약관이 없어 목소리 큰 사람이 좋은 차 배차 받아
- 금융감독원장의 조속한 제도 개선 약속

▶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이중 수취 중단해야

-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7년이 지나, 저금리 담보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 또 다시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의무 발생
- 4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은 최근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금만 1.2조원에 달해
- 3년이 경과한 담보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현황 전수조사, 은행의 '여신약정서' 개선, 3년이 경과한 동일은행 대환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국내 증권시장, 외국계 기업 놀이터로 전략

- 최근 10년간 무차입공매도 적발 투자사 101건 중 94건 외국계투자회사
- 무차입 공매도 놀이터가 되는 종목은 삼성, LG, 현대, 기아, 네이버 등 대기업도 있었으며 바이오주나 중소기업 등 가리지 않음
- 과태료 최대 1억으로 상향,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약속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

정책으로 경제 망치고, 재정으로 나라꼴간 털어가는 문재인 정권

☑ 주요 내용

▶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민간활력 죽여놓고, 정치적목적으로 재정퍼쓰기 하는 문정권 비판

- '19년~'20년 2년 연속 재정지출 증가율 9%대('05년 총지출 개념 도입 후 최초)
- 특히, 부처요구액보다 더 많은 예산안 편성하며 재정과다지출 건인
- 명목GDP 증가율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도 文정부 출범 후 2배 수준 초과
- '18년 2.29배, '19년 3.17배, '20년 2.45배 등 3년 연속 초과
- 민간-정부 국내총생산 기여율에서 정부가 민간 압도*('09년 금융위기이후 처음)
※ 19년 3분기(정부 84.2% vs 민간 15.8%) / 17년 1분기(정부 13.8% vs 민간 86.2%)

▶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경제실패, 재정으로 덮으려하지 말고 구조개혁·규제혁신 추진 등
통해 경제정책 과감히 대전환할 것을 촉구

▶ 문재인 정권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친노조 중심 경영실태 지적

- 35개 공기업, 17년 대비 18년에 부채 9조원 증가, 순익 3조원 감소에도 임원 성과급 78억원 지급 → 문정권이 도입한 경영평가제도에서 수익성 지표 비중 50% 감소
- 낙하산 견제하라고 준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공기관 비상임 임원 등에 대한 임명권한 포기 → 17.5월 이후 56% 이상(329명 중 185명, 19.9월 기준)을 캠퍼더 인사 임명
- 문정권 들어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이후, 인센티브¹ 반납분이 노조 뒷주머니(공공상생연대기금 출연 505억)로 흘러들어간 의혹

▶ 정부코드 맞춤형 보고서 발간하며, 독립성·중립성 스스로 포기한 한국은행 질타

- 외부전문가 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문정권에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을 수정·삭제
- 최종 용역보고서 내용 중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 제기' 부분 삭제하고 발간

▶ 관세청 퇴직 공무원의 관세법인 재취업 심사 공백 해소

-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법무·세무·회계법인과 달리 관세법인은 제외돼 있어 관세청 퇴직공무원과 현직자 결탁², 수사정보 유출 등이 만연
- 후속조치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 대상에 관세법인 추가, 관세사법 개정을 통해 전관 출신 관세사에 대한 광고 등을 금지하고자 함

1. '16년에 성과연봉제 도입 공공기관 임직원에 인센티브 지급

2. 수출입관련 기업 수사를 전관 출신 관세사들이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수료 받음

권성동 의원

정부 2년...소득주도성장 실험은 완벽한 실패, 정책 대전환해야

☑ 주요 내용

▶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인정하고, 정책 방향 대전환해야!

- 건설투자 확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지시 등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에 대한 연이은 말바꾸기 행태를 비판하고, 소득주도성장이 명백히 실패하였음에도 어느 하나 책임지는 자 없이 ‘포용국가’ 등으로 이름만 바꾸어 넘어가려는 행태를 지적함
-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성장정책이 아니라 인권정책으로서 분배라도 성공하여야 할 것인데,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5.3배)으로 벌어진 상황에서 “소득개선에 대한 정부의 정책 효과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 망발을 일삼는 청와대 참모의 행태를 비판함

▶ 노조 눈치만 보는 文정부, 공공기관 개혁 없이 국가 미래 없다!

- 작년 339개 공공기관의 순이익이 85% 감소한 상황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참사를 일으킨 경제정책을 만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동원하여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늘려, 공공기관 인건비는 1년 사이 3조원(10.7%)이 증가하여 30조원에 육박함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직무급제 도입’ 또한 전체 공공기관 339곳 중 3곳 도입으로 미미한 상황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밀어붙이면서, 직무급제 도입은 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기재부와 고용노동부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도입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함

▶ ‘치맥’은 되고 ‘맥치’는 안된다? 시대에 뒤떨어진 주류통신판매 규제 철폐해야!

- 우리나라 주류통신판매 규제의 역사를 보면 우선 규제했다가 여론에 밀려 그때그때 입장이 바뀌는 식임. 관은 결코 급변하는 세상에 따라갈 수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젊은 창업가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걸림돌만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규제를 철폐할 것을 촉구함

김광림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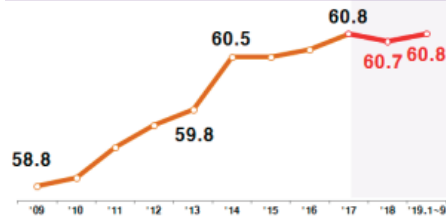
문재인 정권의 낙관일색 경제 인식 진실은...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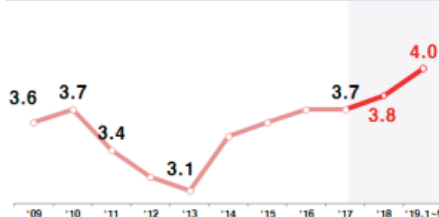
▶ 대통령 '20예산안 시정연설, 보여주려고 싶은 통계를 고르다보니 왜곡 일어나

- 발언中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16년 26위에서 금년도 13위”
⇒ ’17년 구지수에서 신지수 변경으로 순위가 자동으로 오름
⇒ 높게 평가받은 재정건정성(1위), ICR 보급(1위) 등은 이전 정부의 성과, 현 정부 들어 ‘정부규제’ 78→87위 / ‘노동유연성’ 87→102위 등 저조
- 발언中 “국가신용등급 일본, 중국보다 높아”
⇒ 국제신용평가사의 현재 국가신용등급은 이전 정부에서 달성해놓은 것
S&P:AA·stable(°16.8) / Fitch:AA-·stable(°12.9) / Aa2·stable(°15.12)
- 발언中 “고용률 66.7% 역대 최고, 취업자도 3~40만명 증가”
⇒ 15세 이상 고용률 ‘답보’ 지난해엔 10년 만에 하락, 실업률은 ‘최악’

매년 오르면 고용률, 작년부터 답보상태 / %, 전년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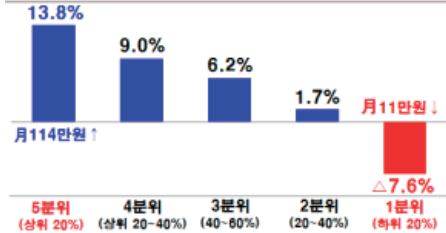
금융위기 이후 최악 실업률 / %, 전년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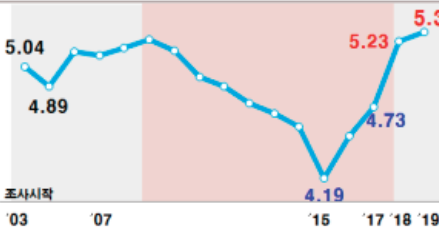
▶ 현 정부 들어 2년간 저소득층 소득만 줄어, 빈부격차 ‘역대 최대’

- 소득주도 경제실험 2년, 저소득층의 소득은 마이너스 7.6%로 감소, 고소득층은 13.8% 증가
- 그 결과 이전정부에서 꾸준히 개선되던 소득양극화, 역대 최대

저소득층의 소득만 감소 / '19년 2분기, '17 2분기 비. 통계청



소득격차 역대 ‘최악’ / 매 2분기 5분위 배율, 통계청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세금주도성장, 베네수엘라식 확장재정 이제 그만!

☑ 주요 내용

▶ 잇따른 세제개편과 복지비용 확대, 조세 포퓰리즘 우려 지적

- 문재인 정부는 과세 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 없이 세제개편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대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가업승계를 방해하고 기업인의 경영의지를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함. 따라서 가업상속을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 활동의 연속성 문제로 접근해 가업승계제도의 자격기준과 사후관리요건을 독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최고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제도 활성화를 위해 (i)공제대상 확대, (ii)고용 유지요건 완화, (iii)상속공제액의 확대 등 '세 부담과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제안함

▶ 계속되는 금리인하, 또 다른 글로벌 경제위기 시 정책 수단 없어

- 2017년 9월 경기 정점 이후 하강기에 2번의 금리인상은 경기판단의 오류이자 통화정책의 실기임을 지적함
- 특히 우회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듯한 청와대와 여당의 발언에 한국은행 총재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지적하고, 경제 포퓰리즘 시대에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문함

▶ 악화하는 경제지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왜곡

- 정부가 재정을 쏟아 부어 만든 것은 60세 이상 초단기 일자리이며, 일자리 증가라는 착시 속에 3040/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은 급증하고 있음.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함

박명재 의원

애꿎은 국민들만 고통 받는 現정부 경제정책에 일침을 가하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

☑ 주요 내용

▶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여론조사로 밝혀냄

- 국민 60% 이상, 우리 경제 위기상황이고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평가
- 기재부 장관도 여론조사 결과에 수긍하고 정책에 참고하겠다고 답변

▶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제시

- 한국의 국제조세경쟁력 저하로 인한 기업투자 저조를 지적하고,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법인세제와 상속세제 개편방안을 구체적 제시
- ▲법인세 최고세율을 개혁수준으로 20%(5%p ↓)까지 인하하고 요율체계 2단계로 단순화, ▲R&D 등 비과세·감면 확대, ▲해외소득 과세면제 등
- ▲상속세 최고세율 법인세와 동일하게 하거나 OECD 평균(26%)수준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기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 ▲자본이득세 도입 등

▶ 조국일가 법인의 고액상습체납을 최초로 제기 (국세3건·12억원, 지방세42건·8천2백만원)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각종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조국일가의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는 점을 지적하고 추적조사 촉구
- 또한 지난해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전년대비 3.4배 강화했음에도 조국일가의 불법 증여, 명의신탁과 차명거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어 직무유기임을 지적
- 조국일가의 불법과 편법에 복지부동하고 있는 국세청의 조사 촉구

▶ 부자를 최악시 하는 정권기조에 맞춘 '세무조사' 운용 지적

-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있지만 매출 높은 기업 세무조사 비율은 지난해(16.2%→20%) 급증해 기업운영에 상당한 부담,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도 2,098건으로 전년(614건)대비 3.4배 급증
-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세무조사 추정액이 전년대비 1.5배 급증한 것과 매년 최대치 경신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등 각종 조사부담 급증을 지적
- 정권하명·표적조사와 징벌적·여론몰이식 징세행정 지양 요구

재정정보원의 총체적인 정보관리 실태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요구

☑ 주요 내용

▶ 국고 관련 5만5천명이 이용하는 ‘디브레인’ 문제점 방치

- 정부가 이용하고 있는 재정정보원의 ‘디브레인’ 시스템의 경우 1일 평균 처리 금액은 5조원에 달하는 정보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재정정보원은 ‘17년 재정분석시스템 고도화 작업(’17년 6월~’17년 12월)을 실시하면서, 용역업체를 통해 백스페이스 등에 의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비인가 자료에 접속할 수 있는 오류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 발생

▶ 재정정보원 내부인사가 용역업체에 인사청탁

- 재정정보원 내부 인사가 2017년 5월경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외주 인력을 사용해달라고 청탁을 하였고, 실제 고도화사업 수행 과정에서 외주인력 2명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음. 재정정보원 임직원 행동강령에서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소개하는 알선과 청탁 등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식 행정

▶ 재정정보원의 보안업무 허술 및 솜방망이 처벌

- 재정분석시스템의 경우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하지 않고 있어 해킹의 위험성이 크고, 보안감사 및 보안컨설팅을 실시하지 않고 정보보호 전담 조직이 전무한 등 각종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였음
- 뿐만 아니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징계에 그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함

엄용수 의원

국가의 백년대계 설계와 국민의 편익 증진

☑ 주요 내용

▶ 초저출산 현상 심화, 국가평균출산율을 상회하는 경우 초과분만큼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추가 지급 필요

-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생산연령인구 2067년에 총인구의 45.4%에 불과, 작년 합계출산율 0.98, 최초로 1미만으로 떨어짐
- 정부는 2004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뒤,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4년째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
-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때, 평균 출산율을 상회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에 대하여 해당 출산율의 상회율 만큼 국민연금 기본액을 추가 지급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 중간예납제도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책 필요

- 최근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비율과 전체 법인의 당기순이익 간 상관관계가 반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기업 실적 호조로 인해 법인세수 확보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세금 감면을 이연하여 중간예납을 적게 받고, 법인세수 확보에 여유가 없을 때에는 중간예납을 많이 받는다는 비판도 있음
- 중간예납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책 필요

▶ 기간연장 세무조사 건수 지속적으로 증가, 관련 규정 개선 필요

- 기간연장 세무조사 건수 증가, 비정기 조사에서 기간 연장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국세기본법」은 연장 횟수와 최대 연장일수에 대한 제한이 없음
-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연장조사의 경우 연장 횟수를 제한하고, 최대 연장일수에 대한 상한선 필요 및 관련 법령규정 개선 필요

윤영석 의원

소상공인 간이과세 사업자 지원을 위한 국정감사

☑ 주요 내용

- ▶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은 간이과세제 도입이후 물가상승률이나 1인당 국민소득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유지됨. 기준금액 인상 필요성 있음
- 소상공인 5년내 실패율 27.7%로 영세자영업자 사업 안정화 위해서도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할 필요 있음
-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563만명 중 27.7%에 해당하는 156만명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중임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2013년 35.7%에서 2018년 27.7%로 5년간 8% 줄어들었음
- 지방중소도시의 중심상업지역까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하여 4,800만원 미만 사업자라도 간이과세 적용되지 않는데 지방도시는 신규 사업 정착 시까지 간이과세 적용되도록 해야 함
- 윤영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양산세무서장을 설득하여 신도시 중심상업지역 상인들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음

최교일 의원

소득주도성장 전면 수정해야
저출산대책 시급 / 조국일가 세무조사

주요 내용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분위의 가구당 월평균 전체소득 및 근로소득은 분기별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5분위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는 분배와 복지의 문제이지 성장의 문제로 결코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음

심각한 저출산 문제, 국가 비상상태

- 우리나라의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로 1 밑으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데 이어 2019년 출생아수가 30만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과 3년 만에 30만 명대가 깨질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출산 가정에 1천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극약처방을 내서라도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음

조국 일가 세무조사 촉구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탈세와 관련하여 부산 해운대구 소재 빌라 및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증여세 탈루, 정경심 교수의 코링크PE 등 관련 회사의 주식 차명거래에 의한 증여세 탈루, 동생 조권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카페휴고의 웅동학원에 대한 허위의 양수금채권에 대한 증여세 탈루 등 10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국세청장에게 이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촉구하였음

문재인 정권의 경제참사 집중 지적과 정책 대전환 촉구

☑ 주요 내용

▶ 경제위기

- 경제성장률 하향, 기업의 탈한국화, 투자·소비·수출 급감, 소득격차 심화, 자영업 폐업, 중산층 붕괴 등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근로제 강행으로 인한 경제참사는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며, 이제라도 잘못된 소주성을 폐기하고 시장주도성장으로 정책전환을 이룰 것을 촉구함
-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은 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만큼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정부의 안일한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함

▶ 고용대란

-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경제활동 주축인 3,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음. 또,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금융·보험업은 감소세이고, 초단기시간 일자리(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만 급증하고 있음
- 내년도 일자리 예산 25조8천억원 중 노인 일자리에 1조2천억원 편성된 반면, 고용 허리증인 40대 위한 예산은 67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함

▶ 재정건전성 경고등

- 정부보조금과 근로장려금이 급증하면서 부정수급자가 늘고 있음. 또 기초연금인상, 아동수당,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문재인케어, 공무원 확충 및 연금 보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현 정부의 포퓰리즘 공약 이행에 재정이 대거 투입되고 있음
- 국가채무가 올해 734조원, 2023년 1천조원 돌파, 2028년 1490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분석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38.0%에서 내년 40.5%로 늘어난 뒤, 2028년 5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연평균 증가율이 8.2%나 됨. 이는 총수입의 증가율이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임

▶ 기업환경 개선 필요

- OECD 회원국의 최근 6~7년간 평균 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이 12.6%인데 한국은 19.9%로 너무 높은 상황이라며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함을 지적
과도한 노동·환경규제를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 지원을 촉구함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

불환빈 환불금, 공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주요 내용

조국 자녀와 관련된 서울대, 부산대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 논문 공저자 윤리 강화시스템 마련 촉구
- 서울대가 조국 자녀에게 지급한 '유령장학금' 문제 지적,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경력 진위 여부 확인
- 조국 자녀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쓰여진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여부, 위조로 밝혀질 시 부정입학으로 인한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 여부 확인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 반대

- 과거 진보정권에서 출발한 자사고 정책에 대한 폐지 당위성 질의
- 교육법정주의에 의거한 교육제도 추진 필요성 강조
- 일반고의 서열화 문제점 지적, 공교육 효율성 강화방안 주문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기

- 교실에 설치되는 기계식 공기순환기와 공기청정기의 문제점 지적, 학교 석면제로화 사업의 떨어지는 실효성 지적, 대책방안 마련 위한 교육부차원의 적극적인 자세 주문
-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통학거리에 대한 문제점 지적,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한 근거 마련 필요성 강조하고 대책방안 강구 촉구
- 학령인구 대비 증가하는 학교폭력 현황을 지적,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 필요성 강조

곽상도 의원

**조국 일가의 학사농단 지적
(부정입학, 특혜장학금 등)**

 **주요 내용**

▶ **부산대 의전원 및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특혜, 입시부정 의혹**

- 조국 딸, 부산대 지원 시 위조 대학총장상, 기여 없이 제1저자 등재 단국대 논문, 서울대인권법센터/키스트 가짜 인턴경력 등 허위스펙 제출 확인 및 이에 따른 입학 취소 검토요구
- 조국 딸, 2차례 유급에도 6회 연속 지급받은 장학금 수령 공개.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교수의 부산대학병원장 시도 및 부산의료원장 취임과 조국 전 민정수석과 사이에 대가성 의혹
- 조국 딸, 서울대대학원 전액 장학금 받았으나 누가 줬는지 오리무중. 진상파악 요구

▶ **조국 석박사학위 표절 의혹**

-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국 석사, 박사 학위 부실 심사 의혹 제기, 연구진실성위원회 재심사 촉구 관철

▶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비자금 조성 의혹**

- 조국 일가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관련 이사장 개입 정황에 따른 특별감사 필요 지적
- 웅동학원 담보 대출금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1997년 12월 조국 일가의 유학 귀국 직후 고가 아파트 매매 확인. 사학비리 척결 차원의 감사 촉구

▶ **교육부 조국 딸 관련 미성년 논문조사팀 조국 전 민정수석에 감찰 당해**

- 조국 전 민정수석, 교육부 미성년 논문 조사팀을 청와대로 불러 논문조사 방법, 조사결과 자료 제출 요구. 조 전 수석이 교육부를 압박해 본인 딸의 미성년 논문을 덮으려 한 의혹 지적
- 민정수석 감찰팀이 교육부 차관 만나 미성년논문 관련 압박한 의혹 및 조국 딸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의 부산대병원장 선임에 관여한 의혹 지적

▶ **교육부 오락가락 교육정책, 국보법위반 직위해제 교사의 복직 봐주기 지적**

- 유치원 영어 방과 후 수업금지 정책 통보 하루 만에 번복, 축소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 1년 만에 확대 등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 지적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직위 해제된 교사 4인 복직에 대해 교육부가 교육청에 '복직 발령 처분' 취소 요구서만 보내고 무조치 지적

김현아 의원

우리아이들을 위한 공정한 학교, 정의로운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

☑ 주요 내용

▶ 수시학종 축소 및 정시 확대

- 감감이, 불공정, 금수저 전형 학종 사교육비 증가시켜
- 학생부종합전형 부정적발 건수 5년간 단 9건, 부정입학 적발 어려워

▶ 법정감염병 학생환자 2배 증가, 학교 방역체계 구멍 뚫려

- 2018년 법정감염병 학생환자 43만 9,025명, 전년대비 2배 증가
- 인플루엔자 국가지원 대상자 만12세에서 만18세까지 확대

▶ 강사법 시행의 역설, 강사법 시행이후 73% 대학에서 교원이 감소

- 대학 73%서 교원감소, 18%는 50명 이상 줄어들어 광주 조선대 최다
- 대책 없는 교육부는 대학에게 책임전가, 대학은 학생에게 피해 전가

▶ 학교 안전확보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이 필요

- 전국 학교 4곳 중 3곳, 화재예방 위한 스프링클러 미설치
- 교내 도로와 보행로 구분 안 된 학교 전체 3곳 중 1곳, 통학로 위험 노출
- 2018년 학생안전사고 발생 11만4260건, 학생 49명당 1건의 사고 발생
- 유·초등학교 건물에 약 30%가 외부 치장벽돌 낙하 위험
- 침묵의 살인자 학교석면, 3년째 제거율 33.2%에 그쳐

▶ 경제사정 악화로 졸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기간 3년 이상 31% 달해

- 안심전환대출보다 비싼 학자금 대출 이자(2.2%),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평균 연체기간 3.1개월
- 비싼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추고, 전환대출이 필요

▶ 교육부 차원의 체계적 폐교 자산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전국 2019년 미활용 폐교 395교, 미활용 폐교 대장가액은 2,795억에 달하지만 개별교육청 매각 어려워 조속한 대책마련 필요

▶ 국립대병원 비급여진료비 천차만별, 최대 222배 격차 발생

- 대학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격차, 결국 피해는 지역민이 받아, 비급여 진료비, 격차 줄이고 세부정보 공개필요

이학재 의원

**조국 사태로 드러난 ‘내로남불’ 문재인정부 실체,
대학 연구윤리 위반 실태 지적**

 **주요 내용**

- ▶ **조국 딸 입시부정 의혹에 손 놓고 있는 ‘내로남불’ 문재인정부의 교육부 질타**

 - 이전 정부(교육부)는 특검·국정조사 의결에 앞서, 정유라 입시부정 관련 이화여대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감사 실시 25일 만에 정유라에 대한 입학취소·학적취소를 요구하고, 관련자를 고발·수사의뢰·징계하였음.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교육부는 조국 딸 관련 의혹 제기 이래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한 달 반이 지나도록 특별감사 실시는커녕 조국을 감싸는 데만 급급함. 이에 ‘위선자’ 조국 의혹에 손 놓고 있는 ‘내로남불’ 교육부 질타(감사 착수 요구)

- ▶ **조국 PC 미스터리 : 조국, 서울대 PC 절도했거나, 딸 ‘제1저자’ 논문 직접 수정했거나!**

 - 서울대가 조국에게 지급한 PC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국 딸 논문 초고의 최종저장일은 2007년 8월 26일인 반면, 서울대가 노후화 된 조국 PC를 교체한 시점은 2009년 12월 11일인 것으로 드러남 (19.10.11. 동아일보 3면)
 - 결국 조국 딸이 집에서 서울대 PC로 논문을 수정했다면 조국은 해당 PC를 학교로부터 무단 반출(절도)한 것이며, 아니라면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인데 이는 조국이 서울대 연구실에서 딸의 논문을 직접 작성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음

- ▶ **‘조국 딸 논문’으로 드러난 대학 연구윤리 위반 실태, ‘연구윤리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

 - 국가 R&D 예산이 20조가 넘는데도, ‘연구(비)부정’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음
 - 조국 딸 논문도 ‘허위 공저자 기재’, ‘허위 사사표기’ 등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있고, 교육위 국감 결과 “국비 381억 받은 연구에 서울대 교수들 자녀 끼워넣기”(19.10.10. 한국일보 1면, 단독), “경북대 교수 자녀들도 ‘아빠 찬스’, 학교는 부실 조사”(19.10.14. 국민일보 단독) 등 대학의 연구윤리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하지만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 조사는 유명무실한데, 이에 연구윤리위원회의 격을 대통령 혹은 부총리 직속으로 상향하여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장관 적극 검토 답변)

전희경 의원

무능을 넘어 불법으로 치닫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

주요 내용

공모 절차도 없이 정부 돈 10억... 수상한 스포츠 법인

- 정부국정과제 일환으로 설립된 학교체육진흥회에 대한 보조금 특혜수령, 정부 정책개입 등 의혹이 있음
- 진흥회는 학교체육진흥법 취지와는 다르게 설립돼 운영돼옴. 학교체육진흥법에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제17조)고 적시돼있지만, 진흥회는 이름만 유사할 뿐 교육부 산하가 아닌 경기도교육청사단법인으로 세워짐
- 진흥회가 설립 1년이 안 된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은 총 9억 6000만원인데, 문제는 보조금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받음. 공모 없이 보조금을 따내는 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사단법인에 불과한 단체에 정부보조금, 국가사업 몰아주기 등 권력 사유화의 전형

문재인 정권의 비호아래 법 위에 군림하는 전교조

- 불법 와중에도 꼼꼼히 나랏돈 챙기는 전교조.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
그 와중에 휴복직 날짜 조정해 방학 중 급여, 성과급, 명절휴가비 챙겨가는 전교조
- 합법적 노동조합 아닌 전교조에게 원천징수 특권 챙겨주는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불법인 전교조 조합비를 전교조 분회비라는 이름으로 원천징수 혜택 제공
- 전교조를 위한 원샷 특채_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선거법위반으로 유죄를 받아 해직된 전교조 간부, 교사 특별채용으로 특혜(5명 채용 중 4명이 전교조 간부)

고등학교 재시험 급증: 시험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는?

- 출제오류 등으로 인한 고등학교 재시험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2019년 1학기에만 2,021건) 대학입시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었지만 불신도 커져 시험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
-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부 비교과의 축소와 내신 비중의 확대가 될 것. 하지만 재시험 현황을 통해 확인될 수 있듯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의심받고 있음. 심지어 일부 교사는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문제까지 시험으로 출제하고 있는 상황
- 내신이 대학입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내신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험 문제 관리에서 오류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의원

정부·여당 총선용 여론 장악 방지를 위한 종합 대응책 마련

☑ 주요 내용

▶ 인위적 조작 의심되는 포털 실시간 검색어 지적 및 제도 개선

- 실시간 검색어에 키워드 뒤집기, 인위적 순위 조작 등 심각. 거대 포털의 실검 서비스 폐지를 비롯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 요구
- 선거 기간 실검 폐지 적용 여부 공청회 추진. 국정감사 이후 ①비공개 방식의 알고리즘 검증 추진 ②국정감사 이후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 ③국회-정부-선관위-포털 협의체 구성

▶ 공영방송 편향 방송 및 위헌적 규정 지적

- 공영방송의 광화문/서초동 간 보도 형태 비교 분석을 통한 편향성 지적
- 공영방송(KBS, MBC) 경영 실패의 원인이 노조 출신 경영진의 무능과 자기사람 챙기기임을 밝히고 대책 촉구
- 유시민씨 방송 개입 및 성희롱 발언에 대한 경영진 늦장 미흡 대응 지적
- KBS 이사회 규정 강행처리 위법 지적 및 공영 방송 지배구조 개선 요구
-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변호사법, 공무원법 등 5개 위법 사항 지적 및 방송 편성 개입에 따른 자진 사퇴 촉구
- TBS 시사보도 편성은 방송법 위반이며, 좌파 진보 인사 위주로 고액 출연료 지급 지적. 재단법인화 및 2020년 재허가에 반영 요구

▶ 고위급 인사의 특권 남용 및 북한 편들기 지적

- 10월 11일 KIST 허위 인턴으로 논란이 있는 조민이 KIST 내 조형물에 이름이 새겨진 사실 최초 지적
- 문미옥 차관 자녀 고등학교 재학 시 문차관 재직 기관에서 특별 활동 및 수상 실적으로 스펙 만든 사실 지적
- 코링크PE, PNP-메가크라프트의 버스와이파이 입찰 비리 및 여권 인사 개입 사실 적발
- 북한 축구 중계 불방, 주권방송 동요메들리 무장계, 북한 탈주민 핵실험 방사능 피폭 감추기 등 문재인 정부의 북한 편들기 지적

허위, 위선, 편향 = 문정권의 실체

☑ 주요 내용

- ▶ **조국딸 KIST 가짜인턴**
 - 관련자료 최초공개 → 허위 증명
 - 조국 딸 출입기록 3회, 연수기간 5일
- ▶ **가짜 일자리**
 - 청년과학기술인 일자리 3000명? → 451명!
 - 월급, 정규직 여부 확인불가
- ▶ **문준용 처, “허위경력 기재 의혹”**
 - 창의재단 제출서류 허위
 - 검증절차도 없어
- ▶ **피복의심 탈북자 9명 중 8명 핵실험장 인근 출신**
 - 관련자료 최초공개 → 복핵 방사능 쉬쉬 정권
- ▶ **유튜브 노란딱지 “우파 찍어내기”**
 - 최초 문제제기 → 공감대 확산
- ▶ **한상혁 취임 후에도 휴업X**
 - “방통위 설치법 위반”
- ▶ **원자력 의학원, “낙하산 감사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 커피숍에서 19만원? 이인영의원과 48만원어치 송년회?
- ▶ **KBS, “조국뉴스 줄이라”**
 - 언론 노조의 조로남불 폭로
- ▶ **KBS ‘시사기획 창’, 조로남불 발언 삭제**
- ▶ **KBS 아나운서 휴가비 횡령, 회사는 쉬쉬**
 - 사후 휴가처리 봐주기 급급

박성중 의원

조작 및 억압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 주요 내용

▶ 실시간검색어, 댓글 여론조작에 대해 포털의 대책 요청

- 최근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실시간검색어, 댓글 등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되고 있음
- 내년 총선에서 제2의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이 일어날 수 있어 여론조작 방지 대책을 요청
- 그 결과 카카오의 댓글 폐지 및 실시간검색어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

▶ 유튜브 노란딱지 남발로 보수유튜버들의 표현의 자유 억압

- 이에 구글 존리 대표에게 노란딱지의 문제점 지적하고 개선책 요구
- 노란딱지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해 토론회 개최(10월 24일)
- 11월 중, 구글과 함께 보수유튜버들을 위한 설명회 개최 예정

▶ 친정부 보도 등 방송 편향성 문제 지적

- 방송사 '시청자 위원회' 친정부·운동권 중심 구성(조선일보 10.4)
- MBC 최승호 사장 취임 후 파업불참자 업무 배제 및 업무배제에 따른 여기자 유산 등 패륜적 행위 발생(조선일보 10.14, 중앙일보 10.15)
- KBS-MBC 광화문 및 서초동 집회 차별 보도 지적 : 페르미 기법 이용 서초동 집회 과장 보도 밝혀
- 종편 평가에 있어서의 계량지수 확대 방안 정책 제안

▶ 조민 인턴 관련 조국 위증 문제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조민이 인턴했을 당시 KIST 출입절차는 출입증 패용 형식(스마트 게이트 태그 형식 설치 전)
-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태그했다'고 밝힌 것은 사실과 다름(위증). 조민과 사전 교감 없던 것으로 드러남
- 방송보도: TV조선, "조민 KIST 출입 때 태그 장비 없었다"...조국 위증 논란 (19.10.11)

송희경 의원

**사이버안보·개인정보는 ‘구멍’, 국책사업은 ‘깜깜이’,
기술경쟁력은 ‘나몰라라’, 탈원전은 ‘국민불안’!**

☑ 주요 내용

- ▶ **조국 일가 사모펀드 투자기업(WFM) 부설연구소, 공공와이파이사업(메가크래프트) 등 국책·정부지원 사업 총체적 관리부실!**

 - (WFM) 기업부설연구소 실질적 자격 미달에도, 하루만에 인정서 발급. 묻지마식 허가, 관리부실. (정보화진흥원) 메가크래프트의 버스 WiFi 사업 수주 특혜
- ▶ **블루투스·공공와이파이 보안 사각지대. R&D는 미흡, 피해사례는 방치!**

 - 와이파이 해킹 시연·취약점 문제 지적, 정부 공공와이파이 사업 확대 중이나, 보안대책·피해 사례 조사 전무
- ▶ **포털 내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조작 난무!**

 - 포털 내 좌표찍기, 매크로, 실시간 급상승검색어 조작 등 여론 왜곡 지적
- ▶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 해외의존도 심각!**

 - 로봇 핵심부품 ‘감속기’ 95%가 일본제품, 정부 R&D에만 혈세낭비, 사업화 전무
- ▶ **불법정보 난무하는 인터넷, 중국 SNS 기업 국내 청소년 개인정보 유출!**

 - 국내 최대 온라인 성매매 포털 방심위 대응부족, 중국 SNS 기업 ‘틱톡’, 中 정부에 개인정보 무단 유출 우려 심각. 방통위·방심위 대책마련 촉구
- ▶ **Sun Sharing(영농병행태양광사업), 탈원전의 실태**

 - 탈원전 인사 5명이 태양광발전소 50곳 운영. 한수원 부지확보도 5% 불과
 - 영농병행 태양광사업, 일반 태양광 대비 설치비용 30% 높고 실효성은 부족
- ▶ **후쿠시마 오염수, 북한 우라늄 폐기물 유입 우려 원안위 대책 필요!**

 - “일본의 선발표가 있다면 시뮬레이션 하겠다”는 원안위, 안이한 대응
 - 오류 투성 ‘해수방사능감시기’ 시정 및 원자력손해배상보충협약(CSC)가입 촉구
 - 북한 우라늄폐기물 유입 가능성 제기에, KINS, “이상없다”. 근거요청엔 ‘모르쇠’
- ▶ **공영방송 객관성·균형성 실종!**

 - (KBS) 시사 프로그램, 4주연속 ‘조국 비호 토론’ 방송 등 방송의 균형성 상실

윤상직 의원

우파유튜버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KBS 수신료 불법 징수 고발

주요 내용

▶ KBS TV 수신료 부과·징수 상 드러난 방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내용 지적

- 방송법상 수신료 징수는 수상기 소지자가 등록 후 수신료가 부과되어야하나, KBS 및 한전은 별도 등록절차 없이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법 위반사항임
- 또, KBS 수상기 등록대장에 기재된 정보는 한전에게 제출받고 있는데, 한전이 제출한 정보는 제3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라 지적 ⇨ 검찰 수사의뢰 추진, 감사원 감사·청문회 추진

▶ 보수 유튜브에 집중되는 ‘노란딱지’는 공정거래법 위반

- 13개 유튜브 채널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란딱지 발부 기준 모호하고 특정 보수유튜브 방송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
-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와 동법 3조의2를 위반 ⇨ 고발 추진 중

▶ TBS, ‘김어준 뉴스공장’의 보도편향성 문제

- ‘교통·기상 중심 방송’으로 허가를 받은 TBS의 시사보도 방송 비중이 높음
- 특히 2019년 ‘김어준의 뉴스공장’ 보도분석결과 보도편향성이 심각
 - 패널 편향성 : ▲민주당 90회, 자유한국당 48회로 민주당이 1/2수준 ▲특정 시민단체 위주의 패널출연(민언련 34회, 참여연대 10회, 민변 4회)
 - 주요이슈에 대한 편파보도 : ▲‘김경수-드루킹사건’ 보도시 김경수 옹호 보도 ▲조국사건 보도시 조국 옹호 보도 및 조국 딸 특별출연을 통해 변명 시간할애
 - 팩트체크는 자유한국당 의원 발언과 조선·동아·중앙일보에만 집중

▶ 과기부 ‘채용비리 특별점검’, 부당 채용관련자 솜방망이 처벌 문제

- 과기부 산하 60곳 채용비리 점검결과, 74건 처분에 수사의뢰 2건을 제외하고 징계자는 0명
 - 처분은 일괄에서 기관주의 통보수준에 그쳤으며 개인비리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징계처분을 내린 사례는 없었음
- 정부의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나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 발생. 이에 과기부의 채용비리 점검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한 확인필요 ⇨ 감사원 감사 청구

공영방송 좌편향성 지적 및 좌파 나눠먹기식 정부사업 비판

☑ 주요 내용

▶ 공영방송 편파보도 및 좌편향 콘텐츠 지적

- 방통위원장, KBS·MBC·TBS 등 공영방송 사장들이 좌파 낙하산 인사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극에 달한 좌편향적인 프로그램 및 콘텐츠와 출연자들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과 방송사의 자정노력 부재가 방송의 공공성을 크게 해치고 있음을 집중 추궁

▶ 좌파 기득권 세력 공공사업 빨대 꽃기 비판

- 문재인 정권에서 여권 핵심인사들이 태양광사업 등 정부정책에 특혜를 입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정황을 지적
- 조국 일가 사모펀드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고, 이에 여권 핵심인사들이 가담한 정황을 비판하고, 해당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주문

▶ 포털 조직적 실검 댓글조작 비판 및 시정촉구

-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조직적 댓글조작 정황에 대하여 과기부 장관에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과 각 포털 사장들에게 묵인·방조식 대응의 잘못을 추궁하고, 개선방안으로 실검댓글 폐지 및 인링크 방식의 포기 등을 제안

▶ 세금잔치 부실학회(한국연구재단 및 KAIST)

- 과기부에 2018년 12월에 부실학회 참가자 400명을 대상으로 소명절차를 거쳐 부당하게 쓰인 예산 14.5억원을 회수할 것을 촉구

▶ 화웨이 등 5G장비 국내도입 관련

- 인터넷 기사 250건 보도의 6,500여개 온라인 댓글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개, 다수의 국민들이 화웨이 5G장비 국내 상용화를 우려 및 반대하는 입장임을 확인
- 화웨이 5G장비의 백도어 존재 여부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수 조사 및 보안 문제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 요구

최연혜 의원

문재인 정부의 부정 특혜와 좌파 비즈니스 실체를 파헤치다!

주요 내용

조국 딸(조민), 엄마 동창 통해 KIST 인턴, 단 이틀만 출근했다!

- 조민 학생이 부산의전원에 지원 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1학년 때 KIST 인턴을 3주간 했다고 기재함. 그러나 실제로는 대학교 2학년 때인 2011년도였으며, 출입 기록 확인 결과 단 3일에(7월 18, 21, 22일) 불과했음. 자기소개서 허위 작성을 밝혀냄
- 아울러 이 KIST 인턴 활동 증명서 역시 자기소개서에 맞춰 허위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함

허위 문서·실적 부풀리기, 文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태양광 사업의 실체를 밝히다!

- ‘(주)랜턴 A&I’가 일본 태양광 사업 진출을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제출한 자료에 오거돈 현 부산시장, 김창섭 현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명단을 고문·자문단에서 발견함. 공제회는 500억 원짜리 투자 약정 과정에서 이들 이름만 보고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음을 밝혀냄
- 또한 ‘(주)랜턴 A&I’ 투자 약정만 맺고 실제 투자 실적이 없음에도 1조 원이 넘는 국내 최대 태양광 사업(아마데우스)에 일본 태양광 실적을 제출하고, 주관사 지위를 따낸 비위를 파헤침

원자력안전재단, 좌파 동지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쪼개기 일감몰아주기!

- 탈핵 운동가인 김혜정 이사장 취임 이후, 그 동안 원자력안전재단의 법률 자문을 하지 않던 법무법인들과 수의계약을 맺고 일감을 몰아준 행위를 발견함. 이렇게 특정 로펌에 몰아준 금액은 전체 법률 계약의 59%에 달했음
- 법무법인 한결과 맺은 2,000만원 짜리 수의계약은 원자력안전재단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고, 법무법인 지평과는 원안위의 지적 이후 990만원, 400만원으로 금액을 쪼개서 편법으로 수의계약 한 것을 밝혀냄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의원

윤상현 “북한이 말한 단계적 비핵화는 단계적 핵무장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기극에 놀아나는 것이다.” (연합뉴스)

주요 내용

-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자유한국당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의 “북측으로부터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북한을 직접 상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윤 위원장이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직접 북한의 비핵화 정의를 들어봤냐”고 거듭 묻자 약 5초간 답변을 하지 못하고 침묵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완전한 비핵화’ 개념이 뭔지 북한과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저는 아직 북한과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 없다”고 말한 뒤... [동아일보]
-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도 “남북 축구 경기가 통신두절 상태에서 진행됐는데도 통일부의 대응은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청와대는 물론 통일부도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등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BS]
- 윤상현 의원도 선수단이 외부와 제대로 연락도 하지 못했던 상황을 거론하면서 “응급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 통일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했는데, 선수단 안위는 걱정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중앙일보]
- 결국 문제는 강제징용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이 금전적 배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강제징용에 관한 경제적 방식의 배상을 더는 일본에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자존심과 도덕적 우위를 지키자는 방안이다.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의원이 이 방안을 지지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중앙일보]
-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우리 대통령이 방중한 지 2년이다 됐는데 아직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시기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사드(THAAD) 보복을 철회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선일보]

김재경 의원

제역할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

☑ 주요 내용

▶ 말 뿐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책, 문제점 알고도 안고치는 통일부

- 통일부가 주도하는 범정부 고위급 협의체가 고위 공무원이 아닌 사무관·서기관 등이 대신 참석하고,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
- 탈북민 정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자체들도 거주지보호담당관을 15개월마다 바꾸는 등 한직으로 인식하는 관행 여전
- 통일부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확인하고 개정안을 제출받았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었음

※ 한국일보 6면 “탈북민 지원 범정부 기구 유명무실”(10.14)

▶ 주일대사관에서 막힌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협의 공문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위해 행안부에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공문까지 발송했지만, 외교부가 이를 일본정부에 전달하지 않음
- 당시 민정수석, 민주연구원장 같은 정권 실세들이 반일감정을 고취하고 있던 상황에서 주일 대사관이 정권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심
- 일본정부가 한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다고 밝히자, 행안부도 뒤늦게 미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외교부로 공문을 재발송한 상황

※ 세계일보 10면 “유해봉환 협의 공문 반년간 일에 안보내...”(10.20)

▶ 취임 22개월 만에 외부강연으로 1억 행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 통일부 유관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03회의 외부강연을 통해 1억 1600만원을 수령
- 김진향 이사장은 개성공단 가치 확산시키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통일부 장관은 셀프결제를 통해 약 2년 만에 연봉(1억4천만원)에 육박한 수입을 거둔 점에 대해 이제서야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답변

※ 서울신문 2면 “1년 10개월 동안 외부강연만 303회”(10.20)

김무성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실패

☑ 주요 내용

▶ 文정부 대북 정책은 실패! ‘北, 핵포기 않는다’는 전제하에 전면 수정해야

- 불턴 전 보좌관,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국민을 속여 온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
- 문재인 정부가 지켜지지 않을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기대하면서 시간만 보낸다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데 도움 주는 결과밖에 안 됨
- ‘북한이 핵을 포기할리 없다’는 전제하에 대북 정책의 전면적 수정 필요

▶ 기회의 땅 인도-베트남! 공관 증설 · 증원 등 선제적 대비책 필요

- 인도-베트남은 제조업의 한계를 마주한 우리나라에 기회의 땅
- 우리기업과 교민이 증가한 후 뒤늦게 공관 증설 · 증원을 조치할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해 기업 진출을 돕는 것이 필요. 즉각적인 조치 주문

▶ 지자체의 무리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과속 않도록 정부 대책 주문

- 대북제재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있을 경우에 해제를 고려할 수 있음
- 대북 지원·남북경협에 대한 지자체의 계획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준비 단계를 넘어 미리 예산을 투입하고 집행을 못해 방치되고 있는 것은 문제
- 정부가 지자체의 무리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권장하고 조장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음을 경고, 국제 공조 분위기를 역행해서 과속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

▶ 탈북민 확대하고, 북한 인권 탄압에 눈감는 문재인 정부

- ‘남북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여기는 文정부 때문에 소외감과 고통 더 느낀다’는 탈북민들의 토로 이어지고, 처우와 인식 악화로 신분 감추는 사례도 증가
- 그러나 통일부 보조금 받는 탈북민 단체가 없고, 탈북민 관련 장관 메시지도 한 건에 불과. 탈북민에 대한 확대 지적하고 처우 개선 주문
- 조사 결과, 탈북민중 인권침해 유경험자 비율이 해마다 대폭 증가
- 반면 <북한인권 증진정책 Q&A>자료에는 ‘북한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 피구금자의 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거주·이전 및 여행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참정권, 국적을 가질 권리, 재산권, 가족권과 관련하여 여러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명시. 개선 요구

‘국민 안전’ 점검

☑ 주요 내용

▶ ‘재외국민’ 안전 점검(2일 외교부 감사)

- 외교부는 감사원의 36개 재외공관 현지 실사에서 재외국민 재소자 관리와 관련해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재소자 관리 지침>은 오히려 재소자 명단 의무요청 빈도를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완화하는 훈령 개정을 함. 이는 재외국민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다시 ‘분기별’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함

▶ ‘탈북민’ 안전 점검(18일 산하기관 감사)

- 국내 3만 3천여 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72%가 여성이고, 이들 중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이루는 자들이 많으므로, 한부모 가정을 이룬 탈북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주목해야 함. 그런데, 탈북민의 보호와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연간 3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탈북 여성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많음. 따라서 앞으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적극 재정비할 것을 제안함

▶ ‘대표 선수들’ 안전 점검(17일 통일부 감사)

-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남북 축구전은 사상 초유의 무관중·무중계라는 ‘깜깜이 경기’를 넘어, 심각한 남북 관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임. 게다가, 축구가 아니라 전쟁을 방불케 했다는데, 이래가지고서는 2032년 남북올림픽 공동 유치·개최는 신기루에 불과함. 통일부장관은 북한 당국자에게 강력히 유감표명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유기준 의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 외교정책은 '실종'

☑ 주요 내용

▶ WFP 송금한 사업관리 비용 즉각 환수해야

- 7월24일, 북한의 식량지원 거부 의사로 대북식량지원 계획 물거품
- 통일부, 7월14일~8월14일까지 쌀 포대 제작하며 혈세 8억원 낭비
- WFP에 기송금된 사업관리비용 1,177만 달러 즉각 환수해야

▶ 대북차관 상환 촉구해야

- 대북차관, 총9억3천291만 달러로 우리 돈 1조 1,064억 원에 달해
- 식량차관 연체이자 4,400만 달러, 경공업 차관 연체이자 600만 달러
- 식량차관은 295회, 경공업 차관은 28회 상환촉구에도 무응답

▶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에도 묵묵부답, 탈북자 인권 어디에?
- 평양 무관중-무중계 촉구에도 남북공동올림픽 추진?
- 미사일 도발에도 9.19군사합의 위반 아니라는 대북굴종자세 잘못

▶ 조국 처남 재직 보나미시스템, 북한석탄 의혹 해운사와 같은 주소, 팩스번호 공유

- 현재 북한산 석탄 밀반출 혐의로 억류중인 '탈런트 에이스' 호는 국내 해운회사 동친해운 소속 '동친 상하이'였음
- 조국 장관의 처남이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보나미시스템은 동친해운과 같은 두우해운의 관계사
- 보나미시스템과 동친해운은 같은 주소지에 팩스번호까지 같아

▶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북한 편들고 지소미아 파기하다가 천문학적인 '안보국방 청구서' 받을 판

-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우리측 분담금으로 50억 달러(6조원) 제시
- 협상 앞두고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하면서 한미 동맹에 악영향 주는 빌미 제공하며 불리한 입장 자초
- 외교·안보를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급기야 지소미아 파기 같은 자해행위나 다름없는 선택을 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외교 안보 청구서'를 자초

▶ 코이카 낙하산 인사로 상임이사진 4명중 3명 채워

- 이미경 이사장 취임 후, 이사 3명 시민단체 출신을 포함한 외부인사로 채워
- 송진호이사, 부산YMCA사무총장 때 개발협력에 '한국이 이룬 민주화, 촛불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고 발언
- ODA 사업을 낙하산인사, 정권 코드에 맞는 사업 개발도상국에 전파

유민봉 의원

**‘청와대의 집행기관’ 외교부, 과대 포장 외교적 수사만 남발
‘북한만 바라보는’ 통일부, 정작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는 걸돌아**

 주요 내용

▶ (외교부) ‘청와대의 집행기관’ 외교부

- 대미(對美), 대일(對日), 대북(對北)을 비롯한 모든 외교안보 이슈를 주도한 것은 청와대
- 외교부가 청와대만 바라보면서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 多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 ‘대통령 권력 분산’ 등 주장했던 모습과 달라

▶ (외교부) 지나친 외교적 수사(rhetoric)

- 단순한 수사(rhetoric)를 넘어 용어가 담고 있는 실체(본질)를 고려하고 현 상황을 잘 설명한 것인지, 오해만 낳는 부적절한 선택인지 신중해야
-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 ‘업그레이드’(upgrade), ‘종전선언’(終戰宣言, Declaration of End to Korean War), ‘근본적 태도 변화’(transform) 등
- 미국은 ‘일반명사’인데 靑은 ‘고유명사’로 사용
→ 과대 포장, 과잉 해석 지양해야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및 통일부-하나재단-하나센터의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 (지원체계 문제점) ▲북한이탈주민법 상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없음 ▲통일부-지자체-하나재단-하나센터 간 역할 및 책임관계 이원화 ▲하나센터의 시설 및 규모 기준 없음 ▲사회복지사-전문상담사 인력 이원화
- (지원체계 개선방안) 종합적 과학적 조직진단 실시 후 지원체계 조직개편, 표준화된 하나센터 홈페이지 구축, 단일화된 인사복무관리제도 마련

정양석 의원

북한 비핵화와 우리의 역할

☑ 주요 내용

▶ 북핵 당사자로서 접근 필요

- 북한은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 관점에서 파악, 남북관계를 북미문제의 종속 변수로 바라 봄
- 남북대화를 북미회담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용으로 활용. 실질적인 남북대화는 거부
- 북한의 비핵화문제에 우린 아웃사이더, 중재자·당사자로서 역할 필요

▶ 탈북여성 보호 필요

- 매년 수천명 북한여성, 브로커 통해 중국 일자리 찾아 탈북
- 브로커는 중국인 포주에 돈받고 넘김. 50%는 성매매 업소에 팔림. 30%중국남성과 강제결혼, 15% 사이버 성매매
- 중국내 탈북여성 성매매 시장 규모 연간 1억 500만달러(약1,250억원)

▶ 한류전파 해외 방송 확대 필요

-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주관하는 Arirang TV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103개국 방송 중
- 수교국 중 미방송 국가 89개국, 공관주재국 중 미방송 국가 29개국
- 한류 매니아 층은 유튜브, OTT를 통해 한류 접근. 매니아층이 아닌 대다수의 외국인을 위한 Arirang TV 등 한류 방송 확대 필요

▶ KOICA 봉사활동 등 증명서 관리 필요

- KOICA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 이외에 NGO 등에 KOICA가 예산 지원한 사업의 경우에도 코이카해외사무소 권한으로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
- KOICA는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무분별한 증명서 발급 관행 개선 필요

정진석 의원

정부, '공정과 정의'의 이면엔 '편법과 위선'으로 가득해

☑ 주요 내용

- ▶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여부 지적**

 -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메콩강 지역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한다고 밝혀
 - 한편 중국 역시 일대일로에도 메콩강 지역과 관련한 개발사업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강대국의 전략적 접점지역인 메콩강 사업에 대한 공개적 참여결정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
- ▶ **미 국무부 제공하는 여행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돼**

 - 외교부에는 독도와 동해 표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영토해양과'가 있지만, 본 의원실에서 독도의 국적표기가 'Japan'으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때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본 의원실이 해당 사실을 알려준 후 불과 24시간 이내에 긴급히 미 국무부의 협조로 수정해 지금은 국가 표기가 없이 지도만 나와있음
- ▶ **2018 평양정상회담 시 반출된 물자 절반은 안돌아왔다**

 - 평양정상회담 준비물품 8대 반출, 반입은 4대 분량만 돌아와
 - 통일부는 포괄승인 제도 이용한 반출로 물품 내역 확인조차 불가 답변
 - 한편 관세청 확인 결과, 별도의 '반출 리스트 존재' 확인했으나, 통일부는 제출불가 및 확인불가 입장 고수하고 있어, 반출 물품에 대한 의혹 확대
- ▶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 UN 제재대상인 '만수대창작사'의 그림 무단 반입하다 검찰에 송치돼**

 - 이승환 사무처장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당시, 만수대창작사에서 그림 2점 구입 후, 자신의 캐리어에 넣어 반입하려다 적발당해 압수됨
 - 통일부 장관의 승인 및 세관 신고도 없이, UN 제재 대상지의 물품 구매와 반입은 명백한 법률 위반임
- ▶ **그 외, 북한인권실태조사 결과의 미발표 및 탈북민 지원대책 수립 촉구**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국방위원회



백승주 의원

군사 대비 태세와 국민 신뢰 부재, 총체적 난국에 빠진 文정부 안보 현황!

☑ 주요 내용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최악 수준!

-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하지 않는다’ 응답 50% 이상, 최근 10년간 최악
- 북한 비핵화 의지 불신 응답 58.7%, 과반수 이상 국민 북한 비핵화 의지 불신
- ‘국방예산 집행 효율성’과 ‘전력 증강 사업 공정성’에 대해 국민 과반 이상 불신

▶ 군사 대비 태세 및 군 기강 해이, 총체적 난국!

- 23사단 철책 훼손 사건 처리 꼬리자르기, 신상필벌 해야
- 군 내부망 해킹에 무방비, 비밀 문서 관리 시스템 전무
- ‘일과 후 병사 휴대폰 사용’ 졸속 추진으로 도박범죄 및 보안사고 급증

▶ 국익 도움 전혀 없는 남북군사합의서 조속 폐기 촉구!

- 남북군사합의로 인한 대북통보로 DMZ 구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지체
- 공중 전술 대응조치 3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KADIZ 무력화

▶ 북한,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 함박도는 헌법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 영토, 현재 설치된 北 레이더는 군사용
- 평양 축구경기 후 “다치지 않은 것으로 다행”이라는 손흥민, 북한 실상 알리는 교보재로 활용해야

▶ 청와대의 도 넘은 국방 업무 관여!

- 4월 한미정상회담 전후 F-X 2차 사업 개입 정황
- 해병대 사령관 “함박도 초토화” 발언 이후 청와대 질책성 전화 의혹

박맹우 의원

한반도 안보위협 외면, 北 대변자로 전락한 軍의 태도변화 촉구

☑ 주요 내용

▶ 北 대변하기 위해 전 세계 상대로 거짓 발표한 文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9월 유엔 연설에 따르면,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발언. 국방부도 같은 내용으로 브리핑
- 그러나 국방부가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북측의 개머리진지 해안포 포문 미폐쇄 등 9.19 군사합의 위반 사항에 대해 10여회 이상 북측의 합의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고 명시함
- 北의 9.19 군사합의 위반여부까지 왜곡하며 전 세계 상대로 거짓 발표한 대통령과 국방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

▶ 군부대까지 확대되고 있는 문 정부 발 태양광 광풍

- 2018년 7월 국방부·산업부·한전·에너지공단, ‘군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 체결,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457MW)를 설치할 계획
- 현재 군은 부대 내 109억 1,911만원의 비용을 투입, 143개 4.5MW의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운영 중이나, 10여년 간 절감된 전기료는 15억 490만원에 불과
- 국방부는 태양광 발전이 예산 낭비임을 직접 확인하고도, 청와대 코드 맞추기 위해 수천억원을 추가로 태양광에 쏟으려 계획. 이에 대해 재검토 촉구

▶ 북한의 군사기지 들어선 함박도 문제, 왜곡·축소하는 국방부

- 북한의 함박도 침범을 ‘무장침략행위’로 규정. 국방부의 해명은 북한 주장 동조하는 명백한 이적행위임
- 당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함박도 어부납북사건을 명백한 ‘무장침략행위’로 규정하였음. 함박도 대한민국 땅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
- 국방부는 함박도 레이더는 민간 항해용이라고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이미 군사용이라고 밝힌 아리도의 레이더와 함박도 레이더가 일치한다는 사실 확인. 함박도 군사위협에 대한 왜곡 및 축소 의도에 대해 문제 제기

이종명 의원

국방부는 있어도, 군인은 없다!

주요 내용

▶ 文 정부 눈치 보느라 졸속 체결된 '9.19 군사분야합의', 당장 파기해야!

- 잘못된 '철수 GP' 선정. 무력충돌 가능성 높은 北 GP는 내버려둔 채, 엉뚱한 北 GP 철수로 우리 軍의 DMZ 내 작전주도권 완전히 상실. 현장 지휘관들도 모르게 졸속으로 GP 철수 추진한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 책임!
- 졸속 추진된 군사합의로 군 대비태세의 기본이 되는 사격훈련마저 제한받는 우리 軍. 마차진 대공사격장, 군사합의로 표적기 못 띄워 계획 대비 40% 수준밖에 훈련 못해! 합의 체결 후 제한사항 인지했으나, 아직까지 대체훈련장 확보 못해 수도권 영공방어를 책임지는 수방사는 단 한 차례 대공사격훈련도 못하고 있는 실정
-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최전방 UAV 감시정찰능력 급감. 군단별 UAV의 대북 표적 식별능력 감소된 것으로 확인. 대북감시정찰 목적으로 수백억 예산을 들여 전력화된 '대대급 UAV', '사단급 UAV'는 교육 훈련용으로만 활용되는 실정

▶ 약해지는 장병들의 정신전력과 전투체력!

- 북한을 '敵'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軍. '敵' 개념 삭제하고, '북한은 현실적인 우리의 위협'이라고 명시한 정신전력기본교재. 장병 정신교육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임을 분명하게 전달·이해시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필요
- 53년 前 '군인정신'과, 20년 前 '정신전력'으로 가르치는 군 정신교육!
군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개념 재정립 및 발전을 위한 연구 및 노력 필수
- 文 정부의 무리한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장병의 체력 약화 우려. '전반기 신병교육기간 단축운용 성과분석 결과'에서 전투체력 저하 문제점 식별

▶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전역 후에는 예우 받지 못한다!

- 최근 5년간, 군에서 순직 및 전·공상 판정을 받고, 보훈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 중 인정된 비율은 13.8%에 불과!

이주영 의원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관련 경계태세 실패와 군 기강해이 지적
신병훈련기간 축소로 정신교육 약화 및 정예병 육성 어려워져
북한의 급격한 무기 기술진보 배경에 해킹으로 얻은 기술 도용 지적**

☑ 주요 내용

- ▶ **6월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관련, 경계태세 실패와 군 기강해이 지적**

 - 북한 동력 선박의 삼척항 방파제 입항 관련 경계태세 실패와 군의 전반적인 기강해이 지적
 - 군의 대책회의 이후 일관되지 못한 사실관계 확인과 축소·은폐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히 훼손되었음을 비판
 - 경계 작전 실패와 미흡한 초기 대응에 대한 軍의 공식 사과와 향후 보완 대책 철저히 할 것을 다짐 받음

- ▶ **신병훈련기간 축소로 정신교육 약화 및 정예병 육성 어려워져**

 - 국방부의 전 軍에 신병훈련기간을 1주씩 단축시키는 지침에 대해 육군을 제외하고 해군, 공군, 해병대가 사전 검토 없이 훈련을 줄인 것으로 확인
 - 특히 안보관, 국가관, 군사보안 등 정신전력에 관련된 교육들을 국방부 지침으로 일괄 축소, 폐지시켜버렸으며, 이외에도 각 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투수영, 총검술, 사격훈련 및 체력훈련들도 전체적으로 축소됨으로써 정예병 육성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지적
 - 이에 신병훈련기간 축소에 대한 재검토와 이전 교육체계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방장관이 보완을 약속

- ▶ **북한의 급격한 무기 기술진보 배경에 해킹으로 얻은 기술 도용 지적**

 -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이스칸데르미사일은 우리 현무2와 비슷하고, 다른 발사체도 미국의 에이태킴스와 유사하다는 분석 등 북한이 급격하게 무기 개발 기술의 진보를 이룬 배경에 사이버 해킹이 있었다고 지적
 - 국방과학연구소에 지난 한해에만 200건이 넘는 해킹 시도가 있었으며,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은 6천8백여명인데 반해 우리는 9백여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사이버 방호태세에 획기적인 대책 마련 촉구

정종섭 의원

군 기강 해이·전투력 약화 야기한 남북군사합의 문제점 지적

주요 내용

실존하는 北 핵·미사일 위협과 대북 방어능력 허점 지적

- 2019년도 북한 11차례 도발할 동안 해군 이지스함 ‘5번’ 포착 실패 지적
- 그린파인R/D, 이지스함 탐지 탄도탄의 이중항적 발생 문제 지적 및 개선 촉구
- 군 주요시설 중 EMP 방호능력 갖춘 시설 15%(65개소 중 10개소) 불과 지적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로 인한 군사대비태세 약화 지적

- 해병대, 군사합의 이후 백령도·연평도 배치된 천무(다연장로켓포) 사격훈련 0건 지적
- 군사합의 체결 직전에 GP 확성기 교체사업 자진 중단한 軍 안보해이 지적
- 군사합의 직후 육·해·공 훈련 조정·축소 시행 실태 지적

군 기강 해이 사건·사고 지적 및 대책마련 촉구

- 안보지원사 철책 훼손 사건, 국과수 분석결과 ‘외부 침입 가능성’ 은폐 질타
- 영점사격 표적지에 철판 덧대 탄두 파편상 발생한 육군, 엄정한 지휘책임 촉구
- II·III급 비밀 16건 분실경위도 모르는데 ‘유출은 아니’라고 주장한 軍 질타
- “최근 5년간 해군 탈영 72%가 간부” 지적, 원인 및 해결책 마련 촉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인사명령 관련 절차적 위법성 지적

- 2018. 9. 1. 참모장 임명시 장군 정원조정에 대한 대통령 승인 없이 인사명령
- 사령관, 참모장 임명 관련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상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위반
- 임기제 진급제도 법제화(1995) 이래 매우 이례적인 세차례 임기제 진급 지적

전투식량 품질 실태 지적·제도 개선 촉구

- 보급된 지 1년도 채 안된 신형 전투식량에서 벌레, 고무줄 등 이물 16건 발견 지적
- 복잡한 행정처리로 이물 등에 적시 대처 지연 → 제도 개선 촉구
- 전투식량 생산업체에 대한 기품원·방사청 직접 방문검사 등 적극행정 주문

民·軍 갈등 대책 없는 국방개혁 2.0

☑ 주요 내용

▶ 부대해체·재배치, 軍 소음, 지뢰 피해로 접경지역 민생 파탄 직전

- 軍 부대해체·재배치, 「접경지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같은 위협으로 접경지역 경제 황폐화 유발 중이나 軍 당국의 대책은 전무
- 육군 항공부대 재배치 및 수리온 헬기 증파 등으로 소음 관련 民·軍갈등 지속 중이나, 갈등관리 전담인력 부족으로 각 軍 본부 참모실 및 일선부대 업무 가중
- 접경지역 지뢰 위험은 상존하고 있으나 합참 등 軍 당국은 제거 비용을 해당 지자체에 전가하는 등 대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부족

▶ 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한 방위력 개선사업상 문제점

- 해군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추진 과정 중 美 록히드마틴社가 급거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美 트럼프 행정부의 對韓 무기구매 압박 거세짐에 따라 획득사업의 해외 경쟁입찰 공정성 훼손 우려
- 해군 함정건조 사업 추진으로 2030년대 간부 부족 소요, 3000여명에 이르는 문제점 해결 위해 국방개혁법 개정을 통한 증원 시급
- 군단급 무인기 UAV-II ROC 미달로 전력화 시기 지연 및 사업장기화 불가피
- 국지방공레이더 도입 지연으로 TOD 과부하에 따른 수리비용 급증
- 전방 지역 위주의 국방개혁 2.0상 육군 전력보강으로 제2작전사는 전방지역 노후장비 재활용 센터로 전략
- 「군용기인증법」 개정으로 향후 유·무인 항공기 전력 획득 당시의 기술감항 外 상시 유지감항 체계 정립을 위한 인적·물적·지식적 기반 확충 시급

▶ 병역자원 급감期, 설익은 兵士정책 남발로 혼란 가중

- 신병교육대 훈련병 공중전화 사용권 보장 미흡
- 병사 휴대전화 허용 이후 통신보안 위규 급증
- 나트륨(Na) 덩어리 전투식량으로 軍 장병 건강 적신호 위험
- 육군훈련소 Army Tiger 훈련, 도태 구형장비 운용으로 훈련효과 반감 및 유류탱크 인근 숙영지 설치 등 안전문제 노출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익 의원

문재인 정부의 '행정의 정치화', '조국펀드 논란' 문제 살살이 밝혀

주요 내용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대통령 총성 경쟁에서 비롯된 촌극

-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한 덕성여대 이소연 교수를 국가기록원장에 앉히기 위해 국가기록원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바꿈 (이전에는 일관되게 공무원들이 임용되던 직위)
- 이소연 원장 채용 2달 만에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준비한 정황 드러나
- 이소연 원장 등 국가기록원 직원이 청와대에 3차례 보고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별기록관 관련 예산을 의결하였음
- 개별기록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별기록관 TF 운영을 위해 사무용품 등을 명목으로 145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나, 대통령의 건립 백지화 지시로 인해 145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음

조국 전 민정수석실 근무 '버닝썬 윤 총경' 수사 부실 의혹

-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이력 있는 윤 모 총경이 버닝썬 강남클럽 유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윤 모 총경에 대한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남
- 경찰은 검찰에 윤 총경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식사 6회, 골프 4회, 콘서트 티켓 3회 등을 제공받은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하지 않음
- 윤 총경이 버닝썬 연루 경찰로 드러났음에도 직위해제를 하지 않고 서울청으로 발령을 내, 윤 총경을 비호하려한 정황을 밝힘

소방공무원 국가직 시대, 시도별 편차 극복 방안 마련 시급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2009년 한나라당 시절부터 우리 당이 이끌어 왔음을 밝힘
- 소방공무원의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처우개선, 시도별 편차 극복 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
- 소방예산, 정책예산, 소방관 1명 당 담당 인구, 소방서 부족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시도별 소방력 차이를 대비시킴

김성태 의원

‘반쪽 정부’, ‘불통 대통령’이 ‘국론분열’에 ‘국민갈등’ 조장

☑ 주요 내용

▶ 행안부

-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의장국 대통령이자, 후보시절 “국민들의 퇴진요구시 광화문 나가 끝장토론으로 설득하겠다”던 文대통령이 현재 광화문 국민은 무시하고 서초동 국민만 챙기는 ‘반쪽’, ‘불통’ 대통령 지적
- 조국펀드 투자사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 입찰 과정에서의 특혜, 비리에 대한 BH 조국 민정수석실의 관련 동향 체크 의혹 제기

▶ 서울시

- 마곡 땅 팔아서 10조원 넘는 개발재원을 확보했음에도, 마곡개발 이익금만 빼가고 수차례 개발계획 축소 조정하며 난개발 야기
 - 박원순 시장 치적으로 급조된 서울식물원은 들쥐·날파리 천국, 호수공원(연못)은 썩어 악취민원 쇄도, 강서주민 무료입장 약속도 안지켜
- 박원순 시장 측근 인사들의 마곡개발 전횡, 최측근 부시장이 사실상 공천 준 서울시의원의 마곡입찰정보 빼내 용지분양 낙찰 의혹 제기
- 서울시, 2019년 상반기 라디오 광고비 전액인 8,269만원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행하는 등 좌편향 특정프로그램에 몰아주기
- (북한퍼주기) 남북협력기금 지출 11년 140만원 → 19.9월 41.7억원 (문화누리카드) 저소득층 문화격차 해소 목적이 호텔·모텔 숙박에 사용

▶ 경찰청

- 김한정의원의 ‘광화문집회 내란선동 혐의’ 고발장 받은 경찰청장 질타
- 버닝썬 최초신고자 김상교씨 참고인 신문 통해 여당의원·진보단체 측이 “버닝썬사건을 제2의 국정농단으로 키우자는 회유있었다”는 증언 확보
- 치안담당 하는 경찰이 매점에서 껌 팔고, 경찰 아닌 무기계약직이 범죄수사카드 자료관리, 신원불상 변사자 신원확인 등 하고 있음을 지적
- 매년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건수 증가(‘15년 65건 → ‘18년 88건)
 -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측정거부도주, 음주사고도주 등 천태만상

▶ 소방청

- 제천화재 참사 소방공무원의 소청심의 통한 징계 경감 문제 및 충북도의 무전기 확보 예산 지연에 따른 참사 당시 무전교신 먹통 문제 지적

▶ 인사혁신처

- 해외장기연수 공무원 중 학위과정 39%에 불과해 나머진 사실상 휴가

김영우 의원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과 부실함을 지적한 국정감사

주요 내용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 운동 관련 행안부 감사 요구

-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경기도 공무원 구명활동이 벌어지고 있음. 헌법 제7조 2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지방공무원법 58조 (집단행위의 금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한 행안부 감사 지시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일선 현장 경찰 설문조사 실시

- 2021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응답자는 8,625명)
- 자치경찰제도 도입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6.8%(7,488명)가 '반대한다'고 하였음. 자치경찰제도 추진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

- 내년 총선 허위사실공표 및 가짜뉴스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정정이 있기 전까지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노출된다는 문제점
- 선거기간에 증가하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방안이 필요

속 빈 강정 정보공개 급증

- 결재본문만 공개하는 부분공개문서와 첨부파일까지 모두 공개하는 전체공개문서 모두 공개문서로 집계함. 통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꼼수 집계 문제 지적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제, 공무원 노후보장제 전략

- 개방형직위를 통해 임용된 고위공무원단 전체 721명인데, 이 중 공무원 출신이 434명으로 약 60%를 차지하며 사실상 공무원 노후보장제로 전략함

박완수 의원

문정부 대통령 개인 기록관 등 3개 주제

☑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 문정부 개인 대통령기록관 설립사업 추진 적발 및 중단

- 정부가 문재인대통령 기록관을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1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립 추진 중임을 의원실에서 최초로 확인하여 조선일보 1면 보도.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약 32억 원이 편성됨을 지적
-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인지 못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을 통해 밝혔으나, 이 사업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점 등을 확인하여 추가로 문제 지적
- 또한 현재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수록률은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근에 증축 가능한 부지도 확보되어있는 상황임. 따라서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함

▶ (중앙선관위) 연동형 비례제 개정안의 위헌성 지적

- 여당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성을 높인다고 하나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선출 근거가 없음. 따라서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직접선거원칙에 위배
- 개정안은 독일식 연동형비례제를 채택했지만 의석수보정에 대한 조항이 없음. 따라서 헌법상 평등선거원칙에 위배
- 의원실은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연동형비례제가 선진국형 제도를 급조한 결과, 우리 헌법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 측도 의원실의 문제 지적에 대해 인정하였음

▶ (경찰청) 문정부 민간인사찰 및 정치정보 수집 문제 지적

- 문정부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청은 국회 및 정당 등의 상시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정치정보 수집과 민간인사찰 등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의원실이 확보한 정보문건에 따르면 경찰, 청와대의 민간기업 사찰 정황이 명백했고, 정보경찰의 국회 출입 빈도가 1년간 약140여회에 달한 것으로 확인. 일부 국회출장 기록도 의도적으로 누락한 정황 확인
- 이와 관련하여 경찰지도부의 이중적 행태와 정치정보 수집 등의 문제를 경고하고 경찰 지도부의 부당한 지시 등의 중단 촉구

안상수 의원

민생과 동떨어진 문재인 부실 정책

☑ 주요 내용

▶ 소득주도성장의 현금 퍼주기 예산이 가져온 피해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카페, 식당 등 초단기 알바 일자리 양산으로 일자리 통계 왜곡 지적
- 서울시가 추진하는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발전소는 낮시간만 가동 되는 시민 기만사업으로 측근 배불리기용 사업 지적
- 경기도는 여당의원만으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개정 조례를 통과시켜 도민의 혈세로 도의원 및 배우자 부모까지 장례비 300만원 지원 문제점 밝힘

▶ 참여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 법집행 철학의 문제점

- 진보대학생들이 사다리를 이용해 美 대사관 난입하여 시위하는 것을 관망했던 점 지적
- 늘어나는 악플에 대한 처벌 및 대응방안 미흡 지적
- 윤지오 신변보호라는 이유로 40일 동안 개인적인 보호 및 호텔숙박비 900만원 경찰이 지출한 점에 대해 지적

▶ 경직된 남북관계와 반대되는 도로교통공단 대북지원 사업문제점

- '통일대비 북한지역 교통방송국 구축 방안 추진' 사업을 비롯한 총 5건의 대북관련 사업 및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12명의 TF팀을 운영 지적

▶ 소방피복 구매 절차 공정성과 투명성 떨어져

- 매년 소방피복 수의계약 증가와 시도별 특정업체 독점계약문제 지적

▶ 실시간 검색어 조작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요구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같은 선거기간 여론조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포털의 실시간 조작 검색어 방지, 매크로를 이용한 검색어 조작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주문

법치 훼손과 경찰 공권력 약화 강력 규탄

☑ 주요 내용

▶ 법 위에 군림하는 민주노총, 현 정부 공권력은 실종

- 현 정부 출범 후 민주노총의 관공서 불법 점거 건수가 전 정부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증가했으며, 불법폭력 시위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 심지어 민주노총위원장은 지난 4월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을 내고 풀려난 석방 당일부터 집회에 참석하는 등 최근까지 12번이나 집회를 주도함 (이중 2번은 불법 집회로 확인)
- 이처럼 민주노총의 법치 유린 행위는 더욱더 대담해지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수수방관하며, 소극 대응하고 있어 공권력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이 공권력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민주노총 불법 시위에 대하여 보다 엄중하고 엄격한 잣대로 대응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

▶ 민노총 관련 경찰 공권력 행사의 이중잣대 지적

- 현 정부 출범 이후 자행된 민노총 불법폭력시위 9건 가운데 현행법 체포가 단 1명도 없었던 시위가 절반이 넘는 5건에 달하며, 민주노총 조합원을 현행법으로 체포한 4건도 대다수를 당일 석방함
- 반면 2019. 10. 3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시위로 체포된 46명에 대해서는 건강을 이유로 당일 석방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5명 모두 이틀을 꽉 채운 4일 자정 가까운 시간(약 30시간)까지 조사하고 석방
- 경찰이 공권력 집행에 있어 유사한 사건에 대해 계속해서 다른 잣대로 대응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음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미 대사관저 난입 관련 경찰 대응 미흡

- 미 대사관저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19명이 집회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을 경찰이 그대로 보고만 있었음
- 또한 경찰은 대진연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의 압수수색 방해와 욕설, 폭언 등 조직적인 공무집행방해에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관련자들과 협의를 하는 등 상식에 벗어난 촌극을 벌임
-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격을 사실상 땅에 떨어뜨린 참담한 사건을 방조한 경찰 및 행안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 엄중 비판

이진복 의원

영터리 정책, 실패한 정책에 예산 남용하는 문재인 정부

주요 내용

- (대통령 직속 산하위원회의 영터리 연구용역)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 위원회는 '18.9월 출범 후 연구용역 13건을 모두 '18.10~12월에 각 건당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처리. 연구용역 보고서 중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방안'의 경우 박근혜 정부시절 연구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베껴서 문재인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로 제출
- 이외에도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을 연말에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업무추진비도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집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촉구함
- (경찰청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출장비 남용) 경찰청 본청의 경우 출장내역이 2017년 5,234건, 2016년엔 5,162건, 2018년 6,820건으로 출장 등록 시 보통 2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등록을 하고 가기 때문에 실 출장인원이 매년 만 명이 넘어감 (경찰청 본청 직원 1,200명)
- 경찰청 근무자가 경찰청으로 업무보고나 문서 수발하러 가는데 출장, 자전거타고 순찰했다고 출장, 은행업무 보러 가는 것도 출장 등 과도한 출장비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함
- (실패한 정책, 제로페이) 제로페이는 지난해 출시 이후 사용건수는 186만건으로 신용카드 대비 0.018%, 사용금액은 384억원으로 0.007%에 불과. 신용카드 대신에 제로페이를 썼을 때, 가맹점당 수수료 혜택으로 고작 211원 이득을 봄. 이렇게 저조한 제로페이에 본예산 98억원, 추경 76억원, 총 174억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데, 전형적인 예산낭비
- 더군다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보조금으로 협박하거나 가맹점 모집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이상의 예산 남용 방지를 위해 제로페이 폐지를 촉구함

홍문표 의원

역행하는 문재인정부의 지방재정 실태 고발. 정치경찰 문제, 무능한 공권력 질타

📌 주요 내용

▶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지방홀대에 대한 개선 방안 촉구

-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로 고착화, 6대4로 전환필요
- 퍼주기 복지공약으로 지자체 40조7천억 책임져야 돼 재정 악화 심각

▶ 문재인 정부, 생색내기·선심성 정책 아닌 현실에 맞는 정책 실현 요구

- 재정 열악한 지자체에 일방적 이·통장 수당 인상 떠넘겨
- 소방공무원 인력, 장비, 조직, 예산 문제 산적에도 대책 없이 보여주기식 국가직 전환 추진

▶ “정치경찰” 집중 질타, 경찰 개혁 요구

- 버닝썬 사건 핵심인사 윤규근 총경 봐주기 부실수사
- 민주노총 폭력에도 아무런 조치 안해 좌편향성 대처로 국민 안전 책임 맡길 수 없는 현실
- 정권유착, 정치경찰의 대표적 인사인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공직자의 좌편향 정치적 행위 지적

▶ 중앙선관위, 표만 세는 기계적 조직 아닌 공명선거 실현 촉구

- 관권선거 논란 일으킨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 지자체 정책협약에도 어떠한 조치 없어
- 집권당 대표와 18개 모든 부처 장관 릴레이 오찬 공무원 중립 훼손 우려
- 국민도 이해 못한 날치기로 통과된 선거제도 바로잡기 위해 중앙선관위 목소리 내야

▶ 인사혁신처, 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공무원 증원 정책 개선 촉구

-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총당부채 939조 9천억(재정 안정된 공직사회 마련 시급)
- 청년 실업률 공무원으로 해결하려해(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 공직사회 위법행위 근절하는 특단 대책 촉구

-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3,356명(대부분 징계 감경되는 실정)
- 조국 장관 공직자윤리법 혐의 의혹에도 수사 의뢰 전혀 안해
- 문재인 정부 국민의 공정사회 요구 기대 못이뤄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

문재인정부 인사의 정치 편향성 및 실정 지적

☑ 주요 내용

▶ 뉴스통신진흥회 강기석 이사장의 정치적 편향성 지적

- 뉴스통신진흥회 강기석 이사장의 도를 넘어선 SNS 활동과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발언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
- 현 정부와 여당이 비판했던 고영주 前이사장의 발언에 비해, 강 이사장의 정치편향성과 평가르기 행위가 더욱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이 언론기관인 연합뉴스를 관장하는 자리임을 감안하여 심각한 자질 문제가 있으며, 해임 건의가 필요함을 지적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역사편향성 및 역사왜곡 문제 지적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자 및 직원 대상 교육자료의 역사왜곡, 편향성 등 문제점 지적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 약속 받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 개편과 관련하여 개편방향 논의 과정 주요 참여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 지적
- 상설전시실 개편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경정선수 인권침해 문제 제기

- 경륜·경정 선수의 59.02%가 최근 3년 내에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인권침해 가해자의 1위로 공단직원들이 지목되었음에 대해 문제 제기
- 지난 5월 30대 경륜선수가 주행훈련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음에도, 제대로 된 위로금이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일부 유명선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퇴직금도 없이 일체의 부대비용을 자부담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보상, 선수인권개선 및 합당한 수준의 처우개선을 요구함

김재원 의원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근거도 없는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한 문재인 정부

☑ 주요 내용

▶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 원점 재검토 필요

- 13차 무형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절차적 내용적 문제 많아
- 규정도, 효력도 없는 위임 강행, 운영 지침에도 없는 방식으로 대상자 선정
- 심의의결 참석 위원들조차 전문성 없음을 토로하는 이해 못할 일까지 벌어져

▶ 민간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회, 공모 절차도 없이 정부 지원금 특혜 수령

- 학교체육진흥회, 공모나 입찰 절차 없이 9개월간 민간경상비 9억원 수령
-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도 특별교부금 2천만원씩 총3억4천만원 지원받아
- 정부 국정과제 일환이란 이유로 관련 근거도 없는 민간단체가 정부 정책 개입

▶ 국민체육진흥공단, '소마미술관' 입장객 수 80% 조작

- 미술관 일용직 스텝에 입장객수 '조작강요', 부풀린 성과로 꽃보직 영전
- 길 물으러 온 시민들까지 입장객으로 둔갑시킨 내부고발자 증언 공개
- 스포츠문화유산인 세계적 조각 작품 220여 점에 보안 CCTV조차 없어

▶ 1,000억 이상 쏟아부은 문화기술R&D사업, 성공과제 한 건도 없어

- 김재원 의원, 콘진원 '문화기술R&D지원사업 추적평가 결과' 3년치 공개
- 최근 3년간 추적평가 결과 총 93개 중 52개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
- 2015년 이후 활용성과 R&D사업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염동열 의원

허투루 쓰이는 국민세금, 촘촘한 설계를 비롯해 개선방안 마련해야

주요 내용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영성한 설계

- 수도권에 편중된 휴가지원 사업(전체기업의 57%, 전체인원의 65% 비중)
- 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근로자들도 휴가비 지원
-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여행상품, 중고사이트에서 재판매 가능

▶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싹짓돈 지급하는 포폴리즘 정책

- 당초 선정 계획 1500명 중 9월까지 1107명 선정(8월 968명, 9월 139명)
- 미비한 사업준비로 장학금 예산 불용처리 예상
- 소급적용 된 장학금 목돈으로 지급, 청소년에게 모럴해저드 부추겨

▶ 거대 기획사 소속 가수도 지원받는 대중음악 지원사업

- 해외진출 온라인 홍보지원 선정 12팀 중 대형기획사 등에서 활동한 인기가수는 3팀
- 인기가수들 콘서트 및 팬미팅 위해 국비지원 받고 수익은 자기주머니로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아이돌 그룹에게 지원된 국비 환수조치 방안 필요

▶ 저소득층 소외 청소년들 인권침해 조장하는 북토콘 지원사업

- 북토콘으로 교환가능한 도서목록 207종 불과, 대형서점에서는 사용불가
- 독후감대회에서 북토콘 수령여부 확인하는 것 인권침해 소지있음(인권위 자문)
- 수혜학생과 일반학생 구분해 채점해 수상비율 조정 의혹

▶ 국가보안법 위반물도 전시하는 정신나간 국립현대미술관

-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 받았던 ‘민족해방사’ 포함된 영상 전시
- 현대미술관 법률자문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시 강행

조경태 의원

**‘적산가옥은 문화재가 아닌 역사 보존물로 관리해야’,
‘인민복 빼닮은 문화재청 새 근무복’, ‘중국의 여전한 한국게임 차별’**

 주요 내용

▶ **적산가옥에 대한 명칭 문제, ‘역사 보존물’로 변경하고 유형 따로 관리해야!**

- 총 818건의 등록문화재 중 적산가옥이 문화재로 등록된 건수가 총 37건
- 일제 강점기 때 적이 남기고 간 재산을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보호하는 것은 ‘문화재’란 용어의 의미하고 전혀 맞지 않아
- 외국의 경우 부의유산(Negative Heritage), 상처유산, 불편유산, 일치(日治)시대 유산으로 칭하고 있음
- 적산가옥을 ‘문화재’가 아닌 ‘역사 보존물’로 따로 지정·관리해야

▶ **북한·중국 인민복과 빼닮은 문화재청 새 근무복!**

- 10월 18일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문화재청 소속 궁능유적본부 직원들이 입게 될 근무복 공개행사를 개최
- 하지만 새 근무복 북한·중국 인민복과 매우 유사해 우리나라 경복궁 등 궁능유적본부 근무복으로는 매우 부적절함
- 우리나라 전통의상에 준하여 디자인을 하거나, 전통을 살린 개량 한복으로 고안해야

▶ **중국 게임시장 여전한 한국 차별! 대책 마련 시급!**

-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단 한건도 발급받지 못함
- 중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이 중국 업체가 국내 유명 게임을 표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중국 게임은 한국 시장에 대거 진입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
- 중국의 판호 중단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조훈현 의원

문(文)정부 산하기관, 추진 사업 전반의 총체적 관리부실 살살이 밝혀내

☑ 주요 내용

▶ 문화재청, 송례문 잃고도 문화재 방재에 구멍 뚫려 허술한 관리대책 지적

- 2008년 송례문 화재사건 이후 62억 원을 들여 경북궁 문화재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 도난 등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만든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경북궁 내 문화유산 활용실(치목장)에 보관된 △국가지정 보물과 △복원 중인 광화문 현판이 허술하게 관리되어 화재·도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
- 문화재청의 안일한 종합경비체계와 부실하기 짝이 없는 구멍 뚫린 방재시스템을 지적하고, 모든 문화재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점검을 주문함

▶ 게임위, 합법으로 둔갑한 스포츠베팅 게임, 불법 환전으로 인한 도박화 심각 문제 질타

- 스포츠베팅 게임들이 게임위의 승인을 받은 합법 게임물임을 강조하며 유명 스포츠 선수들을 모델로 기용한 홍보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나, 불법 환전을 통한 도박화가 심각한 것이 확인됨
- 사행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미니(o,x/홀짝)게임 등을 추가하고 정식으로 수정사항을 신고했으나, 게임위는 심의과정에서 사행성 짙은 게임을 제지 하지 않았고, 자체 조사를 통한 불법 환전을 확인하고도 수개월 동안 고발 등의 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남
- 결과적으로 불법게임물의 유통 활성화를 막지 못한 게임위의 졸속행정을 문책하고, 현행법상 처벌대상인 불법 베팅게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함

▶ 한국콘텐츠진흥원, 뇌물수수 비리·유착 정황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 근절 촉구

- 콘진원은 입찰정보 등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그러나 소속 직원들의 내부정보 유출사례가 다수 적발되었고, 지원 사업 전반의 운영관리 문제가 밝혀짐
- 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고, 비위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

정치편향! 내로남불! 북한바라기!

☑ 주요 내용

▶ ‘깜깜이 남북 축구’ 문제

-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데, 올림픽 단일팀, 공동입장 등을 하면 무엇하나?
- 단순 유감 표명이 아닌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
- 앞으로 있을 북한과의 체육·문화교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

▶ 뉴스통신진흥회 강기석 이사장의 정치 편향성

- 언론의 핵심가치이자 기본인 중립성과 객관성을 망각한 이사장 지적
-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의 자리에서 부적절한 정치 편향적 발언 지적

▶ 개인 의견 피력에 대한 이중적 잣대, 내로남불

- 조국 前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개인 SNS에 올린 글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前 사무처장이 개인 SNS에 올린 글에 대해 서로 다른 처분 지적(조국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 임명, 사무처장은 파면)
- 이중적 잣대와 내로남불, 전형적인 현 정부의 작태 지적

▶ 생존수영 교육 내실화를 위한 시설 확보

-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수영장도 가능하게 하도록 지적
- 시설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수영장 개방 및 생존수영 지도자를 파견 등 정책적 방향 고민 필요 언급

▶ 전남고등학교 축구부 살려야!

- 前 감독의 비위 혐의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 개인 비위로 선수들,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운동부를 반드시 살리도록 지적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

농림·해양분야 현안 점검 및 정부정책 문제점 진단

☑ 주요 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실패

- 정부의 안일한 초동대처로 실제 감염원인 야생멧돼지에 대한 예방조치가 배제되어 돼지열병 확산을 초래하는 계기가 됨
- 차량통제(초기 일시이동중지명령 해제 등), 방역망설정, 역학조사 등 초동방역에 사실상 실패
- 총리 중심의 강력하고 대대적인 예방·방역조치 요구. 돼지고기 가격 및 소비감소 대책, 양돈산업 정부지원, 영세 양돈농가 지원 등 촉구

▶ 최저임금, 주52시간 등 정부정책으로 인한 농업피해 진단

- 농협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실태조사를 통한 농업계 영향 점검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APC 선별인력 인건비 26.3% 증가, 적자 APC 증가, 평균 순수실 13배 이상 급증
- 농업 특성상 성출하기에 근로시간 급증하여 많은 품목이 주 64시간을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도 어려운 실정
- 최저임금과 주52시간 등 정부정책에 농업·농촌의 현장특성 반영한 차등화 등 촉구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해수부 대응책 점검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시 우리측이 입을 피해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검토 자료 미비
- 태풍으로 인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토 유실 관련 현황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
- 일본의 해양방출을 막는 동시에 해양 오염 대응 관련 매뉴얼 등 해양수산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

강석진 의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문재인정부의 실정과 무능, 부도덕 실체를 밝히다

☑ 주요 내용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

- ‘합박도’는 누구 겁니까?(산림청)
 - ‘합박도’가 등기부등본 상 산림청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산림청장 “관리권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답변

▶ 문재인 정부의 실정

- 문재인 정부 농업홀대
 - '20년 국가예산안에서 농업예산 비중은 2.98%로 하락. 최소한 4.5% 이상 증액
 - 쌀 목표가격 22만6천원으로 요구
- 해양수산부 2018년 예비비로 가짜일자리 만든데 이어, 고용통계 조작을 위한 바닷가 쓰레기 줍기 일자리 정책에 대해 질타

▶ 문재인 정부의 무능

-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발병원인조차 파악 못 함
 - 국방부, 환경부, 농식품부 간 혼선, 늦장 대응 지적
- 음주 운항 외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음주 업무 금지 규정 부재. ‘바다 운창호법’ 필요성 주장
 - 음주 운항뿐만 아니라 음주업무까지 금지. 단속 대상 선장에서 기관사, 선박교통관제사 등으로 확대. 음주단속 기준 0.03%에서 0.02%로 강화
- 국내 여객선 보안검색이 없어 ‘고유정 사건’ 발생
 - 국내 여객선 보안검색 규정 신설 필요

▶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

- 수협조합의 해외연수·출장 관리부실
 - 결과보고서 미제출, 블로그 짜깁기, 부실우려 조합 직원포상 해외연수
- 해양환경공단 사내 주택자금 융자금 특혜제공 질타
 - 시중금리보다 매우 낮은 수준(주거래 은행의 연초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중 최소금리)으로 직원대상 주택자금 융자금을 제공하는 문제점을 부각, 서민들의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특혜 행위임으로 개선요구

강석호 의원

청와대 눈치 보는 각 부처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요구

☑ 주요 내용

▶ 북한 눈치 보기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늑장대처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으로부터 내려 왔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멧돼지 외에 개, 고양이, 쥐로부터 전달될 수 있음을 밝힘
-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발생 원인을 파악해야 하지만 그동안 환경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야생멧돼지가 내려올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초기부터 안일한 대처로 초기대응에 실패를 지적

▶ 반일분위기에 휩쓸려 국제등급 승격 철회, 국제적 망신

- 한국마사회가 최근 국내에서 열린 국제경마대회에서 반일 분위기에 편승해 일본 경주마의 참가를 배제함. 국제경마원칙을 어긴 행동으로, 국제경마연맹으로부터 대회 등급 승격 결정을 철회 당한 사실이 드러남
- 한국의 유일한 국제 경주 대회에서 정치적, 외교적 이슈를 이유로 특정 국가의 참가를 배제하는 것은 선진국의 스포츠맨 정신을 저버린 국제적 망신

▶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침식 등급 평가방법 개선

- 연안침식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현재 평가 방법은 조사지역의 평균치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국부적인 침식을 평가등급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비디오모니터링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침식등급 평가방법 개선 요구함

▶ 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위원회 구성 문제

- 한국해양진흥공사 투자보증심의위원회의 사장을 포함한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
- 항만공사는 기관장과 독립된 항만위원회 구성하고 있으나 항만공사·해수부 관계자와 친분관계 위원 선임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포함으로 공정한 심의 의결이 곤란함 지적

김성찬 의원

함박도 엉터리 실태조사 및 퍼주기식 남북협력사업 중단

☑ 주요 내용

▶ 함박도 관련 / 해수부의 엉터리 실태조사 지적

- 해수부, 『2018 무인도서 실태조사』 용역 실시 / 8.5억원
 -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함박도=우리 관할 무인도서”로 표기
 - 해수부, 용역기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진입이 어렵다’는 말만 믿고 별다른 확인없이 비용 지급 (국방부는 해당 용역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이 없다고 답변)
- 해수부가 용역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비용을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했고, 엉터리 실태조사를 방치하였음

▶ 북한이 부르기만 하면 달려 나가는 농협, 퍼주기식 남북협력 중단해야

- 농협, ‘18년에 이어 ‘19년에도 2차례나 외국인중개인(브로커) 통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아태) 만나 대북협력사업 논의
 - ‘19.1.28~ 29/중국 북경/남북 경제협력사업 추진 전반 및 농업분야 협력사업 논의
 - ‘19.2.26~28/중국 심양/북측이 필요로 하는 비닐필름 지원에 관한 세부 요구사항 및 향후 남북관계 시 북측이 필요한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 심지어 ‘19.5 농협은 현대아산과 함께 대북협력사업 추진계획안까지 작성
- 하지만 북미 하노이회담 결렬이후 남북협력사업 무산
- 아프리카돼지열병 공동방역 목살 및 대북제재가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 농협이 브로커 통해 조선아태를 만나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것은 예산낭비이자 퍼주기식 외교에 불과

▶ 북한, 남북산림협력 합의 불이행

- ‘18.10.22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채택에 따라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 약제 50톤 지원했으나 약속된 공동방제 불이행
- 양묘장 현대화사업, 자연생태계 복원, 공동토론회 등도 전혀 안 이뤄져
- 뿐만 아니라 사후검증에 대한 내용도 없고 북한은 사후검증에 부정적

김태흠 의원

문재인정부의 농어업 확대, 낙하산 인사, 대북 저자세 지적

주요 내용

▶ “농어민 삶의 질 개선 약속”이 무색한 농어업 확대

-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부 농업예산 비중이 3.6%로 낮음을 비판했지만 현 정부가 편성한 2020년 농림부 예산은 3.0%에 불과(513조원 중 15조원)
-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2018-2022년 산 쌀 적용 목표가격’은 이전 대비 192원 늘어난 18만8912원에 불과하며 당정협의 결과도 21만4천원 수준으로 낮음. 올해 10월까지도 목표가격을 확정하지 못하는 등 쌀 정책 부재
- 1986년부터 유지해 온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장려금리 인하, 지원대상 축소로 위기를 맞은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폐지를 권고함. 부족한 농어민 복지정책의 축소가 부당함을 지적

▶ 해운산업 재건 위한 예산이 낙하산 인사로 특정 기업에 편중

- 정부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만든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설립 이후 선사들을 대상으로 1조5천억원을 지원했는데 대통령과 총리의 동생들이 소속된 기업에 지원액이 편중됨(SM그룹 계열사 1,360억원, 중소선사 몫 중 21%)
-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낙하산 인사(문재인대통령 친구)로 선사지원을 결정하는 기구(투자·보증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특혜지원을 주도
(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정성 목적으로 기관장 참여를 배제한 것과 상이)

▶ 아프리카돼지열병, 쌀 지원 등 대북관계에서 정부의 저자세 지적

- 남북 접경지역(경기, 인천)에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경로가 북한임이 유력한데도 원인규명과 방역에서 미온적인 정부정책을 지적
- 올해 6월, 정부가 5만톤의 대북 쌀 지원을 발표했지만 북한에는 거절당했고, 혈세만 낭비(쌀 포대 제작 8억원)함

▶ 산지태양광, 가짜일자리 등 현 정부 정책의 고질적 병폐 지속

- 정부대책 이후 태양광 목적으로 전용된 산지 1,037ha(축구장 1500개 면적)
- 한국마사회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5천명 중 2천명 이상이 퇴사
(주 1,2회 일하는 알바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만든 가짜일자리)

최악의 농업홀대, 무능한 정권이 무책임하기까지...

☑ 주요 내용

- ▶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경영체질 개선 시급**

 - 지난해 경영손익 1억 미만, 법인 비율 40%
 - 101개 법인 중 28개 법인은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
- ▶ **최근 4년간 농협 계좌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1,770억원**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매해 증가 추세
 - 올해 8월 기준 이미 지난해 피해 총액 넘어서
 - 사실상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처방안 실효성 떨어져
- ▶ **4개 항만공사 포트세일(port sale), 실적 없이 예산만 펴냄**

 - 4년간 해외마케팅 비용 총 42억, 계약 체결 건수 0건
 - 부산항만공사 부채 이자 668억, 하루 1억 8천만원 꼴
- ▶ **국내 산림면적은 감소하는데, 사유림 매수는 지지부진**

 - 2016년 이후 여의도 면적 100배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져
 - 산림청, 예산 확보도 없이 사유림 매수 계획만 대폭 확대
- ▶ **우범지대로 전락한 전국 30개 화상경마장**

 - 최근 4년간(2016~2019.09) 총 625건의 장내 폭행 및 소란사건 발생
 - 동일기간, 경찰 이첩 및 퇴장조치도 매년 증가세
- ▶ **인터넷 등 불법사이트에 의한 불법사설경마 매년 증가**

 - 최근 4년간(2016~2019.09) 총 11,213건 적발
 - 객장 내·외의 단속 인원은 줄어드는데, 사법처리 인원은 증가세
- ▶ **마사회의 경주 퇴역마 관리 체계 미흡**

 - 전체 퇴역마 중 35.4%가 식용이나 질병으로 도축
 - 마사회 말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 9월 구성 이후 활동 전무
- ▶ **국가위해 사역한 특수목적견, 토사구팽 농식품부**

 - 공항·항만 등, 불법 농축산물 40%는 검역탐지견들이 찾는다
 - 타 부처에 비해 공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 형편없어

이양수 의원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문재인정부, 무능인가 무관심인가

주요 내용

부처, 공공기관 및 산하, 유관기관 홈페이지 독도, 동해 표기 오류 지적

- 전부처 산하 유관기관 434곳 중 오류 지도 사용 15곳, 농해수위 산하 3곳
- 산림청은 '17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오류 수정 요청했지만, 공문만 보내놓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함
- 해수부 또한 '16년부터 홈페이지 동해/독도 표기 오류 수정을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일체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사안일주의 지적

농식품부 돼지열병 방역 무능함 지적

- 멧돼지는 속도가 빨라 전국의 산악지대가 연결 되어있어 ASF가 퍼지면 삼시간에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 농후
- 시급하게 이동중지명령 해제한 농식품부 질타
- 총리 중심의 범정부 기구 설치 필요, 생계안정자금 대책 철저

중금속, 항생제 검출된 수산물 폐기는 단 10%뿐

- '18년 이후 수산물 안전성 검사 부적합 판정 받은 수산물을 전량 폐기처분해야함에도 이 중 80%는 출하연기 되고, 10%는 용도전환 되고 있음
- '17년도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을 지적
-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해수부 질타

해양진흥공사 꿈수 조항으로 경평 통해 18년도 4억의 경평성과급 지급

- 전례 없는 보수규칙 꿈수 조항으로 성과급 지급하도록 만들
-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대통령 최측근이 사장으로 있는 공사에만 특혜 제공한 것을 지적
- 또한 설립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사옥 이전 등 방만하게 경영한 것 지적

산림청 산불진화 및 감시 장비 무용지물

- 야간에 산불 진화 헬기 규정 상 이륙 불가능하지만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 통과된 점을 지적
- 이에 대통령과 총리는 야간과 강풍에 뜰 수 있는 헬기를 도입한다고 말하며 국민을 우롱한 처사임과 동시에 무책임함을 지적함
- 강원산불 발생 당시 산불감시카메라 35대 중 12대 노후화 등 비정상
- 하지만 동해안 지역에 카메라는 한 대도 교체하지 않음

농어촌공사 통합통신망 사업자선정 입찰비리 의혹

- 업체가 규정에 어긋난 조건과 방법으로 해당 사업의 사업자에 선정되었음에도 이를 알고도 묵인한 농어촌공사 문책
-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구 의원

현장 목소리로부터 정부 실정을 입증! 정책 국감의 선봉장!

☑ 주요 내용

▶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전환을 촉구

- 한전 적자, 전기료 인상 우려 등 탈원전 폐해를 지적하고, 친정부 태양광 관계자 및 조국 펀드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
- 두산중공업 현장시찰 및 협력업체 간담회를 마련하여 탈원전 피해기업들의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
- 부지 선정, 발주까지 마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하는 것은 정부의 갑질임을 지적

▶ 주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밝히고 친노조 노동정책 폐기를 촉구

-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원전 완공에 차질이 있었음을 집중 조명
-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 완공 예정 시점이 늦춰지는 것에 52시간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질의하여 “퇴근시간이 빨라져 1년에서 1년 4개월 정도 지연되었다”는 답변을 이끌어냄

▶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누수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주문

- R&D 자금의 중복지원, 벤처 자금 네트워크의 난맥,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비정상적 지원을 지적하고, ‘중소기업 옥석가리기’가 필요함을 주장
- 이를 위해 평가시스템 구비 및 지원기관 간 정보 상호 공유를 통해 중복지원 및 자금 오용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
- 정부가 대신 물건을 팔아주거나 인력을 구해주는 등 지나친 직접 지원 확대가 중소기업의 의존증을 심화시키고 자생력을 해칠 수 있음을 지적

김기선 의원

산자부·중기부 산하기관장의 잇따른 방만경영, 지인채용, 갑질 OUT!

☑ 주요 내용

- ▶ **경영전문성 부재, “내사람이 먼저다” 채용비리, 갑질, 도 넘은 모럴해저드!**

 -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장, ‘연봉 1억’ 자리 만들어 여권 인사 얹힌 의혹과 “태양광과 풍력으로 90% 전력수요 충족하는 나라가 여럿 있다”는 거짓 발언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점을 질타하고 해임 촉구
 -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 밑보인 석유개발 전문가들을 적폐로 몰아 강등발령, 업무배제 등 비인격적 인사갑질 일삼아, 산자위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함
 -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자본잠식 진행 중이고 주주사들이 모두 반대함에도 막무가내로 신사옥 건립 추진. 지인채용 비리, 임직원 업무시간 MBA 수강 등 기강해이. 도 넘은 모럴해저드 비판하며 감사원 청구 필요 주장
- ▶ **GDP대비 R&D예산 1위 독보적 인풋, 투자대비 기술수출 29위 형편없는 아웃풋**

 - 산업부·중기부, 과제성공률 90%에 근접하지만, 사업화성공률은 반토막
 - 과제성공률 평가에 사업화 가능성도 포함, 높은 과제성공률로 국민 눈속임
 - R&D투자 늘어도 중소기업 현장에선 연구 수행할 석·박사 줄어 인력난 호소
- ▶ **탈원전 합리화 위한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文정부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나**

 - 과거 태양광 비리로 고발당했던 친여인사 허인회의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에너지공단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서도 불법하도급을 한 정황을 적발
 -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정에서 한수원이 가동률과 경제성을 악의적으로 낮게 평가한 의혹을 제기하며, 조기폐쇄는 최악의 결정임을 강조
- ▶ **한국전력 만년 적자행진에도 무리하게 文정부 코드사업 추진**

 - 한전 비상경영체제에도 문재인 대선공약 달성위해 한전공대 설립추진 질타
 - KBS와 한전의 TV 수상기 소지자 등록신청 없는 수신료 징수는 「방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징수이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
 - 강원도산불 원인은 한전 책임, 이재민들이 납득할 만큼 제대로 보상해야

곽대훈 의원

문재인 대통령 눈치만 보는 정부

주요 내용

문재인 공약 추진위해, 적자기업 한전 압박

-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은 올해 비상경영까지 추진 중에 있지만, 1.6조를 들여 성공가능성도 의문이고, 전문분야도 아닌 한전공대를 설립한다는 것에 동의 못해
-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산업부는 오히려 독려하고 압박하고 있어
- 국민 세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하는 한전공대 설립은 중단되어야 함

총선 후 전기요금 인상 이면합의

- 누진제 완화 한전이사회 통과 위해, 내년 총선 후 전기요금 인상 약속 의혹
- 1차 이사회 보류와 2차 이사회 통과시점 중간 산업부-한전 이면합의 후 외부 법률자문 배임가능성 ↑ → 배임가능성 ↓ 변화
- 내년 총선이후, 탈원전 신재생 비용을 국민들에 청구하겠다는 속내가 점점 드러나고 있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

文대통령 보급목표 올리자, 스마트공장 성과 부풀린 중기부

- 실제 현장평가 사용안하고, 유리한 자료로 대체
- 대통령 3만개 보급 발표에 근거자료 만들기 위해 고용 및 성과 부풀려 발표
- 현재 보급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평가를 통해 보급정책 다시 마련해야

김규환 의원

문 정권의 급진적 탈 원전 청구서, 결국은 국민 몫!

☑ 주요 내용

- ▶ **탈원전 직격탄, 에너지 공기업 줄줄이 적자 수렁! 피해는 모두 국민 몫!**

 - 순익 7조 원의 한전, 2조 원의 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탈원전 여파로 2018년 적자 전환됨. 에너지 5개 발전사의 순익도 1/34로 급감했음
 - 원전 인력 유출, REC 가격 하락, 탄소 배출량 증가 등 문제점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촉구
- ▶ **एं터리 재고관리로 수백억 원의 혈세 낭비! 보관료 갑질 문제도 심각!**

 - 지난 2015년 한전의 과다 발주로 약 13만 7천대(약 98억 8백만 원)의 제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쓰지도 못하고 폐기처분해야 함을 지적
 - 약 677억원 상당의 발주제품을 생산업체에 장기간 방치하는 등 한전의 갑질 행태와 재고관리 시스템의 허점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
- ▶ **ESS 화재 조사, 제조사 눈치 보며 원인 못 찾는 사이 추가 화재 발생!**

 - 정부의 ESS 화재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3건의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 23건의 화재 중 현장조사는 6건에 그치는 등 부실조사 행태를 지적
 - 전소됐다는 정부 말과 달리 당시 손상이 경미한 부품이 있었으나, 제조사의 눈치만 보며 자료 제출도 거부함. 정부의 ESS 화재 재조사를 촉구
- ▶ **화력발전소 유해 물질 없애는 탈질설비, 65% 이상 잘못 설치돼!**

 - 탈질 설비 성능문제 목인한 산업부, 설치기준도 잘못되고 성능까지 의심. 지난 10년간 유해 물질 배출량 허용 기준 초과 건수가 910건에 달해
 -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접수하고 산업부에 15차례 이상 처리 요구했으나, 산업부는 내용까지 비공개하며 묵묵부답하고 있어 대책 마련 촉구
- ▶ **중소기업 인력난에도 근로시간 단축하면 약 13만 명의 추가 채용해야!**

 - 2019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제조업 분야 인력 미충원율이 17%에 달하고 있음. 주 52시간 도입 시 중소기업의 인력·자금난 가중이 우려됨
 -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업장별 차등 적용 등 제도 유예와 재검토 촉구

김정재 의원

정부의 책임회피 및 예산낭비 집중 질타

☑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의 책임회피 질타

- ESS 관련 정부의 모호한 태도와 화재예방 대책 강구 촉구
- 정부 지열발전사업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포항지진, 정부의 책임 회피 질타

▶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

- 108억을 쓰고도 저조한 이용률의 제로페이 민간영역에 맡기길 촉구
- 전통시장의 화재공제사업 가입률 9.5%, 낮은 가입률과 부실한 소방설비 지적

▶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국회 위증 및 책임회피 질타

- 포항지진 관련 책임 회피성 ‘손해배상책임’ 법률자문 의뢰 지적
- 수행기관의 미소지진 최고 위험 기준 임의변경 문제 및 주관기관 보고 누락 질타

▶ 한국전력공사의 부실경영 및 한전공대 설립 취지 질의

- 탈원전 정책으로 1조원 적자 육박한 부실기업 한국전력, 잘못된 정부 정책 질타
- 무리한 한전공대 추진, 에너지 공기업 본연의 임무 충실 촉구

▶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 및 발전사, 자원공사들의 문제점 지적

- 월성1호기 조기폐쇄 한수원 결정의 부당성 지적 및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 발전공기업들 재고관리 부실로 2,942억원 체선료납부, 시스템 도입 및 개선촉구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 부실경영 질타

- 공영홈쇼핑 낙하산 코드 인사, 갑질논란 등 아마추어 경영 질타
- 기술보증기금 대위변제액 18%증가, 기본재산 28%감소 구상채권회수액 11%감소, 국민 세금 330억으로 메워, 재무 건전성 악화 지적

윤한홍 의원

문재인 정부, 정치는 부도덕, 정책은 아마추어

☑ 주요 내용

▶ 조국 펀드가 투자한 익성, 조국 전 민정수석 재임시 산업부 지원 급증

- 자동차부품회사 익성이 자동차 부품과 무관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을 집중 수주
- 설립 이후 20년간 수주한 건수 및 금액보다 조국 민정수석 재임 2년간 수주한 건수 및 금액이 모두 2배 이상
- 익성을 지원한 산업부 산하기관(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않고 익성을 주관기업으로 선정

▶ 좌파 촛불청구서 갇아주는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 공공상생연대기금

-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라 기 지급된 인센티브를 각 공공기관이 반납받아 (재)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 이렇게 모인 돈이 '19년 10월 까지 505억원, 이 중 384억원(76%)를 산자위 산하기관에서 상납
-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의서, 사측의 출연심의위원회 등 다수의 법령상 하자가 발견
-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은 이렇게 모인 돈으로 양대 노조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사회적기업에 재출연 → 사실상 좌파의 촛불 청구서

▶ 고소득자도, 특수관계인의 재테크 수단이 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서민 울리는 문재인 정부

-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8,432명 중 13.8%(3,913명)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이 중 2.7%인 780명은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 연 1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월 900만원 이상)도 222명(0.2%) 포함
- 중기부·중진공 제도 운영상 문제점 발견하고도 제도개선 의지 전혀 없어

이종배 의원

탈원전 등으로 나라 망치는 文정부

주요 내용

탈원전은 지옥행 급행열차다

- 철학자 칼 포퍼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려는 순간 지옥이 된다’고 했음
- 칼 포퍼의 말대로 현재 대한민국은 신재생 천국이 되기 위해 지옥행 탈원전 급행열차에 올라탔음
- 값싼 원전을 포기하고 비싼 신재생 비중을 늘려 우량공기업 한전은 적자의 늪에 빠지고,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오히려 이를 포기하고 사장시키고 있음

캠코더 인사로 만사(萬事)인 인사(人事)를 망사(亡事)로 만든 文정부

- 文정부 출범 후 산자부 산하 38개 기관에 총 286명 중 120명(42%) 캠코더 인사
- 김대중 대통령 손녀사위인 장상현 씨는 커리어가 매우 부족하고 능력이 검증된 바 없는데도, 채용공고의 자격요건까지 바꿔가며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 임명, 그런데 임명 이후 인베스트코리아 실적 급감
- 또한 청와대 비서관 출신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기관 내 안전불감증 및 기강해이가 만연

기업 수탈하고 세금 낭비하는 제로페이, 폐기가 답

- 정부는 제로페이가 ‘관치페이’ 논란이 일자 사업운영권 모두 민간에 넘기기 위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라는 민간법인을 설립
- 그러나 제로페이 민간법인은 수익 없이 은행 등의 출연금을 수탈해 연명
- 또한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까지 확대해 소상공인 살리기라는 본래 취지에 역행, 제로페이 사업중단을 촉구

탈원전과 포폴리즘에 깊어지는 한전 적자

☑ 주요 내용

▶ 세금으로 적자 메워 준 꼼수 세제개편

- 금년 4월 석탄 개별소비세를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10원 인상, LNG는 60원이던 개별소비세를 12원으로 낮추고, 24.2원이던 수입부과금을 3.8원으로 낮춰 kg당 총 68.4원을 인하
- LNG세금 인하로 인해 SMP가 7.45원 낮아져, 한전의 전력구매비용이 연간 5,696억원 줄어듦
- 세제개편의 명분은 환경개선이었지만, 실제로는 탈원전과 탈석탄으로 인한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한 꼼수 세제개편임

▶ 5G 시대에 한전 인편송달비로 연간 700억원, 송달원 모두 정규직 전환

- 한전 전기요금 청구서를 인편송달하는 비용으로 연간 700억원 지출. 우편송달과 유사함에도 비용 2배. 모바일 청구의 10배 지출
- 대체가능 직무임에도 금년 5월 600명 정규직 전환, 내년 2월 약 500명 정규직 전환 예정. 검침원도 21년부터 사라질 직무지만 2500여명 정규직 전환
- 원칙 없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한전의 경영난은 더욱 가중됨.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될 것임

▶ 정부의 태양광 실적 자화자찬속 멍드는 한전 실적

- 올해 상반기 까지 산업부의 계획대비 초과달성한 재생에너지 설비는 1,646MW임
- 상반기 태양광 평균이용률 15.9%를 적용하면, 초과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월간 약 188GW임. 초과분에 대한 구매비는 월 300억원 이상
- 원전으로 대체하면 100억원이면 가능. 성급한 태양광 확대보다 속도조절이 필요할 때임

장석춘 의원

탈원전, 채용비리, 일본규제, 청년정책 등 전방위적 질의

☑ 주요 내용

▶ 과소평가 된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된 탈원전 정책!

- 지난해 한수원 이사회는 수치가 조작된 '경제성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함
- 현재의 원전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월성1호기의 판매수익을 재계산한 결과 약 230억원이 과소평가되었음
- 조작으로 결정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원천무효임을 지적하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

▶ 한전KPS 친인척 채용비리는 빙산의 일각! 전수조사 필요!

-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 된 한전KPS 친인척 채용비리자 11명보다 3배 이상 많은 39명이 적발됨
- 재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자발적 조사의 한계를 지적
-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자체감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니, 감사원 감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시 전수조사 할 것을 주문

▶ KC-1 수리했으나 똑같은 결함 또 발생! 설계자 가스공사는 책임회피!

- 가스공사가 197억원을 들여 개발한 LNG운반선 화물창 국산화 기술 'KC-1'은 심각한 결함(결빙현상)이 발견돼 수리 절차에 들어갔었음
- 9개월 동안 약 200억원을 들여 수리했지만 똑같은 결함이 또 다시 발견돼 민간기업의 피해는 연말까지 약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KC-1'을 설계한 가스공사가 책임지고 신속히 문제해결 할 것을 촉구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목돈 혜택에도 가입자 뚝! 중도해지 급증!

- 청년재직자 월 12만원 납부 시 5년 후 3천만원 마련할 수 있지만, 기업측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고 있음
- 18년 6월 시행 이후 제도 1년 만에 신규 가입자 1/3토막, 중도해지 건수 매월 지속적으로 증가
-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 실패 사례임

▶ 일본수출규제 대응 위해 특허분쟁 미리 대비해야

- 현재 한국의 해외주요국가(미국, 중국, 유럽, 한국, 일본) 특허 출원은 5만9,698개인데 비해 일본은 16만7,781개로 약 3배 많았음
- 특히 일본수출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의 경우에는 국내 특허 중 64%가 일본 출원 특허였으며, 한국 출원 특허는 27%에 불과했음
- 소재·부품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일본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특허분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부당성, 원전 생태계 초토화 등 질의

☑ 주요 내용

- ▶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文 정부의 탈원전 정책코드에 맞춰진 ‘원전 참사’**

 - 7천억원을 들여 사용기한을 연장해 놓고도 정권에 입맛에 따라 조기 폐쇄
 - ‘백년지대계’인 국가에너지 정책을 정권의 이념논리로 망치고 있는 것임
 - 한수원의 ‘एं터리 경제성 평가’는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지겠지만, 한수원 사장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로 이번 사태에 임해야 할 것임

- ▶ **文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60년 동안 피땀으로 일궈낸 원전기술은 헌신짝이 됐음**

 - 두산중공업 나기용 부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탈원전 정책으로 6개의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액이 7조원에 달하고, 협력업체 460여곳의 매출이 급감했다고 증언
 -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지 않으면 2천여 개의 원전 관련 중소·중견 기업이 문 닫을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함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원전생태계를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 한수원 입장?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R&D 부정사용 업체에도 정책자금 수혜**

 - 중진공으로부터 4회 이상 중복지원 업체는 464곳, 총 7,260억원 지원
 - R&D예산 부정사용 업체에도 58건의 정책자금을 통해 181억원 지원
 - 국민 혈세인 정책자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중기부 컨트롤타워 역할 당부

- ▶ **공영홈쇼핑, 성장한 업체에 대해서는 ‘졸업제도’ 시행 정책 제안**

 -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공영홈쇼핑 ‘비리 TOP5’ 지적, 대표이사 해임 등 홍역
 - 개국이후 매출액 100억원을 넘는 업체는 11곳에 달하고, 방송횟수도 잦음
 -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이라는 사명에 맞도록 매출액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인큐베이팅’ 하고, 경쟁력 확보되면 민간홈쇼핑 진출 돕는 ‘졸업제도’ 시행 제안

정유섭 의원

성장·분배·일자리·소득·수출·소비 등 모든 지표가 최악인 정권
마구잡이식 태양광 사업 인허가 10대 미성년자도 아흔살 어르신도
‘태양광 사장님’
한전 및 한전 자회사 엄청난 영업 손실

주요 내용

▶ 성장·분배·일자리·소득·수출·소비 등 모든 지표가 최악인 정권

- (지적) 경제 무지하고 무관심함. 대통령 주재 경제활성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음. 일본 잃어버린 20년 지표가 거의 유사함. 디플레이션 징조. 제조업 4대강국 되려면 기업이 요구하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
- IMF 2019년 한국 경제성장률 2.6%→2.0%로 인하(20년 2.8%→2.2%)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로 인하. 추가 인하 여력 있다고 밝힘. 10월 17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장관회의 개최: 관계 부처 장관들을 모두 불러 모아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회의를 여는 것은 올해 처음

▶ 마구잡이식 태양광 사업 인허가 10대 미성년자도 아흔살 어르신도 ‘태양광 사장님’

- 산림파괴, ESS 안전미해결 문제, 보조금 지원으로 태양광 사업자 지나치게 많아져
- 10대, 90대도 태양광 사장, 친여 인사 태양광 발전소 운영(강해윤, 허인회, 최규성 등) 좌파비즈니스
- 재생에너지 2030년 21.6% 달성 불가능(예정처)

▶ 한전 및 한전 자회사 엄청난 영업 손실

- 한전 적자 속에 안 세워도 될 한전공대까지 설립
- 한전은 고유가 때문에 적자. 적자 주요인은 재생에너지 비용 증가, 원전가동률 감소
- 한전 적자와 RPS 보전비용이 거의 동일, 2023년 의무비율 10%로 인상되면 4조원 적자, 전기요금 인상 안하면 적자규모 늘 수밖에
- 4인 가족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신재생 의무이행비용 전기요금의 3%(1,300원) 부담, 만약 30%까지 올리면 전기요금을 얼마나 부담하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 전력 피크타임에 태양광, 풍력발전 부담비율 1%, 태양광 사업자만 이익(2조원 보조금 지원)
- 한전주식은 뉴욕증시에도 상장, 주가하락은 경영진 이사진 배임, 주주들에 대한 책임 이행 필요, 적정요금 인상 제시하고 전기요금 인상해야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의원

건강보험 재정전망 부실 심각

주요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2017년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에는 2022년까지 30조 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2019년 4월 발표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19년~2023년) 41조5842억이 소요, 건강보험의 소요금액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건강보험이 2018년 8년만에 적자로 전환하였고, △2019년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으로 향후 5년간 9조5148억원이라는 심각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정부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제시한 건강보험료율 3.2%보다 높게 2019년~2022년까지 매년 3.49%로 인상하겠다고 발표, 2019년 3.49%를 올린 후 국민 여론이 나빠지자 2020년에는 3.2%로 정정 발표, 2021년과 2022년의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답변 회피함
- 정부의 공식발표 자료만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에 큰 문제 발생이 예상되지만, 진짜 문제는 공식발표 예측 범위가 실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임

2016년 ~ 2018년 건강보험 재무관리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연도	항목	계획(A)	실적(B)	차이(B-A)
2016년	부채	82,078	71,304	△10,774
	당기순이익	40,125	33,643	△6,482
2017년	부채	78,428	78,527	99
	당기순이익	8,306	3,685	△4,621
2018년	부채	98,518	113,351	14,833
	당기순이익	△26,333	△38,954	△12,621

- ☞ 적자를 만회하기 위하여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49%로 올려 누적적립금을 10조원 규모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 공염불이 된 것
- ☞ 장기계획은 고사하고, 보장성 확대에 따른 당해 연도 재정 지출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한심한 상황

김명연 의원

무책임한 문재인정부 보건복지정책 비판 -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국민연금 단일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문제 -

☑ 주요 내용

▶ 액상형 전자담배 : 위험성 알면서도 손 놓은 복지부

- 미국 CDC(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자담배로 인해 약 800명이 넘는 폐질환자가 발생했다고 조사
- 우리나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2015년부터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전자담배 업계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안전성 검사 강화를 주문. 국감 직후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강력 사용중지 권고를 내림

▶ 국민연금 개혁 : 정부 차원 단일안 없었으나 단일안 답변 이끌어

- 2018년 8월 재정추계 이후 1년이 넘도록 정부 단일안 없는 문제 지적
-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단일안이 없다고 고백
- 2057년 재정 고갈 문제와 미래세대 부담 증가 등 문제점 지적 후 종합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검토 지시

▶ 활동지원서비스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 장애인

- 장애인은 65세가 넘어가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요양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시간이 3분의 1로 감소
- 이에 국가인권위에서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두 차례나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음
- 최종증 장애인만이라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

김순례 의원

문재인 정부의 무능! 국민건강을 위협하다!

주요 내용

▶ 중국산 '취퐁' 김치의 역습, 국민의 식탁위에 비위생김치가 오르다

- 비위생 중국산 김치공장 현황지적! 취퐁, 곰팡이, 쓰레기,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등이 즐비한 현지 김치공장 사진과 분석자료 공개 및 최근 5년간 해당 중국산 김치 2만여 톤이 국내 유통 중임을 밝혀냄
- 국정감사 지적 이후 식약처는 즉각 중국당국과 공조하여 문제가 된 공장을 조사하였으며, 11월 초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을 세움. 또한 수입·통관 단계에서 톱밥 등 이물을 검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을 마련하였음

▶ 한약도 문재인 케어 실시? 한의사협회-청와대 밀실협약 폭로!

- 한의사협회가 청와대 담당자와 문케어 지지선언을 빌미로 한약(첩약)을 건강보험제도에 넣어주기로 했다는 정치적 거래 내용을 담은 동영상과 녹취 공개
- 첩약급여화의 전면중지와 함께 한의사협회와 청와대를 상대로 검찰고발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 중

▶ 조국 딸 논문특혜 빼닮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녀등재논문

- 국립암센터 교수들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제1저자나 공동 저자로 넣어 얻은 특혜를 통해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진학한 사건 적발함
-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주한 연구과제의 논문에서도 자녀등재논문으로 적발된 8건에 대해 징계 및 관련자 연구과제 참여제한 조치를 촉구함

▶ 낙하산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뇌사' 환자 '수술연습' 의혹 나몰라라 대응 지적

- 중앙의료원에서 노숙인·무연고자 등(38명)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뇌수술을 했다는 권익위 신고사건을 공개함
- 19년 2월 국민신문고 접수, 5월초 의료단체협회장이 면담을 통한 문제제기, 8월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기간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변명과 나몰라라식 대응으로 일관한 것을 질타함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중

김승희 의원

거짓말·위선으로 가려진 문재인 복지 정책의 민낯을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

- ▶ **문재인 케어의 거짓말을 밝히고,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 <보장율 70% 달성> 약속은 손해보험사 데이터 상 비급여 이용률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기초해 달성 불가능한 것을 확인
 - <법정준비금 10조원 유지> 약속은 문케어 초기 약속한 1% 재정 절감률로는 2023년 7조 4천억원으로 법정준비금 추락해 달성 불가능한 것을 지적

- ▶ **문재인 정권을 위해 남용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 현 정부의 탈원전 사업으로 극심한 적자를 보고 있는 공기업들에 국민연금이 수익성 고려 없이 퍼붓기만 해 국민 노후자금이 1조원 가량 증발한 사실을 확인
 - 스튜어드십코드를 강화해 민간기업을 더욱 압박하려는 이면에 공기업 낙하산 인사, 부실경영엔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는 이중성을 지적
 - 민간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을 본격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5%를 완화)>에 대해 상위법 위반,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시행령 개정 추진을 요구

- ▶ **<실종아동 DNA>, <자영업자 건보료> 등 실생활 복지 사각지대를 지적했습니다**

 - 실종아동 수색의 유일한 희망인 DNA 관리에 있어 현행법상 보관 기간이 10년에 불과해 이후 모두 폐기 처분될 위기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지적,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 주장, 보건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
 - ‘알바보다 못버는 사장’이 빈번한 현실과 달리 자영업자는 무조건 종업원보다 건보료를 높게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지적

신상진 의원

대한민국의 미래와 평범한 우리의 이웃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현 정부의 무책임, 비전문, 현금성 저출산 정책을 지적

- 청년해외취업(424억)·초중고 자유학기제(893억) 등 저출산정책과 관련 없는 항목을 저출산예산에 포함시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대통령이 위원장임에도 단 한번 회의를 주재하는 등 생색내기에 불과함을 구체적으로 지적
- 아울러 저출산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저출산대응 홍보·교육 대상을 결혼적령기인 청년에서 초중고 학생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

고갈 위기에 놓인 국민연금에 대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

- 현 정부가 미래세대·다음정부에 대한 고민 없이 당장의 인기에 영합한 ‘소득보장 강화,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만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
- 특히 정부가 7지선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책임을 돌린 것에 대해 前정부(특히 진보정부)와 비교하며 강하게 질타, 그 결과 복지부 장관에게서 단일개혁안을 국회에 제안하겠다는 입장변화를 이끌어냄

문케어로 사각지대에 놓인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촉구

- 구체적으로 중증아토피 치료제의 신속한 급여화,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의 까다로운 급여기준 완화 등을 주장, 아이들에게 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촉구
- 또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유전성 질환을 예방하고 대물림을 막기 위해 유전상담서비스 및 착상전 유전자검사(PGD) 급여화를 촉구

장애인의 복지·안전·편의증진 방안 마련을 촉구

- 실제 장애인들의 사례를 듣고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발달장애 거점병원·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대 및 발달장애 친화병원 지정 등 대안을 제시
- 실효성 떨어지는 BF인증의 허점과 장애인보장구 급속충전기 줄속 확대 등 장애인의 안전이 위협되는 실태도 함께 지적

어린이집부터 지역아동센터, 그룹홈까지 영유아·청소년을 돌보는 기관들의 어려운 실정을 지적하고, 부족한 운영비 등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노력 중

- 특히 급간식비가 11년째 동결되어 유치원에 비해 열악함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지역아동센터·그룹홈 등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오히려 최저임금만 주는 실정을 지적 및 예산 반영을 촉구

재정 낭비하는 무리한 복지정책 질타

☑ 주요 내용

▶ 일자리안정자금의 무리한 추진 질타

- 정부는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무리하게 수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노조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직원들의 업무피로도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는데 경감액이 작년과 올해 5천억이 넘는 실정임. 이는 명백한 중복 혜택이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역차별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 수혈정책의 문제점 제기

- 올해 헌혈건수는 작년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혈액적정보유일수 또한 4년 전보다 2배나 높은 등 저출산으로 혈액부족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 수혈률은 미국에 비해 심장수술시 3배, 관절 수술시 10배가 높은 등 적절한 수혈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
- 호주의 ‘환자혈액관리사업’처럼 수혈적정성 예비평가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헌혈 부족에 대비하고 수혈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함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부실한 감사 및 운영 실태 지적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비 부정집행 등으로 복지부 특별감사를 받았음에도 자체징계지침을 편법으로 이용하며 체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내림
- (장애인개발원) 예산 목적 외 사용, 부정집행 등 지역발달장애인센터의 비리 및 부실한 감사실태를 지적함

윤종필 의원

무능, 무책임, 거짓말 정책에 국민 부담만 확대, 사회주의 복지정책의 판을 새로 짜야!

☑ 주요 내용

▶ 저출산·고령화 인식조사 멋대로 진행, 방향도 못 찾는 무능·무책임 정부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인식조사회사 표본대표성, 타깃층 설정 엉망
- 보건복지부가 2012년~2017년 진행한 조사 임의로 보건사회연구원 넘김
- 문재인 정부 정책 홍보용 조사구성, 조사프레임 임의수정, 국민기만조사

▶ 보장성 확대한다던 ‘문케어’ 무능, 실체는 무능, 무책임, 새빨간 거짓말

-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문케어 부작용 속출함에도 막무가내 밀어붙이기
- CT, MRI 촬영 경쟁으로 횡수 대폭증가 → 실손보험 상승, 국민부담 증가
- 유도질문으로 얻은 결과 대대적 홍보 → 대국민사기, 여론조작

▶ 블록체인 거버먼트, 블록체인, 정부를 혁신하다

- 정부 간에도 공공서비스 부문 블록체인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 시작
- 블록체인으로 공공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
- 민간의 직접참여 확대 등 공공부문 혁신을 도모함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스튜어드십 공약은 빛좋은 개살구

- 국민연금개혁안 단일안 도출 실패, 폭탄돌리기식 책임회피 중단해야
- 대통령직속 기관도 실패, 연금 내는 청년들은 연금수령 ‘0원’ 세대로 전락
- 복지부와 국민연금, 대통령직속기관의 직무유기, 국민노후 불안만 가중

▶ 복지부 장관, 게임중독 치료·예방에 중심역할, 대책 마련하겠다고 약속 지켜야

- 복지부 장관, 게임중독 치료에 중심역할 대책마련 약속해 (10월 4일)
- 최근 3년간 치료예방사업 0건, 민간에선 2014년부터 관련자격증 제공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게임전문 상담인력 양성사업, 복지부가 지원해야

이명수 의원

「보건의료·복지업무」 사기진작·전문성 강화·업무 방법론 등 「패러다임」 혁신!

☑ 주요 내용

▶ 한국형 미래 복지국가 모색 필요!

- 압축 민주주의와 압축 경제성장 달성 → 「짧은 기간 압축적 복지제도 구축」 평가
- 「新사회적 위험」의 본격 도래 → 「新복지국가의 정책수립과 실천」에 소극적
- 국민통합형 미래 복지정책 지향 하에 사회지출과 투자병행의 지능적 복지국가 추진 필요

▶ 일본군 성피해자 거주지, 「나눔의 집」 문제 심각!

-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시설 설치, 승용차 한 대만 간신히 지나가는 협소한 진입도로 및 낡고 식별이 어려운 안내표지판 문제
- 일본군 성피해자 할머니들 말로만 위하지 말고, 「실질적 지원」 필요
- 고령의 할머니들 위한 「입욕시설」 설치 지원
- 효율적 예산 집행 위해 정부·지자체 노력 등 종합적인 보호·지원 대책 재수립 및 체계적 보완·추진

▶ 新복지사각지대 「북한이탈주민·사할린 귀국동포·다문화 외국인」 문제

- 안정된 정착·생계 곤란 지속, 이방인 같이 외로운 新한국인
- 법과 제도에 대한 혼란, 문화와 환경에 대한 부적응, 기초생활에 대한 정보 부족 → ‘多重苦’ 상황
- 내국인과 차별되는 별도의 대책 강구, 수요자 중심 「맞춤식 지원 확대·강화」

▶ 의료난민, 아직 소외 받는 「희귀질환자들의 삶」 진단

- 국정감사 등 거듭된 지적 및 요구사항에도, 대부분 진단곤란·치료제 부재
- 정부 및 국회, 「희귀질환 연구개발 지원·전문 인력 양성 등 종합대책」 마련 시급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

중요한 현장조사와 깊이 있는 정책질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다

주요 내용

폭발위험 전자담배 기기 재활용 문제점 지적(KBS보도)

- 전자담배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리튬2차전지’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나 환경부는 전자담배 기기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라고 안내함
- 기기의 수명은 통상 1~2년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폐기물이 대량 발생할 가능성 존재
- 기기와 리튬2차전지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을 강력 촉구함

불법 바닥조명광고의 ‘빛공해’ 문제점 지적(MBC보도)

- 간판 높이에서 도로바닥에 빛을 쏘는 일명 ‘바닥조명광고’는 지자체 허가 대상이나 자료를 통해 허가사례가 전무함을 입증함
- 국립환경과학원 의뢰를 통해 서울시내 상권 지역에 대한 불법 바닥조명광고의 빛세기(휘도) 측정(측정결과 기준치의 최대 20배 초과 사례 확인)
- 인공조명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환경 위해 방지를 위해 환경부 차원의 불법 바닥조명광고 특별점검 실시 요청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실패로 인한 대전환 필요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대참사, 자영업자 줄도산, 소득분배 악화
- EITC 확대로 최저임금 1만원 효과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일자리 창출 투자가 필요
-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실패로 기업의 경쟁력 약화, 근로자 임금감소 등 부작용심화. 시급한 보완책으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 등은 노사자율로,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 비정규직의 무늬만 정규직 전환은 대실패. 노노갈등, 노사갈등, 채용비리, 공공기관의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됨. 노동시장 원리에 맞는 순기능이 작동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

민주노총 행태와 ILO 핵심협약 비준 대응방안

- 민주노총의 관행적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와 불법점거 및 폭력시위, 노조의 우월적 지위로 취업독점·채용비리 등으로 소득격차 등 경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민주노총만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밀어붙이고 있음. 노사균형을 맞춘 선입법 후비준 필요

강효상 의원

환경부의 안일한 환경오염대책과 고용노동부의 현실 외면한 노동정책 질타

☑ 주요 내용

▶ 환경부 주요지적사항

- 영남권 식수권 낙동강 오염원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실효적 대안책 없음
- 환경오염사고 일으키는 고려아연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하라
- 대한민국 수돗물 직접음용률 OECD 최하위 오명
-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의 성공적 운영 및 활성화 대책
- 친환경보일러 지원대상 확대해야

▶ 기상청 주요 지적사항

- 기상청 항공예보오보로 피해 입은 국내 항공사들
- 기상청 국내항공예보 독점으로 일본업체 찾는 항공사들-민간규제 풀어야
- 기상청 슈퍼컴퓨터 5호기 중국기업 레노버 선정 정보보안 문제점 지적
- 기피야 만연한 기상청, 퇴직자 재취업 대책 시급

▶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주요지적사항

- 현실외면한 주52시간 3년 계도기간 연장필요 지적
- 장애인의무고용 이행비율 저조
- 채용비리와 국민혈세 생색내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 대구형 일자리 촉구, 이월드 아르바이트 사고로 제2의 이월드사고 예방
- 최저임금인상과 경기악화로 지역경제 최악-임금체불 심각

▶ 환경부 산하기관 및 지방 환경청 주요 지적사항

- 국립공원공단, 중국 DJ드론 허술한 보안문제 철저히 단속해야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실적 부진 질타
- 수자원공사, 영주댐 등 댐유역 오염원 저감대책 시급
- 대구 경상여고 약취사고 원인규명과 조속한 해결책 제시
- 대구지역 산업단지 대기오염방지 시설 노후화 심각

문진국 의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손 놓은 환경부와 일자리사업에 혈세만 퍼부은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대규모 주거지역 개발 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손 놓은 환경부

- 현재 폐촉법에 의거해 도시개발·택지 개발 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시행사인 LH는 부담금으로 납부
 - 최근 10년간 LH가 시행한 택지 개발 총 76개 중 시설을 설치한 곳은 단 2곳 불과
 - 폐기물 처리시설 미설치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갈등 심각한 수준
 - 최근 5년간 LH와 지자체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비용과 관련한 소송 총 37건
- 위례신도시(송파, 하남, 성남), 폐기물 처리시설 미설치로 자체 처리를 하지 못해 다른 시군구에서 처리
 - 하남시, 50km 떨어진 이천시에서 소각 중
 - 서울 송파구, 인근 강남 소각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처리 중
- 이에 폐기물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의 역할이 큰 만큼 이를 유념하여 국정운영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폐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함

▶ 일자리안정자금의 비효율적·졸속추진으로 불필요한 혈세 및 행정낭비 심각

-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은 13번의 잦은 지침변경, 부정수급, 검증시스템, 상담원들의 업무과중 등 전반적인 문제가 심각해 올해 3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당시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환노위 차원의 감사를 건의함
- 이에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19.6), 부당지급, 부정수급 등 절차상의 오류로 환수해야 할 금액이 568억원에 달하며, 이 중 지원대상이 아닌 특수관계인 2만709명에게 229억 81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남. 10월말 기준 국고로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243억 43%임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 저조 및 관리 부실로 국민혈세 낭비 심각

- 2017~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투입한 혈세만 41조원이며, 부정수급액은 859억원이나 됨. 전형적인 부정수급 방식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예방대책은 실효성이 없음(2017년 414억원, 2018년 282억원, 2019.6월 163억원)
- 2019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중 직업훈련 분야의 평균취업률은 45%, 고용서비스 분야의 경우 38%에 불과함

신보라 의원

현장 외면한 문 정부 가짜 정책(여성·청년·환경) 날선 비판과 대안 제시

☑ 주요 내용

▶ 육아 경험 살린 워킹맘 정책 제시

- 임신·육아근로자 임금·승진·경력 등 차별 실태 고발
- 공공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육아휴직자 차별 강력 비판 및 시정 요구
- 문 정부의 어설픈 육아정책(ex.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책) 날선 비판과 대안 제시

▶ 청년과 함께 문 정부 청년일자리 정책 무능 비판

- 문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인한 청년고용의무, 청년 채용형 인턴 등 청년채용 부작용 전면 비판
-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문 정부 청년일자리사업 사각지대 지적
- 청년 취업기회 외면하는 특권노조의 고용세습, 조합원 우선채용 엄정한 처리 요구

▶ 직접 체험한 부실한 성희롱 강사양성프로그램

- 직장 내 성희롱부터 미투까지 정부의 성희롱 근절 대책 부재 지적
- 성희롱 예방부처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성희롱 만연 질타
- 직접 성희롱 강사교육을 수료 후 정부의 위탁교육기관 관리 부실과 강사양성프로그램 개선 촉구

▶ 국민의 건강과 안전 측면에서 안이한 문 정부 환경정책 점검

- 문대통령의 무리한 120만 톤 폐기물 연내 처리 지시가 빚어낸 쓰레기산 재방치 비판
- 수도물 적수 사태에도 형식적인 상수도 실태 평가 반복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 지적
- 수차례 연구용역 뒤에도 섬유유연제 미세플라스틱 규제 않는 환경부 질타

▶ 관리감독 손 놓고 있는 정부의 복지부동 지적

- 수도권계량기 점검 미실시가 초래한 제품 전수 납기준 초과와 업계 담합
- 자동차서비스센터 점검 전무로 대기업들도 대기·수질·폐기물 기준 미준수 태반
- 직원들 채용비위 및 관리감독 비위 등 온정적 처리해온 산하기관 비판

이장우 의원

**4대강 보 처리여부 최종결정권한 국가·유역물관리위 ‘그들만의 리그’
친정부·여당 소속 지자체장 측근인사 일색...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 주요 내용

- ▶ **‘4대강보처리’ 다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구성 ‘편향’, 특정위원에게 일감 몰아주기**
 - ‘4대강 보 처리’ 다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이 4대강 사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특정 인사들, 보 철거를 주장한 이력이 있는 인사들, 친정부 인사들, 환경부에 협조적인 전문가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측근 인사들로 채워졌음
 - 뿐만 아니라 위촉직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최근 3년간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연구용역을 분석한 결과 총 116건 중 81건(약 70%)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됨
 - 국가물관리위 위원장 9억 8천만원(1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이자 낙동강유역위원 6억 1,000만원(5건) 등
 -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공식아래 사실상 연구용역이 ‘암묵적 내정’으로 이뤄지고 특정위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
 - 또한 3개 보 해체 제안했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 및 전문위 위원 중 20명이 45개의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이 중 33개가 ‘2회 유찰-수의계약’ 등 수의계약으로 체결됨
- ▶ **文정부 입맛에 맞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친노동 포퓰리즘정권 만드는 데 동원**
 - 새롭게 위촉된 2기 공익위원 역시 친정부·친노동·친노조 인사로 구성
 - ‘공익’ 이름 내걸고 반시장·친노조 정책 강행한 최저임금 인상 때와 판박이
 - 공익위원 A, 문 대통령 외곽조직 ‘담쟁이포럼’ 출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선대위원장, 민교협 공동의장 출신
 - 공익위원 B, 더불어민주당 신성장특별위원회 위원 활동
 - 공익위원 C, 박원순 시장이 2006년 설립한 민간 싱크탱크 희망제작소 출신
 - 공익위원 D, 진보성향의 노동법 학자 출신이자, ‘서울학파’ 대표하는 인물
 - 기존에 임명된 의제별위원회 공익위원에서도 ‘편향’
 - 사회안전망개선회, 7인 중 6인이 참여연대 관련자, 여당 정책활동 참여 등
- ▶ **국민 속이는 거짓 고용통계, ‘조국스럽다’**
 - 최근 고용동향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는 망상에 빠져있음
 - 정부가 세금지출로 만들어낸 일자리수를 가지고 고용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기만적통계로 사용
 - 대부분 정부세금 들어간 단기·단순노동·저임금위주의 ‘관제일자리’
 - 30·40대 취업자수 24개월째 동반 감소세, 제조업 18개월째 감소, 금융보험업 9개월째 감소, 36시간 미만 취업자 73만7천명 증가 등
 - 고용 통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발표해야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의 부드러우면서 단호한 리더십

☑ 주요 내용

▶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합리적인 공정하지만 냉철한 운영

- 국토교통위원회 첫날 국정감사(국토부)에서 18호 태풍 미탁에 피해가 우려 되는 바 국민의 안전을 위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청장, 2개 지방항공청의 청장들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석
- 태풍을 인력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태풍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고 국토부는 도로, 철도, 공항을 비롯한 노후 SOC 및 건설현장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 요청

▶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코레일 긴급 방문 점검

- 10.11.~14.까지 이어진 코레일의 철도 파업에 국정감사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12일 밤 늦은 시간 대전 코레일 본사 현장을 긴급 방문해 철도노조 파업 대책 논의.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사회적 책임감을 잊지 말 것을 요청. 특히 국민이 피해를 막기 위해 철도 노조의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해 주길 요청

▶ 국토교통위원장이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질의

- 선분양 폐해와 지자체에 쏠려있는 관리감독의 권한 견제
 - 선분양의 대표적 문제인 부실시공과 대형건설사들 간의 컨소시엄으로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지적
- 성급한 LCC 면허승인, 국내 항공사간의 출혈 경쟁으로 인한 전반적인 항공산업 적자 및 도산우려 지적
-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정규직 전환문제(인천공항공사, 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 있어 과정의 문제점 지적과 추후 대책마련 촉구
- 철도공사, SR 등 철도차량 장애 및 예방에 대한 대책과 철도안전관리 이행·점검체계 강화
- 버스, 택시, 플랫폼 업계의 상생과 함께 국민의 교통권을 향상시킬 방안마련 요구

박덕흠 의원

편법·비리·부작용 판치는 문(文) 정권 총체적 정책 실패 고발

📋 주요 내용

▶ 문재인 정부, 주택가격 양극화 심화

-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된 주택가격 양극화 실태 지적
- 시장에 맡길 것은 과감히 맡기는 부동산 정책의 전환 주문

▶ 조국 일가(一家) 일감 몰아주기 실태 확인

- 조국과 그의 일가가 혈연에 의한 연결고리를 형성해 부적절한 이득을 취함으로써 건설시장의 공정거래 기조가 흐트러지는 악영향 발생
- 공정위와 협의해 공사 없는 거짓발주, 건설분야 일감몰아주기, 이를 통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개선 방안 마련 촉구

▶ 새만금 개발사업... 신중한 재검토 필요

- 새만금청의 현실성 없는 사업계획과 관계부처 인사 교류 창구로의 악용 지적
-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을 세워주길 당부

▶ 편법 해외실적으로 국내 공사(工事) 입찰·수주 고발!

- 해외건설 실적 증명의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업체의 행태와 실적증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인천공항공사의 안일한 업무처리 지적
- 세계최고 인천국제공항의 명성답게 입찰, 계약, 시공 전 과정에서 작은 문제도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

김상훈 의원

공정을 상실한 국토교통부 (낙하산인사·채용비리·건설노조비리 만연)

주요 내용

국토부 공기업 정규직 전환 자회사 임원, 낙하산으로 채워진 사실 확인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7개 기관은 文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9곳의 자회사를 세웠음. 문제는 이 중 6곳의 대표이사과 상임이사 등 무려 75명이 與권출신 정치인 및 당직자 등 與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로 채워진 것을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냄
- 이들 인사는 전문성이 결여되었거나 불투명한 선발과정을 거쳐 채용된 사람들이 대다수 인데다, 고액 연봉 및 성과급, 차량 제공 등의 과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미명하에 '캠코더 인사' 행겨주기에만 급급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비리 사실로 드러나

- 감사원 감사결과 정규직 전환자 중에서 서울교통공사 192명(14.9%), 인천국제공항공사 2명(33.3%), LH 93명(6.9%)이 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이 드러남
- 하지만 감사원 감사는 자료 불충분으로 더 이상 조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 이는 조직적으로 은폐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채용비리 사안 전반에 대한 검찰조사를 촉구함
- 또한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된 기관에서도 채용관련 불공정이 존재한 것을 확인함. 국토위 소관기관 및 산하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전수조사 촉구함

건설현장에 만연한 건설 노조의 비리에도 국토교통부는 '쇼'로 일관해

- 건설노조는 조합원 및 기계장비 사용강요 및 부당한 전임료·월례비·과도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공사현장 봉쇄, 민원 유발 등 각종 부당행위로 건설현장 작업을 방해하고 있음을 사실로 확인함
- 국토부는 이에 대해 '노사정 상생협약' 및 '타워크레인 노사민정 협의체'를 거론하며 문제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실상은 상생협약 이후 실시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위법 단체협상만 289건, 월 최고 900만원의 월례비를 2~3년간 매달 지급하고 있는 실상을 확인함. 결국 상생협약은 한낱 '쇼'에 불과한 만큼, 건설현장 전수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

김석기 의원

문재인 정부, 우리 국민의 생존과 인권은 외면한 채, 오로지 북한 퍼주기에 혈안

📌 주요 내용

▶ 정부, 전력난 북한 지원 위해 직접 송전 검토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1월 철도 전력공급 방안 등 ‘북한철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회의를 함
- 산자부는 “철도 분야만 전력을 공급하는 건 어렵고 북한내 산업단지 등과 연계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이 같은 산자부 측의 의견에 대해 한국전력은 “기술적으로 개성공단 내 평화변전소에서 평양으로 직접 송전이 가능하다”며 “약 200km 거리까지 200만VA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함
- 국민은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단순히 남과 북이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평양에 직접 전력공급은 물론 북한의 산업시설을 위한 전력공급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냄

▶ 서울시 8억 원 들인 ‘평양 도시계획’…사회주의 맞춤형

- 서울시는 서울과 평양의 교류에 앞서 평양을 먼저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평양개발계획’ 연구용역보고서를 만들
-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사회주의에 맞춘 도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함. 인구 규모는 물론 이동도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활용해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음. 수의계약을 맺을 당시 서울연구원장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처음 3억 원이었던 용역 예산은 8억 원으로 증액됐고, 올해 5월에는 후속 성격의 연구에 4억 원이 추가로 투입됨
- 남·북, 미·북 관계는 매우 냉각되어 있음. 서울에서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탈북모자가 아사 함. 이런 상황에서 세금으로 평양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임

▶ 돈 떼일까봐 유언장 받고 다니는 ‘NH’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NH)가 무연고 고령자 사망 시 불량채권 회수 등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임대주택 고령자들에게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권유하고 있었음
- 지난해 정부의 단기일자리 창출정책에 따라 NH는 ‘홀몸어르신 살피미’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거노인에 대한 말벗, 민원 청취 등의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들에게 유언장 작성을 권유한 것임
- 불량채권 회수 등은 행정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공기업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유언장을 받고 다닌다는 것은 반인륜적인 정책임

민경욱 의원

단기 일자리 양산, 기관장 기강해이, 낙하산 인사까지... 문재인 정부의 난맥상 짚어내

☑ 주요 내용

▶ 단기 알바 늘려 정부의 일자리 통계 조작에 앞장서는 국토부

- 지난해 청와대와 기재부가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에 단기 인력 채용을 압박한 결과 18년도에는 17년도 대비 1.9배의 인원을 채용했고, 올 해도 9월말 기준 6,173명을 채용했거나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단기 인력을 가장 많이 채용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9월말 기준 정규직 현원 7,062명보다 많은 7,614명을 채용했음. 그 결과 공공기관 경영실적에서 우수(A) 등급을 받았으며, 기관장은 1억 원이 넘는 성과금을 받게 됨
- 보여주기용 통계 개선을 목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막대한 재정을 쏟아가며 단기 알바를 양산하는 것은 돈을 나눠주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의 도 넘은 기강해이

-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국감장 이석해 태풍 피해 발생 대비하라는 국회 배려에도 연락두절... 정위치 않고 자택귀가 했음을 밝혀내고 사과를 이끌어냄
-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 역시 이석 후 약 6시간 동안 소재파악 불가
- HUG 이재광 사장은 도덕적 해이, 예산 낭비, 경영 갑질, 황제 의전의 결정판. 더 이상 기관 신뢰도 추락시키지 말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함

▶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는 국토부 산하기관

- 제주도지사 떨어지자 공공기관 이사장에 꽂은 문대림 JDC 이사장, 문재인캠프 출신 경기도의원 김유임 LH주거복지정보 대표, 경남 노사모 회장 김태환 LH사옥관리 대표, 문재인캠프 제주도당 공동선대위원장 출신 김진덕 JDC파트너스 대표, 문재인캠프 노동팀장 출신 이상연 KAC공항서비스 사장, 민주당 영주문경예천 지역위원장 출신 박영기 KAB파트너스 대표 등등
- 말로만 평등, 공정, 정의를 외치며 뒤로는 친여 인사들을 내리꽂는 최악의 낙하산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함

송석준 의원

급증하는 보증사고 2014년 대비 2019년 36.5배 폭증

☑ 주요 내용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사업 운영

- 2019년 8월 말 기준 보증사고 현황은 총 1,888건, 6,617억의 보증사고가 발생...기업보증 사고가 26건 3,223억원, 개인보증 사고가 1,862건 3,394억원
- 2017년 보증사고 654건, 1,060억원 대비 2019년 보증사고 건수는 2.9배, 사고금액은 6.2배 증가
- 특히 개인보증의 경우 2014년 112건, 93억원에 불과했던 사고가 2019년 8월 말 기준 1,862건, 3,394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해 2014년 대비 건수는 16.6배, 금액은 36.5배 증가
- 2019년 발생한 기업보증 사고 중 주택분양보증의 경우 시공사의 기업회생 절차로 공사가 중단되어 2,302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강통전세 발생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업들은 기업에겐 자금문제에 대한 활력을, 개인에겐 주택구입과 전세 등 주거마련을 위한 희망을 주는 사업
- 하지만 개인보증 중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2016년 이후 발급된 보증의 기한도래로 사고 급증

▶ 보증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증상품별 특성에 맞춘 리스크 관리 및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해선 적극적 채권회수로 금전적 손실 최소화해야

송언석 의원

국토부 주택, 교통, 항공업무 제대로 수행해야!

☑ 주요 내용

▶ 매입임대주택 공실 문제

- 최근 10년간 매입임대주택 99,136호를 매입한 가운데, 이 중 40.1%(39,739호)을 문재인 정부 3년간 공급하였음. 지난해에만 매입임대 주택의 공급량이 54.8% 증가. '13년 이후 최대치 기록
- 올해(7월 기준) 매입임대주택 1만 536호를 매입한 가운데, 이 중 입주를 완료한 주택은 2,405호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전체의 77.2%에 해당하는 8,131호가 공실로 남아있는 상황
- '18년 누적재고 기준 6개월 초과 장기 미임대 주택은 3,340호에 달함
-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매입임대주택 9,895호 추가매입 예정
- 제대로 된 수요예측을 통한 매입임대주택 공급량 재검토 필요

▶ 버스준공영제로 사주들 막대한 이득 챙겨

- 지난해 서울시는 버스회사들의 운송수지 적자(2897억 7892만원)에 대한 보전을 위해 2788억원을 지원해 주었음. 한 곳당 평균 42억 8923만원의 세금이 들어간 셈
- 문제는 운송수지 적자를 세금으로 메운 회사 63곳 중 절반이 넘는 33곳(52.4%)이 사주일가에 고배당을 시행했다는 점. 33개 회사의 배당 총액은 283억 2558만원으로, 한 곳당 평균 8억 5835만원이었음.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되레 사주들이 막대한 이득을 보았음

▶ 항공사 잘못 숨겨주며 눈 감고 귀 닫은 국토부

-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4건의 관제지시 불이행 사건이 발생
- 2019년 7월 11일 대한항공 001편이 인천공항 관제탑의 이륙허가 관제지시 없이 무단이륙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국토부 자료에는 무단이륙 사건이 누락되어 있어 일부 항공사에 대한 봐주기 의혹 제기

이은권 의원

**이은권 의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문재인 정권 실정 지적,
민생 살리는 정책대안으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요 내용**

-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 10.02(수)**

 - 공시가격 현실화로 9630억의 재산세 폭탄, 공정하지 못한 조세지적
 -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수백조 부채에도 매년 성과급 잔치
 - 교통사고 주요 유발 원인 포트홀, 연평균 21만 건 발생해 사망자 속출해도 대책 없는 국토교통부 지적
-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정감사 - 10.04(금)**

 - 근절되지 않는 대기업 건설사의 단합, LH의 숨방망이 처벌로 피해속출
- ▶ **한국철도공사 등 국정감사 - 10.07(월)**

 - 철도터널 방재시설 미흡,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 지적
-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국정감사 - 10.08(화)**

 - 대전 혁신도시 지정논리 부재, 중앙정부를 설득할 혁신전략 필요
- ▶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 - 10.10(목)**

 - 국민피해 가중시키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높은 수수료 개선해야
- ▶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정감사 - 10.14(월)**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높은 이자율, 서민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
-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등 국정감사 - 10.15(화)**

 - 새만금 태양광 설치 부적절 및 산업단지 조성 저조 지적(10년간 25.8%)
-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10.17(목)**

 -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지적,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의혹 감사청구 요구
-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정감사 - 10.18(금)**

 -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민들 피해 가중시키는 불법 주차대행 지적
- ▶ **국토교통부 등 종합감사 - 10.21(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 마련 당부

이헌승 의원

자기 사람 밀어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여당!!

☑ 주요 내용

▶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범여권 권력층의 배불리기로 전략!!!

- 조국 펀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이 당초 2014년 초록우산어린이 재단 측이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남
 - 2014년 11월 서울시와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지원하는 협약식을 체결
 - 2015년 1월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은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 사업 제안” 공문을 발송 (사업수익금은 아동 지원사업에 재분배)
- 이후에도 초록우산어린이 재단 측은 서울시장실과 사업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음. 이 과정에서 코링크PE의 웰스씨앤티도 언급
- 그러나 서울시는 2015년 11월 『서울지하철 통신서비스 수준 향상계획』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되, 시설사용료를 납부받는 “수익형 사업”으로 추진함
- 결국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이 공익목적이었으나 정부여당의 자기 사람 밀어주기로 인해 수익형 사업으로 변질되었음을 방증

▶ 부실한 친 박원순의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

- 2015년부터 2019년 9월 현재까지 추진한 서울시 7종의 사회주택 공급량은 총 1,529호에 불과하며, 이는 재무구조가 부실한 협동조합이 담당했기 때문임
- 서울시가 선정하는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제출한 기업평가등급 보고서 44건 중 37건은 모두 ‘CCC’ 등급 이하, B등급은 7건에 불과
- 서울시는 이들에게 사회투자기금 융자지원 했으나, 전체 융자지원액 253억 3700만원 중 10% 가까운 금액(23억600만원)에 대해 사업자들이 만기를 지키지 못해 상환 유예를 신청
 - 이 중에는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장을 역임한 사람이 대표로 있던 두꺼비 하우스 등의 친 박원순 협동조합도 포함되어 있음

이현재 의원

국토부와 산하기관의 각종비리, 광역교통개선대책 문제 낱낱이 파헤쳐

☑ 주요 내용

▶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 심각

- '06년~'10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수도권 택지 30곳의 총 사업비 기준 1~3위의 교통사업을 선정(89개)해 분석결과, '06년~'10년 사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00만㎡이상 택지개발지구의 교통사업 97% (89건 중 86건)가 계획보다 1년~14년 지연. 이 중 8개 사업은 준공 계획조차 정해지지 않아 기한없이 방치된 상태였고, 5년 이상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도 총 57개(64%)로 전체 사업의 2/3에 해당함
- 서울에 필요한 주택은 서울에 건설해야 함.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물량을 퍼부어 기존 신도시가 물량 부담과 집값 하락 우려에 시달리게 된 것임. 특히 고령화 속도, 출산율 감소 등 인구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 없이 추진되는 외곽 위성 신도시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한 시점임. 3기 신도시를 포함, 물량 공급 확대에만 주력하는 현행 외곽 신도시 계획을 향후 인구변화 등 주택 수요를 정확히 추산해 개발 시기 및 규모 등을 수정해야 함

▶ 국토부 산하기관(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채용비리

- **코레일** - 코레일 출신 전 SR노조위원장, 전 SR영업본부 이사 등과의 친분으로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녀의 부정채용 청탁을 함. 그런데 코레일은 자녀 채용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코레일 기장 2명은 각각 1,500만원, 1,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자 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정직 1월 경징계 / **인천공항** - 정규직 전환 대상자 3,604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20명, 협력사 관리자급 임직원의 친인척 24명 등 총 44명이 확인, 이들의 채용과정은 모두 서류심사 과정 확인 불가하거나, 면접 대상자를 임의선정하고,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등 100% 채용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절차를 통해 채용된 것으로 밝혀짐
-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대폭 개정해 특히 채용비리에 관련하여 엄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서민주거복지 첨병 HUG, 이재광 사장은 황제의전, 직원들은 호화복지

- 이재광 사장의 차량개조, 임대 종료 안 된 사무실 이전 등 호화의전과 과도한 외유성 해외출장을 지적하였음
- 직원의 경우, 본인 결혼이나 부모 및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비 최대 100만원, 특급호텔 호캉스 지원, 1%대 특혜금리 혜택 등의 과도한 복지가 기재부 지침위반임을 지적
- HUG 이재광 사장의 호화의전과 직원의 과도한 혜택을 지적하여 공공기관방만경영에 경종을 울림

함진규 의원

의혹과 허위로 점철된 국토부(및 산하기관) 사업들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 1호 뉴스테이(서울남부교정시설(구.영등포교도소 이적지) 뉴스테이) 사업, 공모지침 위반

- 대기업 시공사와 공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토지주택공사) 유착 의혹
- 상가책임임차인 일방 배제로 인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미비 상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투자 심사 통과
- 양 공사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각각 공모지침에 어긋나는 약속서를 제출 받고 사업 진행

인천공항공사, 항공등화 공사 특혜·비리 의혹

- 인천공항공사는 '18년 7월 입찰공고를 통해 4단계 북측원격계류장 항공등화시설공사 수행
-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의 공사실적을 인정해 낙찰시킴으로써 인천공항공사와 업체 간 유착 의혹
- 사업부서는 입찰공고에 게시된 자격심사기준에 따르면 인정받을 수 없는 기존 공사실적을 당초 입장을 바꾸어 인정하고, 계약부서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을 초과시키는 등 상부지시, 외압 등의 의혹도 있음

문재인 정부 및 LH의 공공임대주택 미세먼지 대책 허구

- 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LH는 지난 4.4. LH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발표, 112만호에 이르는 LH 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건강 보호를 홍보
- 하지만 그 내용은 실제 생활공간이 아닌 주민공용시설, 승강기 등에 국한되고, 실제 중요한 세대 내 환기장치 관련 부분은 신규설계지구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112만 호에 이르는 입주민 건강보호와 무관
- 특히, 미세먼지 필터링이 가능한 기계환기장치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만 적용되고, 대다수 서민이 거주하는 행복주택 등 순수임대주택은 건설년도와 무관하게 미세먼지 필터링이 불가능한 자연환기장치(시공비 저렴)를 적용해 사실상 입주민은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방치

홍철호 의원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상안」상 김포한강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계획 반영과 이행논의 재개 설득

☑ 주요 내용

- ▶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은 실효

 - 전체 12곳의 2기 신도시 중 개발이 완료된 곳은 김포한강(‘17년 완료), 대전도안(‘12년 완료) 등 2곳으로 개발완료율(신도시 수 기준)이 16%에 불과
 - 2기 신도시의 대다수가 택지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미분양 우려가 있는 곳도 존재하는바, 2기 신도시의 교통인프라 등 보완 대책 없이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3기 신도시의 교통인프라 구축 등 추가적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
 - 2기 신도시에 대한 효과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민편의시설 및 SOC를 확충하여 2기 신도시의 완성률을 제고한 후 이를 통해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을 주지시킴

-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상 「김포한강선 이행계획」 반영

 - 정부가 그 동안 2기 신도시를 조성만 한 후, 효과적인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
 - “김포한강선 이행계획을 대광위의 ‘광역교통망 구상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극 요구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를 통합적으로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구상안에 계획을 담겠다”는 답변을 받음

- ▶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김포한강선 이행 논의」 재개

 - 2018년 12월 국토부가 ‘김포한강선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했지만 발표 시점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김포시 등 지자체 간 이견 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하여금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하도록 했고, 서울시 등의 관계 지자체는 국정감사 이후 논의를 즉시 재개하겠다고 밝힘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백서

여성가족위원회



송희경 의원

위선과 무능 드러난 여성가족부

☑ 주요 내용

▶ 여성가족부 차관, 익명으로 윤지오 셀프후원 드러나

- 여가부는 지난 6개월 간, 익명의 기부자의 기부금으로 윤지오의 숙박비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가부 산하기관인 여성인권진흥원이 송희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기부금을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히며 여가부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짐
- 결국 차관이 익명의 기부자가 본인임을 실토하며, 여가부의 셀프후원 경위가 드러남

▶ 여성안심귀갓길, 의원실 자체 현장점검!

- 동대문구·마포구 등 안심귀갓길 직접 현장점검 수행 : 범죄발생건수와 귀갓길 지정의 미스매치 실태조사 ☞ 동대문구 안심 MAP 직접 제작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통해 여성 대상 범죄 예방사업 관련 ‘연구용역’ 추진하고, 지자체의 범죄예방 사업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시할 수 있도록 제언

▶ 성범죄 형량할인 정보공유 인터넷카페 ‘성전카페’

- 성범죄자전문카페, 이른바 ‘성전카페’가 성범죄자 가해자들 간의 행동지침을 공유하며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여성단체에 기부내역 제출하고 감형 받았다는 사례 다수
- 실제 성범죄자 처벌 판결문에도 기부금을 반성으로 참작하여 감형사례 존재하며
-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감형 후 기부금 반환요청을 하는 등 악용사례로 인한 고충 토로. 여가부에 기부 악용 사례에 대한 부처차원의 실태조사와 동 사안에 대한 법무부 건의를 촉구함

▶ 지방소멸 원인이 가임여성인구수 기준?

- 여성을 출산도구화 시킨 정부기관 보고서 지적
- 일차원적이고 야만적인 정부 저출산 정책 질타

- 논란이 되었던 2016년 행정자치부의 ‘출산지도’와 유사한 지표가 고용정보원에서 활용 중임
- 고용정보원 ‘지방소멸보고서’(2018)의 인구소멸위험지수 산출방식은 20세~39세 가임여성인구수 만을 반영했음
- 인구 감소가 여성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정부 인식 질타, 일차원적인 저출산 정책 지적

▶ 6배 뺏기기!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 인터넷가 6천원인데 38,000원에 인쇄업체가 독점 계약 체결

- 여성가족부는 수년간 인쇄업체 A와 수익계약을 맺어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구매함. 인쇄업체 A는 의료물품 제작이 아닌, 시중에서 판매 하는 물품을 모아 단순 포장해 약 6배 비싼 가격으로 여성가족부와 구매계약을 체결함
- 응급키트 관리 현황과 업체 적절성 검토 촉구

김성원 의원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 기능 부재 지적

☑ 주요 내용

▶ 허위진술과 후원금 사기 의혹 윤지오의 숙소 비용 기부 허위 답변 지적

- 故장자연 사건 관련 허위진술과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휩싸인 윤지오의 숙소 비용을 김희경 차관이 익명으로 기부한 것을 지적
- 여가부는 수차례 국회 자료요구에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받은 익명의 기부금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기부자의 신변을 밝힐 수 없다고 허위답변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여가부 공무원에게 허위답변을 종용한 여가부 차관의 직권남용 의혹 제기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 소홀 지적

- 故한성옥씨 가족의 사망사건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을 지적
- 북한이탈 주민 자녀의 학교 이탈률 관리 구멍, 정부의 발굴 노력부족으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 청소년 감소 현황을 지적하며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과과정과 학교적응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 제고 주문

▶ 아이돌보미 학대사건 재발 방지 위한 처벌 강화 필요

- 아이돌보미 사업이 매년 6만여 가구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학대사건 발발원인은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과 재진입이 너무 쉬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
- 영국의 유사한 제도인 ‘차일드마인더’처럼 아이돌보미에 대한 엄격한 자격요건과 주기적인 관리감독 제도, 보다 엄격한 제재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

▶ 30~40대 여성 경력단절을 막기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 주문

- 대한민국 여성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30~40대 여성 경력단절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여성일자리·여성고용률 확대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대를 주문

김현아 의원

여성가족부, 꼭 필요한 곳에 지원 이뤄져야 - 문제점 지적부터 선제적 대응까지-

☑ 주요 내용

▶ 여성가족부, 윤시오 위법 지원과 국회를 농락한 차관의 위증논란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윤 씨를 지원
- 익명으로 진흥원에 기부한 사람은 여성가족부 차관인 것을 밝힘
- 숙소 지원과 함께 조력자(진흥원 직원)도 지원한 것으로 확인
- 윤 씨 지원 위해 위법행위를 산하기관(진흥원)에 지시 → 직권남용
- 여가부 김희경 차관, 경위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 위기임신임산부 - 청소년 미혼모 정부지원 요구

- 청소년 미혼모 시설을 전적으로 민간에만 의존. 인력부족문제 심각
- 시설규모 고려 없이 종사자 수를 정하고 있었음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별표3. 시설 유형 및 규모별 종사자의 수

- 현실에 맞게 시행규칙 개정과 예산 및 인력지원 요구

▶ 피해자만 지원하는 여가부의 딥페이크 포르노 대책, 예방책 마련해야

- 전 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중 25%가 K-POP 여자가수라고 지적
- 일반인 대상 범죄 발생 등 파급력 높으나 여전히 손 놓고 있어
- 여성가족부, 선제적 예방책 전무. 선제적 대응 위한 대책마련 촉구

▶ 여성친화도시 78%, 지정 이후 성범죄 증가 - 사업 전면재검토 필요

- 여성 1인가구 대상 성범죄 급증, 대책 마련 필요
- 성범죄 예방대책 중 여성친화도시 지정했지만 오히려 지정 후 성범죄 증가
- 관리·감독·감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문 정부의 안일한 여성·가족 정책 날선 비판과 대안 제시

☑ 주요 내용

▶ 육아 경험 살린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

-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 발생 이후 정부의 미흡한 대책 비판
- 시행규칙 상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최대 6개월을 1년으로 우선 개정하는 대안 제시
- 부실한 아이돌봄서비스 민원대응 지적, 엄정한 처리 요구
- 여가부 장관의 무성의하고 비전문적인 답변 질타

▶ 정부의 안일한 여성폭력(데이트폭력) 대응 비판과 대안 제시

-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신종범죄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안일한 대응 비판
-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관련 현장의 목소리, 개선방안 전달
- 데이트폭력법 부재로 인한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촉구

▶ 디지털성범죄 개선 촉구

- 디지털성범죄 만연한데 여가부의 안일한 대응 비판
- 아이 엄마가 개발한 몰래카메라 탐지카드 '몰가드' 소개
- 민간에서 일상적 몰카 대응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가부는 4-5곳 현장점검하는 일회성 이벤트에 집중하는 실태 질타

윤종필 의원

여성가족부, 예산·권한부족 타령 그만하고, 책임지는 태도로 나서야

☑ 주요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양질의 일자리, 처우개선 문제 해결해야

- 최근 5년간 빠르게 증가한 새일센터 구직자수 (48만 3천명)
- 취업자 수 증가임에도 취업비율 하락 (구직자수 증가속도 빠름)
- 새일센터 수료생 취업자중 3명중 1명은 기간제 비정규직 (질 개선 필요)

▶ ‘아하 청소년성문화 센터’ 동성애 옹호교육 점검해야

- 아하센터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옹호 교육, 매뉴얼 보급
- 청소년들이 성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고, 성적의사결정권 인정
- 여가부 양성평등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 교육내용 점검해야

▶ 여가부 게임중독 문제 해결에 협력하고 섯다운제 보완해야

- 청소년 보호법에 여가부가 게임중독 피해 청소년 지원하게 돼 있음
- 게임이용 실태조사 결과 10대 청소년 여전히 PC게임 이용률 높음
- 섯다운제 효과성 연구 통해 보완하고 논란을 줄일 필요가 큼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모바일 게임 이용 높아 섯다운제 검토 필요

- 유아동,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지속 확대되는 추세
- 모바일 게임 이용 청소년 증가, 심야시간 이용 증가
- 청소년 건강증진, 게임중독 예방, 섯다운제 효과 기대

▶ 국립청소년 직업체험수련원, 조속히 건립되어야 한다

- 청소년기부터 적성을 고려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 필요
- 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예산 확보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
- 2020년 설계비 확보로 수련원 건립에 박차를 가해야

여성가족부, 존재의 의미는?

☑ 주요 내용

▶ 양성평등 vs 성평등 표현, 혼란만 자초!

-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은 ‘양성평등’이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를 비롯한 다수의 정부 정책에서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혼재되어 쓰이고 있음
-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어 사용될 경우, 단순히 성 개념의 변화를 촉구할 뿐 아니라 결혼과 가족에 대한 정의도 바뀌게 되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향후 정책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촉구

▶ 신뢰성 없는 여가부의 성매매 실태조사, 젠더 갈등 부추긴다!

- 여가부가 3년마다 진행하고 있는 ‘성매매 실태조사’는 유흥주점, 마사지업 등 성매매 알선가능성이 큰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선정하는 등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어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지 못 하였음
- 그러나 여가부는 ‘한국 남성의 2명 중 1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다’ 등 신뢰성이 저조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임
- 신뢰도와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성매매 실태조사에 3년마다 수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 방식 개선 촉구

▶ 여가부가 군복을 만든다? : 실효성 없는 직업교육훈련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새일 센터의 교육이 실제 취업과는 거리가 먼 비현실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
- 실제로 지난 해 ‘워리어플랫폼 메이커스’ 교육과정을 위해 약 3천만 원의 국비가 투자되었으나, ‘워리어플랫폼 R&D 개발, 워리어플랫폼 디자인 개발’ 등 겉만 번지르르한 교육 계획과 달리 실제 수업은 ‘기초 봉제’ 위주로 이뤄진 바 있음
- 연간 18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취업지원 교육이 경력단절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편성 촉구

전희경 의원

권한 없다는 답만 되풀이 여성가족부 존재의 이유?

☑ 주요 내용

-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이사 갔는데 몰라 성범죄알림e 올리고 인근 주민에 발송**
 -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의 주소를 엉뚱하게 기재해 홈페이지와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한 경우가 최근 5년간 13건 → 여가부 경찰 준 자료 냈을 뿐 해명
 - 공개된 정보인데도 공유조차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민감한 자료를 운용하면서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주먹구구식 운용
 - 멀쩡한 시민을 성범죄자로 만들 정도로 허술하게 운영하는 이 제도의 보완은 물론 여가부 운용 방식에 대한 감사도 필요
- ▶ **디지털성범죄 이원화된 운영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즉시 발견 즉시 차단의 권한을 방심위로부터 디지털성범죄 심의건을 가져와야**
 - 올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요청을 받아 지원센터에서 인터넷에서 삭제한 피해 영상물의 월 평균 규모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함
 - 유포된 디지털성범죄 영상의 삭제는 피해자들이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신속하게 삭제처리가 이뤄져야 함
 -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디지털성범죄 삭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이원화된 운영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즉시 발견 즉시 차단의 권한을 방심위로부터 디지털성범죄 심의건을 가져와야 함
- ▶ **인쇄업체가 성폭력 키트 공급? 여가부 묘한 수의계약**
 - 여성가족부 성폭력응급키트 수의계약 받은 인쇄업체에서 응급키트를 하청업체에 넘겨 제작하고 박스만 바꿔서 해바라기센터 및 전담의료기관에 납품
 - 최근 3년(2017년~2019년)간 응급 키트 계약 현황 결과, 키트 조달은 의료기기 업체가 아닌 인쇄업체 A사가 전담
 - 여가부는 3년간 10차례 계약을 모두 A사와 체결(총금액 4억 5800만원)
→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
 - 의료물품을 인쇄회사가, 10차례나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은 유착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며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함



2019 국정감사 백서

발행일 2019. 11
발행처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편집·인쇄 (주)자루애드

자유한국당

<http://www.libertykoreaparty.kr>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02-6288-0200